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1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1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02-741-5363 (국선) 02-741-5364 (민선) 02-741-5365 (팩스)

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에 대한 조명이 원천이다. 4-3 50주년을 맞는 시점에 보다도 위민연 논의와 되고 있다. 3에 대한 논의가 예금된 6월말경 이후. 그전까지 기하는 '옛조치' '금기'였고, 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출된 민주화 열기는 4-3 을 본격화시켰고, 그 직 후준히 계속되고 있다. 법관의 꾸준한 노력에도 편 진실은 아직 일부에 다수 양민들이 규명도발 들에 의해 집단하살되었 는 3만 명 이상으로 추 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이다. 제주도의회기 에서도 1만1천6백83%에 해당하는 도발대에 의해 사 의 핵심쟁점인 미 의는 여전히 때문에 민과 하게 일부기 자료와 미국측 관련 구해 왔지만, 정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02-741-5363 (국선) 02-741-5364 (민선) 02-741-5365 (팩스)

특별 별장부터 내뺐다 재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의 핵심쟁점인 미 의는 여전히 때문에 민과 하게 일부기 자료와 미국측 관련 구해 왔지만, 정

인천운동사랑방

본질을 은폐하게 될 것이다. 가령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국내의 정치, 경제적인 불만을 회석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민화협, 제2건국위원회와 같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포섭구조를 통해서 민간단체들을 적극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만, 늘 결정권은 정부에서 쥔 것이다. 반관반민의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고, 대중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의사(擬似) NGO 정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들 반관반민의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배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식 인권의 길은 인권이라는 기만수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배제시켜 가는 전략이다. 자유권 분야에서의 일부 인권개선에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 위에서 그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이뤄지면서 자칫 복잡한 인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 관점에서 인권을 수단화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인권을 인류 최고의 가치로 실현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 인권운동이 지금까지 협애한 사고들에 묶여 관성적 방식의 인권운동에 연연한다면, 논의의 주도권만 아니라 상황 전개의 주도권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 인권의 대원칙인 보편성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이때, 인권운동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한 채 주변화되고 왜소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 구조,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들에 보다 근본적인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간인권운동이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자본주의 구조에서 비롯되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심화되는 민중의 고통에 눈을 돌려야 하며, 고통 받는 대중들에게 인권운동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로 결과되는 불평등과 부자유의 상태에 대해 인권의 가치로 본질적 문제 제기를 해 들어가야 한다. 전통적인 보수적 인권관을 넘어서 진보적 인권관, 급진적 인권관의 형성을 통해서 인권논의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체제와 사회구조의 희생양인 고통받는 대중들의 '벗'으로 인권운동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인권운동의 주제를 새로이 설정하고, 그 주제들에 맞는 노동, 여성, 환경, 사회적 약자들과의 구체적인 연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인권운동이 분절화되어 있는 사회운동을 새로이 엮어내고, 통합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인권운동은 '주변화 추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임무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행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저항운동이 시작되었다. 인권운동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대원칙에 입각해 이 저항운동에 연대하는 것이 새로운 천년을 맞는 역사적 소명일 것이라 믿는다.

(1999. 2. 18.)

인권하루소식

98년 7월

(제1157호 - 제1178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1일(수)
제 11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한국 여성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된다. 오는 7일부터 뉴욕에서 회의를 갖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94년과 올해에 각각 제출한 3, 4차 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제출한 민간보고서(Shadow Report)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여연은 "98년 이후 여성의 현실은 정부보고서가 언급하는 상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여성고용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여성관련 예산문제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 전달기구 문제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개선되지 않은 여성농민 현실 6개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고용에 있어 남녀차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연은 보고서에서 "IMF 프로그램 아래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확보해온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실직당한 남성들에게 여성의 위안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위기 아래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그 중 여성노동자를 우선적 정리하고 대상자로

선정해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연은 △여성노동자의 62.7%가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연은 또 "정부의 여성정책이 성별 역할분업이라는 방향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하면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주변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밖에 민간보고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에 있어 신고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소 기간을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의 주축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심의한 이후, 한국 정부에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적규정 꼭시않겠다"

진보단체 탄압에 공동대응

최근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 중앙간부 6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울릉도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단체에 대한 이적 규정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후 2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정치연대, 국민승리 21, 서울진보청년회 등 각계 사회단체들은 대표자 회의를 갖고 "김대중 정권이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에 대비해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번 진보민청 중앙간부의 구속에 대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현재 이적단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진보민청 강령, 규약'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반박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진보민청이 해왔던 대중사업(한글학교, 지역신문, 문화강좌, 법률상담)이 갖는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진보민청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각계의 선언, 서명 운동도 함께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대위는 7월 4일 오후 3시 탑골공원에서 민중운동단체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 바로잡습니다 ◆

30일자 '연행된 유가족' 기사에서, "김민정 씨는 경찰로부터 정신적인 성적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진술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불심검문과 인권지침」 소책자 판매

불심검문에 관한 행동요령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연행, 구속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책자입니다.
· 가격 : 2000원 / 문의 : 이주영, 이영태 (741-5363)

<인권하루소식> 98년 6월분 총목차(1137-115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37	6/2	1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2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탄압·불법검문 대응/유가족, "희망 보았다"- 6월부터 2차 캠페인 전개/주간인권흐름(5월 25일-5월 31일)
		3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오창익(전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138	6/3	1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12명 대공분실 연행
		2	'유인물 배포' 이유 해고- 한화 계열 (주)오트론, 부당노동행위 관쳐/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3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서준식)
1139	6/4	1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도원동 백석호 씨 의식회복, 화상경위 실마리 찾을 듯
		2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140	6/6	1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공판 진행
		2	<국제인권소식> 아프리카-외채에 눌린 생존권/이적표현물 혐의 무죄, '미래통신' 구속자 석방/〈현장스케치〉 재미동포들의 명동, 모란공원 방문
1141	6/9	1	길가던 대학생, 횡당한 구금-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2	해산하는 대열, 등뒤에서 덮쳐- 경기도경, 평화집회 대학생 폭행/한소리회 후원모집/주간인권흐름(6월 1일-6월 7일)
1142	6/10	1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반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2	용산구청 앞의 어린이 노숙자, "구청 아저씨들 제일 무서워요"/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차별·소외' 시정 촉구/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중요공원 집회
1143	6/11	1	신입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실업대책 사각지대/무단침입에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 대상자 김용규 씨들
		2	택시노동자 한광로 씨 분신, 회사측 직장폐쇄에 항의/"재발개혁 제일 미흡", 교수 1백여 명 설문 조사/전면적 민주개혁 촉구, 6·10 11주년 기념대회/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 등 시한부
1144	6/12	1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현상금 3백만원 - 민가협, 이근안 수배
		2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후 1백58명 구속/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대전성모병원/〈만화사랑방〉 버스 안의 CCTV
1145	6/13	1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들 안기부 항의방문/간첩 불고지령의 무죄, 함운경 씨 항소심
		2	기혼여성 구직자 증가, 해고·납편 실직 등 이중고/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노점상 4천명 집회/〈국제인권소식〉 멕시코- 정부군, 사빠띠스따 참공
1146	6/16	1	과하,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2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에바다농아원생 후원회원 모집/주간인권흐름(6월 8일-6월 14일)
		3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박대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147	6/17	1	전자주민카드 물밀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예정
		2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인천 성모자에 병원 의료과실사 논란/에바다 사태 새 국면-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동티모르 인권유린 여전, 수하르토 물러나도 무력진압 계속돼

<인권하루소식> 98년 6월분 총목차(1137-115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48	6/18	1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결핵환자, 명동성당 농성 돌입/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서울대, 독립영화 상영-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2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유인물 배포로 해고/민노총 실직자 돕기 캠페인/한국성폭력상담소, 온라인 성폭력 상담소 개설
1149	6/19	1	의료노동자 수난시대-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만화사랑방〉 전자주민카드
		2	구사대 동원한 가톨릭 사업장- 대전 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 구타/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에서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주장/김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벌금제 개선 지시/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1150	6/20	1	86차 ILO 연례총회, "아동노동 종식 추진"/유가족 고행 계속돼, 기무사 항의 방문/〈광고〉불심검문 피해자 항의집회
		2	결핵환자, 국가 관리해야- 국립결핵병원 민영화 방침, 복지 축소 우려/〈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인권운동가의 정치적 실종, 영국-최악의 오십
1151	6/23	1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IMF희생자 위령제- "사회적 타살 중단하라"/〈광고〉 불심검문 피해자 항의 집회
		2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너는 그렇게...' 저자 이용호 씨/주간인권흐름(6월15일-6월21일)
1152	6/24	1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 브리핑 방해/〈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2	<인터뷰〉 엠네스티 방한단,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새로나온 책〉 『언론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지음)
1153	6/25	1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다원건설, 불법용역 드러나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2	국가인권위 토론회- 엠네스티 관계자,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노숙 농성 잇따라 비용바다, 질병 고동 호소/양심수 군면제 요청- 양군모 "이중수감" 주장
1154	6/26	1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교배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2	<인터뷰〉 염규홍(출판사 사람생각 편집장) 씨 -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요약 북한 "심각한 식량부족,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 계속되는 공개처형"
		3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요약〉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1155	6/27	1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국제인권소식〉 영국-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2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제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만화사랑방〉 경찰결격의 황포
		3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1156	6/30	1	"차별에 맞서 하나로"- 동성에 모임, 전국적 협의체 구성/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광고〉 감옥 인권실태를 분석·연구할 전문인력 모집
		2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주간 인권흐름(6월22일-6월28일)
		3	<인권시평〉 끈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박천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일(목)

제 11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제법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을 불가피하다"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특히 서약 이후에도 담당 검사 서약서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계획이다.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대해 법무부는 "전향제도로 인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체제·질서와 법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양심의 자유'를 더욱 교묘하게 침해하는 제도로 풀이된다.

기존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대다수가 확산범인 이상,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준법서약) 자체가 사상전향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미서약(비전향) 양심수들은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특히 현재 30-40년 이상 복역중인 비

전향장기수들 가운데 앞으로 시행될 준법서약에 응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자'라는 낙인이 더해져 사회복귀가 영원히 차단될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양심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대신해 '준법

서약'을 받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인간의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제도도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전향제도를 무조건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다른 정치이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사상전향제도를 사실상 강화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을 계속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 발족

진보적 사회운동의 공동네트워크가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1일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진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대표 김진균)는 "기존의 상업통신망이 국가기관의 검열과 감시,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가와 자본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네트워크 건설"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올 11월 정식 출범할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이윤추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민주적 네트워크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대안적 공동체로 기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노동, 여성, 학술,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의 전 영역을 망라하는 각 부문별 네트워크를 사회단체 및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또 "PC통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PC통신과 인터넷 환경을 동일하게 해, 기존 통신망에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계 사회단체 인사 1백20여명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이날 발족한 진보네트워크센터(추)는 7월부터 1인 1구좌(3만원)를 기본으로 하는 1만 발기인 모집에 들어가며, 11월 진보네트워크 정식 출범까지 '지역 네트워크', '부문네트워크', '인터넷 방송국'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지역 순회 설명회, 사회단체 활동가 교육을 할 예정이다(문의: 3486-6058).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 토론회

지난 3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회장 박천웅 목사)는 '아시아 인권운동의 동향과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국제조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운동의 동향과 전망을 점검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세계화'와 '비민주적 억압체제'라는 이중의 굴레를 안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이 인권운동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했다.

박석운 씨(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해 "유일한 구심점인 [아시아이주노동자

센터] (홍콩)도 아직까지는 활동이 미약하고, 그밖에는 언급할 만한 네트워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주노동자조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 전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설정 △출입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에 대한 국제적 감시단 조직 등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가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외노협은 9월에 있을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의제로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문제를 제기하고, 12월에는 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지난 3월 7일 백운산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미군기

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1일 '미군기지 환경오염대책'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기지의 보상책임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SOFA) 4조 1항의 '반환할 때 시설과 구역을 제공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기지내 시설이나 용도변경의 토지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씨는 미군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와 주한미군환경기준(EGS)과 관련 "환경조항이 완전 무시된 SOFA가 환경지침을 좌우한다"며 "EGS는 군사작전에 어려움을 줄 때와 환경복구를 위한 돈이 없을 때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미군 마음대로 악용이 가능하며 후자는 '적자'라는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조항"이라며 이는 한국민을 속이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와 전망"

한마당 "산재노동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 때: 7월 2일(목) 오후 3시 · 곳: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산재노동자 문승민 10주기 기념사업조직위원회

□ 한국여성전화연합 15주년 기념 전국대회

· 때: 7월 2일(목) 오후 2시 · 곳: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

· 주최: 한국여성전화연합 (269-2962-5)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조직 개편대회

· 때: 7월 2일(목) 오후 2시 · 곳: 한국기독교교회관(종로5가)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763-9563)

□ 미 8군 매디슨 기지 백운산 기름유출 원상회복 촉구대회

· 때: 7월 3일(금) 오후 2시 · 곳: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744-1211)

□ 불교 장기수후원회 창립식

· 때: 7월 4일(토) 오후 3시 · 곳: 조계종 총무원 1층

· 주최: (가칭) 불교장기수 후원회 준비위원회 (720-6763)

□ 우만연 정기 전시회 "만화는 죽었다...만화야 품짝!"

· 때: 7월 1일(수) - 7일(화) · 곳: 인사동 덕원갤러리

· 주최: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한국타이어(주)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김동진 기자(대전 국도일보)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김용직 판사는 "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지만,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97년 월간 [말] 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고 고발했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2백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3일(금)

제 11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과 4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16일 1심 재판부(부산지법 형사합의4부, 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이들의 간첩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뚜렷한 동기

가 없으며, 범행의 단서도 수사기록상 자백뿐이지만, 전체적으로 자백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정재성 변호사는 “간첩사건의 경우, 대충 피고인들의 자백을 받아 기소한 뒤 유죄를 인정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관례를 세운 것”이라며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조작’ 의혹에 대해 “감압수사를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조작”이라며,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일본 아현연수를 갔던 동아대생들이 노동당에 입

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거없이 감압적 수사에 의한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작의혹의 근거로 △공작금을 받았다는 경찰진술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좌가 없었던 점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으나, 입당 원서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한 진상규명대책위는 “한 피의자가 기마자세에서 다리와 목덜미를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배윤주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적 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동아대 자주대오)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화 사랑방

이동수



불심검문, 비켜!

「불심검문과 인권」 소책자 판매

불심검문의 위법성과 사례별 대응요령, 연행이나 구속시 대처요령 등 불심검문의 모든 것을 담은 안내서.

· 가격 : 2000원 / 문의 : 이주영, 이영태 (741-5363)

사범연수생 충격적 고백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

사범연수생이 검찰 내 가혹행위 사실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 김재구 검사의 사범연수생 천 아무개(35) 씨는 지난 달 4일 검찰직원 박 아무개 계장이 조사 받던 피의자가 ‘마음에 안된다’며 구두를 벗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2시간 동안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천 씨는 또 박 계장의 폭행에 항의하다 자신도 구타를 당했으며, 이를 막던 연수생 조(28) 씨도 ‘건방지

다’며 박 계장과 신 계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계장이 지난달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받던 피의자에게 ‘대답을 기본 나쁘게 한다’며 구둣발로 차 의자에서 넘어뜨리는 등 한달여 동안 수십 차례의 가혹행위를 일삼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천 씨는 “동료 연수생들도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일부 직원들은 고문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폭행하는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 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후 공식적으로는 전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천일세력이 재등장하면서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검거된 좌익수들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함께, ‘탈퇴’나 ‘탈당’이라는 형태로 사상전향을 강요받았다.

한국전쟁중에는 역시 탈당 혹은 투항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전향강요가 있었으나 형이 확정된 좌익수에게 형무소에서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는 형무소의 일상 그 자체가 일상적으로 변질을 강요하는 고문현상이었다고 전해진다.

휴전협정 성립 이후 몇 개 형무소에서 좌익의 지도급 위치에 있었던 정치범에게 ‘진술서’ ‘자서전’이라는 이름의 전향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형무소 당국이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충성여부를 묻는 사상동태조사를 실시, 그 대답에 따라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했다.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였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직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했는데, 이때의 수가 모두 8백명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73-74년 전국에서 감행된 살인적 고문과정을 거쳐 비전향 좌익수의 수는 2백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당시 정부가 상당히 높은 정책수준에서 전향공작 전담반을 구성하고, 몇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전향을 강요하며 고문을 했던 것은 이 때가 좌익수들의 만기출소가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70년 중반까지의 전향공작은 좌익수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대북비판 등)의 전향을 요구했으나, 이후 반유신투쟁이 거세지면서 지식인들의 구속이 늘자 전향의 내용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최근까지는 ‘준법서약’ 수준의 내용만으로도 전향을 인정해 왔다. 그리고 98년 7월 1일 정부는 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 등으로 확대되자 이들을 폭행한 수사관만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해 창원지검 연수생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는 다음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자식의 석방을 기다릴 것만 같았던 양심수의 어머니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탑골공원 앞으로 나왔다.

‘준법서약제도 반대’를 주제로 열린 235회 목요집회. 집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이번 전향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론 또다른 전향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지버리지 않는 표정이었다.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은 “반인권적인 제도로 지탄받았던 전향제도를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새로이 준법서약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라는 준법서약제도는 이전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우리는 전·노 전직 대통령과 경제를 망친 재벌인사들이 반성문을 쓰고 나왔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양심수들에게만 반성을 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반성문을 써야 하나?”며 “오히려 이들을 수십 년 씩 가둬놓는 높은 사람들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가협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양심수가 4백37명으로 이중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전체의 71.8%인 3백14명에 이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4일(토)

제 11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절도죄로는 사상 최고의 감옥살이인 25년형(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 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 요지 2면 게재>.

1시간 30여분에 걸친 최후진술 과정에서 조 씨는 “감호소의 생활은 징역보다 더 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엄정독거에 처해진 것은 박영두 씨 살인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 씨는 또 “1년마다 바뀌는 소장들에게 ‘엄정독거’에 처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김신웅(59·청송교도소 수의사, 기독교 장로) 씨는 “아픈 환자의 똥을 닦아주는 등 조세형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재소자들이 감화를 받고 인격적 변화를 일으켰다”며 “40~50만원의 영치금을 넣어주었는데, 그 돈을 어려운 재소자들에게 다 나눠준 일도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증인신문에 이어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조 씨를 재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상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조 씨는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 육체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그가 부자집을 텅 비는 이미 지난 15년의 징역살이로 다 응징됐다”고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7월 31일 오전 10시, 서

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지난 2일 「산재노동자문송면10주기 기념사업조직위원회」(공동대표 양길승 등)와 민주노총은 88년 7월 2일 15살 어린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고 문송면 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련제도 개혁 △연구소와 상담센터 개설 △노동조합 내 산업안전부 건설 등을 산재추방운동의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재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인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산

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88년 하루 5명에서 97년에는 하루 1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산재발생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정근(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국장) 씨는 “안전규제가 완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산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정리해고의 우선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되지 않아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아픈 몸으로도 일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산재추방운동을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4인 이하 중소기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노동자는 87년 14만2천6백여 명에서 97년 6만7천여 명으로 줄었으나, 이중 사망자는 1천7백61명에서 2천7백42명으로 무려 56%나 증가했다.

고문경관 전력질주 혼비백산

법원, “이근안 소재 탐지” 명령

이근안 등 고문경관 16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재판이 3일 서울고법 302호실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박승하 부장판사)는 홍성균(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 씨등 법정에서 출두한 전·현직경관 6명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심문을 마쳤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경관들은 시종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전력질주하며 법정 밖으로 달아났다.

이번 재정신청 신청인인 김성학 씨는 “87년 당시 경기도경 내에는 고문에 반대하는 경관도 있었는데, 그가 기억해 줬다.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고 충고하면서 고문경관들의 이름 하나하나 가르쳐줬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는 “나를 간첩으로 기소한 검사가 고문경관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따구명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날 때까 지 전기고문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도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은 이근안 등 고문경관들에 대해 소재탐지를 명령했다. 다음재판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을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검사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1/3이 독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엄정독거와 일반독거를 혼재시킴으로 본질을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청송교도소 수용인원 1천·1천1백명 가운데 70%는 낮에 작업을 나가는 ‘출역수’들이고, 30%는 일이 주어지지 않은 ‘미지정’들이다. 출역수들은 전원 흔거를 하고 있고 미지정도 대부분 흔거를 하고 있다. 미지정 재소자 가운데 1/3(1백명 미만)만이 독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독거라 불리며, 이는 오히려 재소자들이 원하는 바다.

나는 15년간 엄정독거를 한 까닭에 청송교도소의 건물이 어떠한지 교회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노태우 정부의 ‘법치주의의 전쟁’ 때 강력법 2백여 명이 청송교도소에 들어와 엄정독거를 당했는데, 1년에 6명이나 자살하고 정신이상자가 속출했다.

15년간의 징역을 마치고 감호자 신분 이 되어 청송제1감호소로 이감됐다. 그런데, 감호소측은 5사동에 감방을 따로 만들어 나를 혼자 수용했다. 감방의 철창 뒤에는 철관을 댔고, 최신 CCTV를 설치했으며, 나만의 전용운동장을 만들고 밥도 교도관이 직접 갖다주는 등 철저히 다른 감호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감호소의 생활은 징역보다 더했다.

엄정독거 근거대라

1년마다 바뀌는 청송교도소의 소장에게 엄정독거의 근거를 대라고 항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조세형, 네가 서울구치소에서 도주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청송에서까지 도주하려고 3일간 난동을 부린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83년 내가 청송으로 이감됐을 때 치질에 걸려 있던 70세 노인이 더운 물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했다가 손자뻘되는 교도관에게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 일이 있었다. 또 사동 내 4미터 폭의

통로에는 양쪽으로 50센티미터 너비로 노란 선을 그어 놓았다. 거기선 네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첫째, 재소자들은 무조건 좌측통행을 해야 하며 둘째,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하고 셋째, 재소자들끼리 통로에서 말을 주고받아서 안되며 넷째, 노란선을 벗어나 걸어서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어길 경우엔 무릎을 꿇고 가차없이 얼굴과 머리를 난타하는 것이 예사였다. 다시말해, 청송은 생김때부터 폭력, 오로지 폭력 뿐이었다.

치외법권 지대, 오로지 폭력 뿐

그러나 내가 수용된 7사동은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보안과에서는 7사동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7사동에 수용된 재소자 가운데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폐쇄공포증에 걸려 있어서 방안에 갇혀 있을 때마다 자해나 발광을 해 수차례 보안과에서 두들겨 맞곤 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오면 또다시 소란을 부리는 악순환이 계속 되자 교도소측은 안중근에 대해 두 손을 들었다. 이후 교도소측은 안중근에 대해서만 방을 개방해 안중근은 종일 복도를 자유로이 왔다갔다 하고 밤이 되어야 들어가 자곤 했다. 교도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희생양을 찾았고 그가 바로 박영두였다. 박영두는 신체검사서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이후, 매일 의무과에 약을 타러 다녔었다. 그런데 84년 10월 12일 그날따라 교도관들은 박영두를 의무과에 보내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다. 그때문에 박영두가 교도관과 옥신각신했고, 그것이 함정이었다.

교도관 박승호는 “담담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며 트집을 잡았고, 오후 6시가 되자 교도관들이 물러와 박영두를 수감에 채워 데려갔다. 그때 안중근도 함께 끌려갔다. 1시간 30분 뒤 안중근이 돌아왔는데, 6·7명의 직원이 박영두를 수감과 포승으로 손·발목을

묶고 온몸을 활처럼 휘어버린 채 매고 돌아다녔다. 안중근은 박영두가 세 차례나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박영두는 활처럼 묶인 상태로 방에 넣어졌고, 들어가자마자 “죽겠습디”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이를 묵살했다. 그후 박영두는 “차라리 죽어라”며 질규했고, 밤 11·12시 무렵부터는 “어머니, 나 죽습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다 사망했다.

동료 죽음을 고발하러 3일간 난동

박영두의 시체가 밖으로 나간 뒤, 7사동 재소자들은 사건이 은폐되면 실력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립과 학수사연구소는 박영두의 시신을 ‘심장마비’라고 판정했고, 검사는 교도소 말만 듣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박영두의 시신은 가족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화장됐고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교도관들은 “입 다물어라. 그러면 징역살이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나는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 편한 징역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칼을 물고 죽겠다”고 하니까 교도관들은 “자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나를 58일간 물품창고에 격리시켰다. 이후 7개월간 이중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순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

7개월 뒤 원래의 방으로 복귀된 뒤, 교도관들은 7사동의 방을 다 개방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2개월 동안 ‘난동’을 준비한 뒤, 85년 9월 19일 7사동을 빠져나와 8사동에서 ‘난동’을 시작했다. 3일 간의 난동 후 나는 ‘이 정도면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거기서 박영두 살인사건을 고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형사입건을 시키지 않았고 그때부터 엄정독거가 이루어졌다.

이번 재판이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별 관심이 없다. 나는 이번 재판이 청송교도소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털어놓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장이 다시 감호소로 돌아가려고 판결하더라도 나는 미련을 갖지 않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7일(화)
제 11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8·15 특사를 앞두고 양심수 석방운동이 또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박승현, 문규현 신부, 사제단)은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기도회를 개최했다.

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과거 50년의 역사 속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안세력의 경쟁적 수사와 사건 만들기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적용 기준으로 1백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양심수에 대한 전면적 석방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제단은 지난 1일 법무부의 전향제도 폐지와 준법서약제도 도입을 진일 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한다면 8·15 특사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과 제반 약법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년 동안 전향서를 거부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에게는 각별히 배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제단은 또한 “8·15 특사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경우, 정부의 개혁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사제단은 앞으로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 각 성당에 걸고, 교구 단위의 연

속적인 양심수석방 기도회 개최, 엽서 보내기, 양심수 면회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6일 “김대중 정부 들어 특별사면된 여성양심수는 단 1명뿐”이라며, “이제는 남은 12명의 여성 양심수들도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정부의 준법서약제 도입과 관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이 개정 또는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양심수는 5년9개월 제수 감되어 있는 함정희 씨와 변의숙 씨 (이상 중부지역당 사건)를 비롯해 모두 12명에 달한다.

교회여성연합회는 13일부터 사흘간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기도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석방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재천 씨 구명운동

각계인사 서명 활발

지난달 18일 발족한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대표 송기인, 신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재천 씨 구명운동에 각계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관련기사 6월 23일자).

현재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조선족 전재천 씨는 지난 96년 <페스카마호>에서 한국인 선원들의 선상 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국인 선장을 비롯한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확정을 받았다. 이번 구명운동은 캠페인 형식의 대국민 서명운동이 아닌 각계 사회·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서명에 참여한 인사는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 감창록 부산대 공법학 교수, 최영도 민변 회장, 권영길 국민승리 21 대표,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이창복 전국연합상임의장,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 배은심 유가협 회장,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등 1백4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는 13일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관련글 2면

.....주요 공판 안내

- ▶ 7일 (화)
 -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속형
- ▶ 8일 (수)
 -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 ▶ 10일 (금)
 - 심정용 외 2(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형
 - 이봉재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 문은주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 인미숙 (국보법)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요약> 사형수 전재천 씨의 편지 “지난날을 돌이키며 반성합니다”

현재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전재천(수감번호 6501) 씨에게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 대표 정귀순 씨가 꾸준히 면회를 가고 있다. 전 씨가 지난 6월 14일 정귀순 대표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발췌·소개한다(편집자주).

저는 새삼 이곳에서 고향과 친인척 그리고 자유를 잃은 고달픈 사람들과, 서로 이해심으로 돕고 사랑하면서 진정 이웃사랑의 따사로움을 느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빈곤하게 살아서인지, 남들이 입다 버리는 양말이나 속옷들을 보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주워, 깨끗이 씻어 두었다가 재활용하곤 합니다. 그중 새것은 대부분 면회오지 않는 어려운 재소자들이나 외국인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 순간 진정 나눔의 기쁨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년 6월이 되면 항상 우울해지고 착잡해 지곤해요. 6월 10일이 바로 제 아들이 교통사고난 날이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놀라서,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힙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온 날도 역시 10일 이구요. 그리고 오늘을 제가 '페스카마호'에 승선한 날입니다. 그때는 큰 희망을 가슴에 품고 출항했는데... 왜 모든 불행이 이번 달에 겹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이 초조해지며 불안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과 미안함으로 제 자신을 원망해 왔습니다. 왜 내가 내 형제, 친척 그리고 처자식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여사님을 비롯한 좋은 분들을 고생시켜야 하는가를. 저는 지금도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반성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못된 인간인가? 내 사상이 이렇게 변질되었던 말인가? 내가 정말 살인마인가? 등등이 머리 속에서 한시도 떠나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살인마로 극형에 처해있지만, 당시 살인 현장을 못 봐서인지 지금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당시 배에 사람이 없어서였음을 느끼면서도 설마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다. 사실 저는 지금도 꿈만 같어요.

요즘은 자꾸 어머니와 아들이 꿈에 나와요. 이렇게 꿈에서 뵈고 나면 며칠씩 우울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군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항상 마음 졸이며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임종에도 직접 배웅 못하면 그런 불효자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지금 저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 여섯 식구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 집으로, 큰 딸은 00에 있고 둘째 딸은 00에 있고 아들은 동생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깨져 버리고 현재는 가정이란 두 글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편한 심정을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관적인 생활태도를 갖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며 밝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주/간/인/권/호/름 (9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 ◆ 6월 29일 (월)
 -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 30여명 '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에 항의하며 과천정부종합청사와 명동성당에서 시위/5개 은행 퇴출로 직원 9천6백4명 실직 위기
- ◆ 6월 30일 (화)
 - 용산경찰서, 생활고를 타하며 생후 19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김희원(24)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기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 7월 1일 (수)
 - 박상천 법무장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 건의하면서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행정자치부, 5·7급 공무원시험에서 현행 15%로 적용되던 여성채용목표제를 99년부터 20%로 상향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까지 확대키로/서원대생 30여 명, 재단퇴진 및 교수·학생 징계 철회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 7월 2일 (목)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자백의 객관성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에게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정폭력처벌법 첫 적용, 머느리 때린 시부모 입건/한나라당, '사상전향제 폐지' 강력 비난/문화관광부, 하반기부터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키로/나이지리아 군사정부, 야당 지도자 모슈드 아비올라 등 모든 정치범 석방키로
- ◆ 7월 3일 (금)
 - 북한 옥수수수기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순권), 비료 1천톤 북한에 보내/경원전대 정당화를 위한 교수 대책 위, '최원영 이사장이 등록금 1백10여 황령했다'고 주장/울산지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 청구/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부산지하철 노조원 5백8명 무더기 연행/서울고법 형사2부, 이근안 등 고문경관 3명에 대해 소제탐지 명령/노조활동 방해한 사용자 첫 구속/한나라당,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 생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거사 청산 위한 공동문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 ◆ 7월 5일 (일)
 - 노동부, 정리해고 계획 신고한 기업이 3일 현재 51개사 6천6백29명이라고 밝혀/경희대, 99학년도부터 해외입양 및 고아 출신자 위한 특별전향제 도입하겠다고/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기준 통일키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8일(수)

제 11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최근 정리해고에 이어 계약고용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어, 또 다른 고용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대우그룹 계열의 대우투자자문은 국내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전직원 계약고용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여러 기업에서 직능별, 또는 사업 부서별로 계약제를 도입해 오긴 했으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계약고용을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투자자문은 현재 전직원 33명과 2년간 개별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신규로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대우투자자문은 "앞으로는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급여도 내년부터 상하 15%까지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약고용제는 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계약고용제란 개별 노동자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성과급을 기반으로 한 연봉제나 임시고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94년 두산그룹이 처음 실시한 연봉제의 경우, 현재는 삼성과 SK 등을 비롯한 상당수 대기업들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시행, 확산되고 있다. 97년말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백인 이상 사업장 5천7백54개 가운데 연봉제를 시행하는 곳은 2백5개에 달한다. 이는 96년에 비해 118%나 늘어난 규모다. 이에 비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6백30만 명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임시고용은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다. 이러한 계약고용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연봉제를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도 매우 높으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진다.

실제로 IMF체제 이후 연봉을 터무니 없이 깎이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계약고용제가 갖는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계약고용제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과열시키고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조성한다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식 실적주의와 계약주의를 기반으로 한 계약고용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충수업 일방결정 반발

대전 교사들, "관료행정" 비난

일선교사들이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보충수업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여름 보충수업 시간을 독단적으로 정하자 "이는 학교장들의 비민주적인 관행이며 전형적인 관료행정의 표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역의 중·고등학교 학교장들은 오는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간을 학교장회의를 통해 중학교 60시간, 고등학교 80-120시간이라고 정한 뒤 교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교사들은 "여름 보충수업에 대한 시행 여부는 학교단위의 교무회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에서 심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기구에 불과한 교장단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비민주적인 횡포"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30일 교육개혁시민연대(교육연대)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원흉으로 규정짓고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교육연대는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경직시키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그 동안 많은 학교가 보충수업비중 관리수용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전용하는 등 금전비리를 낚아 왔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담담교사들의 간식비와 식사비, 수고비 등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높았다.

성모병원노조 한판 승리

노동청, 노조출입보장 약속

그 동안 해고자들의 집단폭행과 성추행 파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대전성모병원과 노조원들의 싸움에서 대전지방노동청이 일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간부들의 병원출입을 폭력으로 막던 병원측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이 '산별노조간부의 노조출입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것.

대전성모병원은 지난해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에 대해 조직적인 탄압을 가하는 등 대표적인 노조탄압사업장으로 꼽혀 왔으며, 용역 강패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지난 5월 7일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 11명의 재판이 열렸다.<관련기사 5월 8,9,13일>. 이날 재판에서는 11명 중 박효근(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술했다. 다음은 이들의 모두진술을 요약·발췌한 것이다.<편집자주>.

◎ 박효근(국민대 중문 86학번)씨
지난 5월 7일 연행될 당시 지하 술집에서 10명 정도가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은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연행했다. 단지 무슨 현종이 같은 것을 들고 "당신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체포 당시 내가 무슨 이유로 체포냐고 항의하자, 그 순간 바로 경찰은 나를 향해 정면으로 권총을 겨누었다. 그 당시 같이 있던 10명중 반이 여성이었는데 우리들이 모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은 곧바로 공포탄을 발사했다.

우리가 지금 재판정에 선 것은 바로 경찰에 의해 침투된 프락치를 이용한 함정수사 때문이다. 프락치 공작은 예전에 파시스트국가나 독재정권이 흔히 사용하던 수법이었는데 이미 50년 전에 미국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그런 나에게 "그러면 더 많은 형을 받을 것이다", "진술거부는 곧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너희

는 골수 IS다." 등의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다.

◎ 주수영(덕성여대 92학번)씨
체포 당시 난 발목 부분의 골절로 허벅지까지 기브스를 한 상태였고 현재는 무릎까지 하고 있다. 구속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잠을 못이루는 날이 많았다. 의사가 잘못하면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나 불안했지만, 경찰은 그런 나를 끌고 와서는 이틀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조사를 했다. 기브스한 다리가 부어 올라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고 2시간만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받았다.

또한 구치소에서는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좌변기에서만 대·소변이 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한 방에서 4일간을 지냈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다른 곳에서 해결하게 했지만 소변은 방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결국 소변은 낯선 아줌마들이 양 거드랑이를 붙잡은 상태로 몸이 들려진 채로 해결했다.

구치소에서는 팔레를 직접 해야 했는데 한쪽 발로 서서 한 손을 벽에 짚은 채 한 손으로 팔레를 해야 했다. 내가 있는 방에서는 다리가 아파 눕고 싶어도 자리가 좁아 내가 누우면 같이 있는 사람들과 실경이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나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법원으로 다시 구치소로 계속해서 끌고 다녔다. 결국 보지못한 어머니가 직접 휠체어를 마련해 주었다.

어느 날은 오랜 조사로 다리가 붓고 저녁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울기도 많이 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휠체어에 2시간이 넘도록 앉아만 있어 너무 힘이 들었고, 이것은 고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에게 묵살당해야만 했다. 결국 고통을 참다 못한 나는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와 책상앞 바닥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열사들 명예졸업장 수여 보류

서울대, 의견수렴 미진 이유

민주화 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학교측이 고 이재오(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 씨등 이 학교 출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를 보류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측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지난 5월 '86년 신림사거리에서 분신자살한 이재오 군등 4·19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모든 학생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스민주화운동과 학생활동의 역할에 관한 역사적 조명 및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학내의 광범한 의견수렴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당시 정치학과 교수들은 "이들의 희생은 진리와 정의의 추구라는 서울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몸소 실천한 고귀한 희생이었다"며 "명예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늦게나마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수들의 건의에 이어 정치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 탄원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번 대학본부측의 결정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자들에 대해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형태로 이들의 희생과 공적을 기려왔으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62년 4·19희생자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이래, 아직 명예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명예졸업장 수여문제와 관련, 고 박종철(서울대 언어학과) 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전반적인 명예회복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졸업장은 별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la.net/~rights

1998년 7월 9일(목)

제 11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동시장 내에 자리잡아 오다 지난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거쳐 마침내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지급받으면서도, 실제 근무는 다른 사업장(사용업체)에서 하게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건물청소원, 수위, 각종 보조업무 등 총 26개 업무를 적용대상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근로자가 이들 업종 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자파견제는 노동계의 반발

불심검문, 비켜!

「불심검문과

인권」소책자 판매

불심검문의 위법성과 사례별 대응요령, 연행이나 구속시 대처요령 등 불심검문의 모든 것을 담은 안내서.

·가격 : 2000원

을 의식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쟁의중인 사업장에는 대체 업무를 위해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리해고 후 2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했으며 △파견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업체·사용업체·파견노동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2년을 넘게 되면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 파견업체의 허가요건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고용보험 등 4개 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현재 26개로 적용업무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파견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업무 외에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들먹여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의 업종에서 파견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노조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리해고 후 6개월 후부터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통한 정규직 대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마련한 각종 제한조치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협에 놓여 있다는 점도 노동계를 불안케 하는 요

소다. 이미 수십년 전에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한 서구의 경우, 점차 각종 제한조치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자파견제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크게 위협하는 고용형태라는 점이다. 근로자파견제는 우선 파견노동자에 대한 이중착취를 합법화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의 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평균 70-8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노동자들은 각 사용업체로 흩어져 있어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각종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엔, 조합활동을 이유로 파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용업체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또 현재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파견노동자가 급증하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노동조건 악화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울노동상담소 소장 하종강 씨는 경비 직장과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파견노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파견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불법적인 파견노동이 판치지 않도록 감시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며, 파견노동자들을 기존 노조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면서 노동권을 크게 후퇴시킬 근로자파견제로부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지켜내는 것은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다.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주변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 운동본부)는 8일 환경부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지 안과 주변에 마구잡이로 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본부는 특히 "동두천 미 2사단의 경우, 지난 80년대부터 수십만톤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왔다"며, "폐기물 가운데 석면, 우레탄 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또 지난 3월 7일 백운산 정상에 위치한 8군 매대슨기지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1백 년이 지나도 복구 불가능하다는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한에서 "미군이 자행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행위는 한국인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민족의 자존심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환경파괴행위는 우호적인 한미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5년에 체결된 SOFA협정엔 환경오염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 미군에게 임대된 땅에 대해서는 반환 후 그 용도를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운동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기준에 발생한 환경오염의 원상회복과 배상,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 환

경관리기준 강화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했다.

안양시민, 안민청 석방호소

"문맹 깨친 고마운 사람들"

지난 1일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민청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안양시민학교의 학생과 졸업생들인 주민들은 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현재까지 2백여 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서명결과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양시민학교는 배울 기회도, 여건도 갖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 한자, 영어 등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로 인해 '가나다'도 몰랐던 사람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선생님들과 안민청 회원들에게 선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민청은 지난 92년부터 한글을 모르는 성인들을 위한 한글교실(안양시민학교)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안양시민학교를 통해 문맹을 깨친 지역주민은 3천여 명에 달한다.

한편, 구속자 가족 모임도 "안민청은 소년소녀가장 및 노인 후원사업과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시청료 반환 사업, 안양시 주차료 부담경수 개선 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헌신해왔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엉뚱한 죄목을 씌어 구속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행사와 동정

□ 양심선언자 명예회복을 위한 목요기도회 및 '양심선언 기념사업회 준비모임' 발족식

·때: 7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심선언 기념사업회 준비모임(764-0203)

□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때: 7월 9일(목) 오후 2시
·곳: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 편의시설 설치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 밤

·때: 7월 11일(토) 오후 6시
·곳: 사당사거리 한미은행 지하 파스파스호프클럽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제1회 지방자치정책세미나회 '지방의 구조조정'

·때: 7월 10일(금)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강당
·주최: 참여연대(723-5300)

□ 황인오 석방을 위한 후원인 모임

·때: 7월 12일(일) 오후 1시
·곳: 정선군 고함읍 고한 천주교회
·주최: 황인오 석방을 준비하는 모임(712-6573)

□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때: 7월 15일(수) 오후 3시
·곳: 성공회 대강당(덕수궁 옆)
·주최: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제4회 '말들을 위한 캠프'

·때: 7월 20일(월) - 22일(수)
·곳: 다락원 캠프장(의정부시 소재)
·대상: 중학교 여학생
·참가비: 9만 5천원
·신청기간: 7월 10일까지
·주최: 서울여성의 전화(272-216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10일(금)

제 11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영광석 전 마산교도소장 등 전·현직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협박, 폭력,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씨가 이렇게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95년 2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로 반대파를 보복폭력'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6월 당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되어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되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진범과 경찰 간의 거래가 있었다"며, "검찰과 법원은 내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

던 96년 3월 소내 재소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교도관이 폭행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고 하는 등 폭행을 사주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또 김 씨에 따르면, 폭행사건 이후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징벌이 이어졌다. 김 씨는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 징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두 달간의 징벌에 처해졌다. 당시 김 씨는 20킬로그램이 넘는 쇠사슬에 온몸이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몸무게가 22킬로그램이나 빠졌다고 밝혔다.

그후 김 씨는 교도소의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폭행과 징벌을 받았는데, 96년 10월 두 번째 징벌기간에도 역시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진 채 독방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두 번째 징벌기간 동안 보안과에 끌려가 쇠창살에 매달린 채 고문을 당했으며,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실신해 종합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송영현 부장판사)는 9일 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은 김 씨가 병원에 실려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가혹행위는 부인했다. 교도관들은 또 "쇠사슬과 수갑 등의 계구사용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96년 당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재소자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30일 오후 4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불심검문, 비켜!

「불심검문과 인권」 소책자 판매

불심검문의 위법성과 사례별 대응요령, 연행이나 구속시 대처요령 등 불심검문의 모든 것을 담은 안내서.

· 가격 : 2000원
· 문의 : 741-5363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 무시

최근 한 장애인 부부가 겪은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속초에서 커피를 팔면서 심장병 어린 이를 도와 대포동 '커피아저씨'로 유명한 김음강 씨는 최근 부인을 사고로 잃은 아픔을 겪었다. 부인 김복순 씨가 지난 4월 26일 교통사고를 당해 아산재단 강릉병원(원장 서병태)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5월 12일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김음강 씨는 부인을 잃은 슬픔보다도 병원에서 당한 비인격적 대우 때문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강릉병원측은 부인의 대변독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계속 아랫도리를 벗겨 놓았으며, 일반인들이 병실에 들어오는 면회시간에도 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로 인해 김 씨와 부인은 심한 수치심을 느껴 여러차례 가리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이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김 씨는 "환자도 인격이 있으니 면회 시간에는 좀 가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간호사들은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내가 사망한 뒤에도 병원측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병원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수모만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김 씨는 "병원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강원지역 각계 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인권유린이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계속해서 병원측의 공개사과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사진과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병원의 감성열 관리부장은 "면회시간에 커튼을 치는 일 등 관리 소홀히 한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간호사들에게 면회준비시간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가족에게는 사과의 형식을 갖출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공개사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 김재광 씨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 옷을 벗겼을 수는 있으나, 세 번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실업 대책 촉구

날로 심각해지는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9일 2시 국회의원회 당사 앞에서 열린 '제1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추진대회'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와 여대생들 1백여 명은 여성실업대책의 수립과 부당하고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정리해고자 80여 명중 여성 해고자가 무려 56명이며, 금융노련의 경우 여성들을 해고시킨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시 재고용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여성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 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싸고 회원국 사이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어, 협약이 어떠한 형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ICC의 설립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다루는 문제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되며, 안보리나 당사국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ICC검사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소의 독립성이 크게 위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독일, 남아공 등 50여 국은 ICC의 독립적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가 △기소여부 △조사작수 시점 △조사중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는 "ICC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자적인 조사권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들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ICC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차대전 이후 캄보디아나 르완다 등 세계 각지에서 계속된 엄청난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를 경험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을 앞두고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의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도소 3대 의식개혁' 프로그램이 본 취지와는 달리, 재소자에게 또다른 인권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재소자의 교화와 인격수양을 목적으로 도입된 3대 의식개혁은 '교운발 쓰기', '독서 생활화하기', '서로 도우며 살기'라는 구호 아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재소자들이 한문공부와 독서 시간 등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오 아무개(31) 씨에 따르면, 재소자들중 상당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구교도소는 매일 저녁 7-8시에 한문공부를 실시하고, 8-9시에는 독서시간을 의무적으로 갖고 있다.

또 대전교도소에서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독서와 한문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광주교도소에서도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자 오 씨는 "한문공부시간에 전 교도소 내에 스피커로 교육을 한다"며 "우리들의 정당한 휴식시간에 교도소 전체에 방송이 1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그 때문에 일부 재소자들은 방송이 나오면 방에 설치된 스피커의 볼륨을 줄여놓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씨는 "기결수의 경우 낮에는 노역을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저녁시간 뿐인데 모든 재소자들을 상대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무과에 항의를 하는 등 일부 재소자들은 자기가 정당한 누려야 할 자유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의 관계자는 "몇몇 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니 재소자간의 싸움도 줄어들고 교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시상식을 열어 시상도 하고 부상도 책도 영치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후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의 가점요인도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자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한자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많았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구교도소 교무과의 관계자도 "재소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보다는 독서나 한문공부를 통한 교화와 인격수양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재소자들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활개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금속산업연맹 산하 6개 사업장 조합원 13명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노사정위원회 기자실에서 무기한 '침묵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측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채불임금 지급 △부당 정리

해고 중단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농성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미특수강을 비롯, 740%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통일중공업, 조합원 12명을 전원 해고한 대웅전기 등 총 6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당해고 등 불법적인 노조과과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 노사정위원회도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속산업연맹 조직부장 한석호 씨는 "이제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회사측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고, 정부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형식적인 논의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구적인 약속과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에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한 씨는 또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몇 명의 사업주를 구속한 것을 제외하곤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아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도록 방치해 왔다.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삼미특수강의 경우, 대통령 지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노사정위원회의 권고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지난 9일 이루어진 6차 교섭회의에서도 포괄적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대검찰청 공안부(김사장 진형구)가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강력 단속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1998년 7월 11일(토)

제 11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유리벽 너머의 아빠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

생후 22개월된 꼬마 산하는 10일 영등포 구치소로 나들이를 갔다.

지난달 24일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빠 정종권 씨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는지, 산하는 어느덧 아빠 만나러 온 걸 잊고 뛰어논다. 자꾸 비고인 응덩이로 뛰어갈 때면 같이 온 고모가 애를 태운다. 지난달 2일 안양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으로 엄마 정경희 씨가 구속된 데 이어 아빠마저 갇히게 되자 산하는 고모 정미숙 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평소엔 아빠, 엄마 찾지 않고 잘 노는 산하가 뭔가 성에 차지 않을 땐 지체없이 "엄마!!!"를 부르며 운다. 물론 엄마를 불러도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면회 접수를 한 지 한시간 반이 지나 겨우 접견실 앞에 앉았다.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 어슬픈 산하는 손가락으로 접견실을 가리키며 "엄마, 엄마..."라고 말한다. 잘 뛰어 놀던 산하도 딱 단힌 접견실 문 앞에 앉으니 좀 겁이 나는 모양이다. 지난 토요일 수원구치소로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도 이와 같은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기억 때문에 엄마를 부르지도 모른다.

드디어 접견실 문이 열리고, 아빠 정종권 씨의 활짝 웃음 띤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아빠 품을 향해 뛰어갈 기세로 반가와 하는 산하를 유리벽이 가로막는다. 아빠는 고모에게 "산하 약 먹었나?"고 묻기부터 한다. 그 또래 보통 아이들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산하가 걱정돼서다. 면회시간은 어느새 끝났다. 한참만에 만나는 아빠랑의 짧은 면회시간에도 접견실의 불편과 메모지를 만지작거리며 장난치던 아이는 접견실을 나오고 나서야 "아빠아빠..."를 부른다. 아빠랑 그렇게 금방 헤어져야 한다는 걸 몰랐을 게다.

아빠마저 잡혀가던 날, 엄마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기각됐다. 두돌도 안된 아이를 홀로 둘 수 없다는 엄마의 작은 소망이 꺾인 것이다. 엄마,

아빠를 둘다 구속시키는 유례없이 가혹한 처사를 육해본들 소용이 없었다. 지금 엄마 정경희 씨는 보석을 신청해 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산하가 얼마나 더 많은 밤을 엄마, 아빠 없는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9일 기독교회관에서는 「양심선언 군인 전경 기념사업회」 준비모임(대표 이예교)의 발족식이 열렸다.

고 양승균 전경의 양심선언 11주기를 맞이해 발족한 기념사업회 준비모임은 앞으로 양승균 씨에 대한 추모사업과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의 명예회복 사업 및 군민주화 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승균 씨는 87년 7월 7일, 6월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시위진압을 거부하면서 전투경찰의 해체와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했으며, 그 후 전투경찰해체위원회에서 활동하다 89년 국보법 위반과 군법 위반(탈영 등)의 죄목으로 구속된 바 있다. 91년 출소한 그는 윤석양 후원사업회 사무

국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양 씨의 양심선언 이후,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대국민 사찰 폭로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44명의 전경과 군인이 양심선언을 했다.

이날 기념사업회 준비모임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 잔재의 청산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시대를 열어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양심선언자들의 사면, 복권, 복직을 위한 사업 △양심선언자 보호법(내부비리교발자 보호법) 제정 △양심선언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노총, 노사정위 탈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 불참할 것이며, 오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10만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생존권 사수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현 정부의 개혁이 노동자·서민에게는 서릿발같고, 재벌·관료·정치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반쪽자리 개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2기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위기극복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소식> - 콩고민주공화국

카빌라 정부, 계산된 석방

지난 2일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표적인 야당 정치가인 에피엔 쟈세케디 씨에 대해 연금을 해제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쟈세케디 씨는 전 독재자 모부투의 오랜 정치적 맞수였으나, 모부투를 몰아내고 집권한 로랑 카빌라 대통령에 의해서도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정치적 활동 금지령을 어긴 죄로 기소된 후, 지난 2월부터 교황에서 연금상태로 지냈다.

그러나, 지난 5월 연행된 음바야 씨 등 전직 장관 다섯 명은 여전히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자).

이와 관련, 수도 킨샤샤의 한 외신특파원은 정부가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목적과 새로운 화해(콩고 프랑)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쟈세케디 씨를 석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김대중 정부의 '인권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8·15 특별사면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3일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김정숙),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스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등 14개 종교·인권단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준법서약제의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민가협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양심수로서 약법의 희생자가 되었던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양심수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1백90여 명에 달하는 청년·학생들이 공안세력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으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꺾고 양심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사상전향제가 정부 수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현실이 극복된 것은 분명 인권의지에서의 진일보"라며 사상전향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제도가 양심수 석방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은 화해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준법서약제 역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 △이를 양심수에겐만 요구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과거 군사정권이

생산해 온 수많은 약법들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등 때문이다.

민가협 등은 "이번 8·15에도 기만적이고 부분적인 사면을 진행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하고자 하는 종교·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양심세력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후 '양심수 석방을 위한 30일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공동 캠페인에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및 목회자 서명운동(기독교) △전국 2백개 사찰 동시 법회 개최(불교) △거리캠페인, 집회, 하루감옥체험(민가협) 등이 마련된다.

한편, 민가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양심수(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는 총 4백37명에 달한다.

.....주요 공판 안내

- ▶ 14일(화)
 - 엄형식(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선고
 - 유용형, 백금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속행
 - 김진성(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 6부, 속행
- ▶ 15일(수)
 - 홍성철, 김나영(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신건
 - 심정용 외2(국보법 간첩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행
 - 오택용(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 2부, 속행
 - 하영준(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101호, 4단독, 속행
- ▶ 16일(목)
 - 김지은(특수공무집행방해,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선고
 - 한민송(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선고
 - 윤순재 외7(국보법 찬양·고무 등, 관악노동청년회)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 1부, 신건

구독료! 하루소식의 힘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로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7일이면 명동성당에서 농성 30일째를 맞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병)를 방문했다. 이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의 어느 부처보다도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민중의료연합, 간호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의대 소모임이 함께 했다. 이들 중 대표 3인은 재정개혁담당 사무관 김용진 씨를 면담해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 측의 입장을 들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김용진 씨는 "공무원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만연해 있으므로,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처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되므로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훈(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씨는 80년대 중반 공적 서비스 축소,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결핵환자가 급증했던 미국의 예를 들면서, "실력 재정지원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민간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상 공공성 저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반박했다. 배 위원장은 또 "재산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지원은 계속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립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이 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인간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국가보안법 역사 50년, 기나긴 역사만큼 숱한 고통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1953년부터 1998년까지의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문의: 741-5363)

- ① 대법원 판결문(53-89년 총 131건/ 369쪽) 2만7천원
- ② 대법원 판결문(90-98년 현재 총 94건/ 377쪽) 2만8천원
- ③ 대법원 판결문(9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193쪽) 1만5천원
- ④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135쪽) 1만1천원
- ⑤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106쪽) 9천원

주/간/인/권/호/름

(98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이 일반적으로 송전철탄을 세운 삼성전사에 대해 송전철탄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순지 의무성차관, 위안부를 위한 의료시설 재공 검토하겠다고 밝혀

◆ 7월 7일(화)

출소자 김석진 씨, 교도소에서 가혹행위 당했다며 96년 당시 마산교도소장 등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폭력 등의 혐의로 창원지법에 고소/식의약형이 실시한 컵라면 용기의 환경호르몬 용출시험에서 생식기능 등을 저하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의심되는 스티렌 트리머 검출/서울교육청, 체벌·초치 교사 5명에 정직3개월의 징계 조치

◆ 7월 8일(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환경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보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 대책 촉구/노동부 작성 '고용보험통계월보'에 따르면, 5월 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1만3천4백97명으로, 6개월만에 무려 7.6배 증가/대법원, 9월부터 보석 및 체포·구속적부심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재판부 설치예정

◆ 7월 9일(목)

금융감독위원회, 5개 퇴출은행 직원 고용승계 없기로/노사정 위원회,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복지를 권고하는 권고문 채택/금속산업연맹 소속 6개 사업장 조합원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노사정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농성 돌입/양심선언 군인전경 기념사업회,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갖고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하겠다고 밝혀/보건복지부, 6월말 현재 불거리·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53배 급증했다고 밝혀/휴먼라이츠워치, 미국 14개 도시의 경찰 행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경찰관들이 부당한 총격, 가혹한 구타, 목조르기 등 불필요한 육체적 처벌을 자행하고 있으며, 흑인과 중남미계가 주요 희생자라고 밝혀/법무부, 변호사 영구제명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확정

◆ 7월 10일(금)

양 노총, 노사정위 철수 선언/감사원,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권고

◆ 7월 11일(토)

민주노총, "5개 은행 퇴출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선 무효"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7월 12일(일)

양 노총,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생존권 시수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말단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호화별장 소유하며 그린벨트 불법훼손한 유명인 14명 경찰에 적발

인권 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현장 인권운동가들이 생생한 현장감으로 '시평'을 써야 한다는 인권하루소식 기자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시평을 쓴 게 벌써 네번째다. 열독률이 높은 하루소식에 시평을 쓰는 것은 공중파방송 9시 뉴스에 얼굴을 들이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 텔레비전에 얼굴 한번 비치는 것은 사람들도 금방 잊고, 대개 한두마디 하고 말기 때문에 '너 텔레비전에서 봤어' 하고 끝나지만, 각 단체들로, 언론사로 관심있는 개인들에게 발송되는 이 팩스신문은 나중에 영인본으로까지 제작되는 부답이 있다. 이곳저곳 방송이건 잡지 기고든 하루소식 시평만큼의 반응은 없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는 것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수를 줄이면 되는 다른 만남과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 잔뜩 위축되고 긴장된다. 긴장된다고 글이 잘 써지는 것은 아니다. 긴장도가 높아져도 글은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간다. 환장할 노릇이다. 시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원고지 세장을 매었다.

시평을 처음 쓸 때는 김대중 씨가 막 대통령이 되었을 때였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헛갈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 운동이 원칙만 잘 부여잡고 가면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원칙에 있다는 내용을 쓰고 싶었고, 대충 쓰고 싶은 바는 표현했었다.

대학 초급학년 시절에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처럼 이런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지나게 되고, 저런 생각의 책을 읽으면 또 그렇게 되곤 했던 기억이 있다. 민족해방운동을 읽으면 NL이 되고, 사회구성체에 대한 짧은 글만 읽어도 PD가 되곤 했던 그때처럼 요즘 원칙이니 개념이니 하는 것들은 방에 켜 놓은 촛불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도통 뭘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럿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7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전향제 폐지,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한 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었지만, 한 선배가 상대적으로 판단한 내게 화를 내며 내뱉은 한마디가 땀뚝이다. "그건 인권운동도 뭐도 아니야." 생각의 차이는 대충 이런 것이었다.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것이 양심수들을 많이 풀어주기 위한 석방용 교육지책인가, 아니면 확대·변형된 사상전향제로서 교차시키려는 감

남에게는 단호했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추함에
몸서리친다.

금음인가, 준법서약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문제제기를 통해 정정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8·15 대사면 이후로 시기를 미뤄야 하는가. 이는 전부 나름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충돌한 것이다.

얼마전 양심수 석방을 위한 어떤 모임에서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퇴장사태까지 벌어졌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끝까지 다른 견해도 경청해야 한다는 원칙이 보기 좋게 충돌했던 이날 사태는 대충 수습이 되긴 했지만, 글씨... 원칙은 언제나 새로운 원칙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 선배와는 충분한 대화를 갖고 약간의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大同小

異)을 찾을 수 있어서 별 문제될 게 없었지만, 준법서약문제로 인권단체들이 모여 벌인 토론은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나름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부여잡고 벌이는 토론은 아름다웠고, 나도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며 고군분투하였지만, 저녁도 거른 채 늦은 밤까지 진행된 토론, 맥주 한잔의 뒷풀이도 없는 토론은 웬지 허전했다. 겨우 녀달전 인권운동이란 것은 '원칙'만 잘 부여잡으면 된다고 잘난 체했지만, 그 원칙이 오히려 부담스러움과 공허함으로 나를 자극한다.

준법서약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결국 '지금 당장 양심수를 풀어내는 일'과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는 제도의 출범을 막는 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이지만, 실상 이번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원칙과 개념을 훼손하고 살아가나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운동가의 품성과 향기를 말하고, 인권침해자들과 단호한 싸움을 버리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처럼 방에 초 한자루 켜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면, 은통 자신없는 것뿐이다. 세상에 도대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향기를 느끼게 했는가. 남에게는 단호했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추함에 몸서리친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돌 곳조차 없다"(마태오 8,20)며 지사연(志士然)했지만, 기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마태오 7,3)했던 거다.

사실 인권단체들이 준법서약제를 갖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술한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기소유예 등을 조건으로 준법각서를 쓰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양심수들의 인권이 일반 형사범들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기라도 한 것처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15일(수)
제 11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रो에 놓여

북한을 탈출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제적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는 한 탈북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평안남도 순안군 오금리에서 태어난 김용화 씨는 지난 88년 함흥철도국 소속 승무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철도사고로 처벌의 위협을 느끼자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했다. 중국 당국과 북조선 사회안전부의 추적을 피해 중국 곳곳을 전전하던 김 씨는 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자,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을 세 차례나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망명 요청을 거절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꼈던 김 씨는 95년 2월 베트남으로 밀입국,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다시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급기야 밀입국 혐의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이후 김 씨는 이승 도중 탈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같은 해 6월 0.5t짜리 쪽배를 타고 충남 서산 앞바다에 도착, 마침내 한국 밀입국에 성공했다.

그러나 험난한 밀항 끝에 한국 땅에 도착한 김 씨의 앞날도 순탄치 않았다. 이번에도 김 씨는 '중국인 거민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중국체류 탈북자 중 신변안전을 위해 위조 거민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자신도 북한과 중국의 합동수사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위조 거민증을 사들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외국민보호소에 수용되어 중국으로 강제송환이 결정됐다.

3년 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정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올 4월 18일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 다음날 후쿠오카 해상의 한 섬에 도달한 김 씨는 도착 즉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체포됐다. 그를 조사한 일본 정부 역시 중국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송환을 결정했고, 난민 신청도 기각됐다. 당시 진도 앞바다에서 그의 일본 밀항을 도왔던 탈북자 조영호, 황규술 씨도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접한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철회와 한국 정부의 탈북자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도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에 따라 김 씨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씨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겨져 있지 않다. 이달 말까지 그가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김 씨는 현재 중국으로의 송환은 곧 북한으로의 송환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김 씨의 탄원서가 애절하다. "제2의 고향으로 믿고 찾아온 남한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남과 북은 모두 저에게 죽음밖에 선고하지 않는지요?"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사회 각계에서 이번 8·15특사때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3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석희 주교, 주교회의)는 '8·15 특사에서 양심수의 광범위한 석방'을 촉구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상전향제도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또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위협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굳이 요구하지 말고 관대히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재개발지역 무법자를 심판하라

각계 사회단체, 다원건설 형사고발

철거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표적 철거 용역업체인 다원건설(옛 적준) 대표이사 이금열 씨 등 4명을 '경비용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원건설은 전신인 (주)적준 시절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지역에서 폭력철거로 물의를 빚어온 용역업체로,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전동3동 박순덕 씨 사망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9월 서울 행당 1-2지구에서의 부녀자 성추행 사건 등에 연루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 도원동 재개발지역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고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폭행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용역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원건설은 경비용역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경비용역업을 해왔다"며, "이는 경비용역법 제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다원건설이 수년간 재개발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온 것에 대해 경찰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위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국연합, 한국 교회인권센터 등 철거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13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

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학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항소함으로써 이뤄졌다.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오의성 부장판사는 "94년 3월 피고가 가입할 당시 전학련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구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피고가 아무런 전과가 없고, 96년 감형 수정 이후 단체의 이적성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참작해 볼 때, 원심 선고가 적절했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전학련은 96년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당 건설'이라는 내부 과제를 '진보정당 건설'로 바꾸고, 혁명노선을 폐기하는 등 감형을 수정한 바 있다.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 양심수 석방, 문턱 더 높인다

"준법서약은 사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 '청송'은 잘 몰라?

'대도' 조세형 씨의 15년 독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탈옥을 기도했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독방에 수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상습범이 수용된 곳이다.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인권유린이 있는지는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 국민인권위원회, NGO 형태로

"인권법과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 오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제정일)에 일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비정부기구(NGO) 형태 비슷하게 만들 생각이다."

◎ '이적단체 규정', 설친 게 누군데

"한총련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검찰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

◎ 약법이지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현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현 경제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 문제로 온 나라를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I, 파업 진압 자제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14일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폭력과 인권유린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파업을 진압하기보다,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16일(목)

제 11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고객돈으로 명퇴금 잔치?

장은증권 노조, 진상규명 촉구

고객돈으로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는 이유로 정부와 언론에 의해 매도당해 온 장은증권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에 나섰다.

지난 4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장은증권에 대한 영입정지명령을 내리면서, "고객의 예탁금을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전직원에게 명예퇴직금(명퇴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측의 강압이 있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언론은 노조의 협박에 못이겨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대립 장은증권 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노조측이 명퇴금을 챙긴 후 영입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다. 이후 노조측에 대한 여론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러 금감위는 이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박강우 노조위원장을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하면서 퇴직금 환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김대통령도 "퇴출은행의 나눠먹기식 파다 퇴직금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려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자신들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에 불과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장은증권 진상규명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장이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측과 협의 후 명퇴금 지급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해 노조도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수용했을 뿐, 어떠한 강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노사합의서 등 사태의 전말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또 "전직원 4백17명 사퇴라는 최악의 요구까지 받아들인것까지

회사를 살리고자 힘썼는데, 장기신용은행은 자기 잇속만 채웠다"고 주장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노조측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기신용은행이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요구한 △인원감축 △임금 반납 △노조해체 △전직원 사퇴 △계약직으로 전환 등을 모두 수용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리고자 힘썼다, 그러나 은행측은

약속했던 자금지원도 하지 않았고, 이대립 사장을 중용해 영입정지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이는 은행측이 장은증권 청산과 정리해고를 위해 계획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조측의 협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또다시 박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했다. 이에 비대위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퇴직위로금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쟁기를 박으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발표, "금감위가 장은증권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을 획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폐쇄

경찰의 편의적 발상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아니다.

15일 종로 일대는 차선 하나를 점거해 주차한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로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전경들을 대거 배치해 행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경찰은 종로공원 인근의 버스정류장마저 폐쇄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 시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일제검문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남광주시장 앞길에서 부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삼일(31·고등학교 교사) 씨는 검문 중인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경찰은 '오토바이 낚치기족'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도 박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갔으며, 동승한 부인의 신원마저 밝힐 것을 요구하다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박 씨는 인근 학동파출소에서 "왜 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밝혀야 하느냐"고 따졌으나, 경찰은 오히려 "검문은 경찰의 당연한 권리"라며 박 씨를 훈계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30여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 명단을 박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파출소 관계자는 "오토바이 면허는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적어줄 수밖에 없으며,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별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낚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스러지는 노동자들이 투쟁만이 살 길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노총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민주금융연맹, 공익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금속산업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2시에는 종묘에서 「강제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파업은 대량 실업을 몰고 올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강한 저항의 표출이다. 이는 정부가 노동계에 굳게 약속했던 부당노동행위 척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달 29일의 5개 은행 퇴출명령과 이달 3일의 1차 공기업민영화 발표 등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몰고올 대량 실업사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만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생존권 박탈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분노로 가득했다.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노동자의 생활보호 및 노조활동 보장 △산별 고용안정 협약 체결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집회 직후 이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와 공공연맹 김호선 위원장 등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4일에는 금속연맹 단병호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전경 5개 중대를 동원해 사무실 수색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리해고, 임금체불 및 삭감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체포·연행·구속·수배까지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며,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민교협·학단협 성명

1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유초하, 민교협)와 학단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경구, 학단협)는 성명을 발표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대책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무자비한 시장주의 정책과 IMF식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공기업을 헐값에 무차별적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등 외국의존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외국자본의 예속 하에 빠뜨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재벌지배체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자본만 살찌우는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조절되는 공공적 성격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벌 소유권과 경영권의 사회적 환수 △민영화계획 철회 △국민적 합의 하의 구조조정 추진 △고용보장 △IMF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강위원 씨, 단식중 쓰러져

한총련 탄압 중단 요구

지난 6월 22일부터 한총련 탄압중지와 이적단체 규정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던 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광주교도소 수감중)이 단식도중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전남대 신문사에 따르면, 강 씨는 허반신마비 증상과 환청·환영 증세를 일으키고 있으며, 맥박과 혈압이 떨어지는 등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시내 동광병원으로 이송된 강 씨는 "진단은 받았지만, 치료는 받지 않겠다"며 계속 단식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강 씨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작성, 광주교도소측에 전달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와 동정

- 지역자치 네트워크를 위한 세미나
 - 때 : 7월 21일(화) 오후 3시- 5시
 - 곳 : 한국 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 주최 : 정보사회학회, 시민의 신문
- 의료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의 해체 토론회
 - 때 : 7월 20일(월) 오후 7시
 - 곳 : 지식인연대 회의실
 - 주최 : 지식인연대
- IMF이행협약 철회·재협상촉구대회
 - 때 : 7월 16일(목) 12시
 - 곳 : 탑골공원
 - 주최 : 범국민운동본부
- 여성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일 집회
 - 때 : 7월 23일(목) 오후 2시
 - 곳 : 탑골공원
 - 주최 : 민가협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편집자 주> 지난 1일 동아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배윤주 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요약해 실는다.

사 건 : 98노156

피고인 : 서봉만, 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훈

검 사 : 민홍준, 이상철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문재인, 정계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쟁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자술서 및 그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이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고인 서봉만, 지은주의 검찰 제1,2회 진술 및 피고인 도경훈의 검찰 제1회 진술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3) 자백의 합리성 유무

(가) 위 피고인들의 위 자백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이 있다.

① 피고인 지은주는 동경조선제1초중급학교의 1층에 위치한 1학년 3반 교실에서 배윤주와 사상학습을 받고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학교의 학교장 작성의 조회회신서에는 위 학교의 1층에는 교실이 없고, 그 학교에 1학년 3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학교 1층에 교실이 있는지, 그 학교에 1학년 3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② 피

고인 지은주는 피고인 배윤주로부터 활동자금으로 10만엔을 받아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였으나, 그 환전기록 등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없다. ③ 피고인들은 1996. 7. 20 동아대 학교에서 입당식을 할 당시에 그곳에는 원형탁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중략), 경찰단계에서의 현장검증 당시(중략) 촬영한 사진에는 사각탁자로 되어 있어서 위 입당식 당시에 어떠한 탁자가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④ 기록에 의하면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입당시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입당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 ⑤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지은주, 배윤주에게 지령을 하였다든 오가다 이찌로나 조총련 청년간부 김 명불상자(30대 초반)는 물론 후쿠오카의 아키다(여, 30세 가량) 등이 실존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⑥ 피고인 지은주는 일본여행시 아키다와 접선한 장소인 전자상가에 관하여 처음에는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하였다가 그 명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면서 상호불상의 전자상가라고 하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스트전자상가"라고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⑦ 피고인들의 진술 중 활동자금의 수수일시 및 내역, 조선노동당 입당을 권유한 사람 및 그 일시, 입당식 당시에 사용한 김일성 사진의 위치, 사용후의 행방 등에 관하여 최초 자백과 그 후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다른 피고인들이 먼저 자백한 내용에 맞추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억지로 허위자백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어 의문이 간다. ⑧ 피고인들은 피고인 지은주가 1996. 7. 20. 입당식 광경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사진이나 필름 등이 증거로 수집·제출되어 있

지 않다. ⑨ 그 밖에 피고인 배윤주가 오가다이찌로부터 활동자금으로 25만엔을 받았다는 동인의 경찰진술의 경우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배윤주가 귀국하면서 일본에서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돈 21만여엔을 찾아서 이를 환전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 의문이 있다.

(나) 뿐만 아니라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출한 증거물은 다음과 같이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① 이 부분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들은, 피고인들의 위 자백에 나타난 범행장소인 동경소재 '동경조선 제1초중급학교', '남해원' 식당, '키(KEY)' 커피숍, '동전빨래방'(중략) 등을 촬영한 것일 뿐이다.

② 김일성 사진은, 피고인들이 동아대 학교에서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는 당시 사용한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크기의 수사기관에서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다.

③ 기타 피고인 서봉만, 임주영, 도경훈이 수집·탐지하여 피고인 지은주, 배윤주에게 전달하였다는 문건 등도 그와 같은 문건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과하다.

(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만한 뚜렷한 동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렀다는 혐의를 갖고 수사를 게시하게 된 단서도 뚜렷하지 않다.

(라) 앞에서 본 바와 여러 점에 비추어 피고인 서봉만, 지은주, 도경훈의 위 검찰자백은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서봉만, 지은주, 도경훈의 검찰자백은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조사단계까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쟁략)

1998. 7. 2.

재판장 판사 박용수

판사 황진효 판사 이근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16일(목)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호외> - 양지마을 속보(오후 4시 40분 현재)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진상조사단 긴급 파견

16일 오전 7시 30분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에 소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이사장 노재중)에 진상조사단이 급파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7월 1일 양지마을에서 탈출한 박영섭(38) 씨로부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감금,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듣게 되었다. 이후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박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오늘 아침 직접 현장확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에는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이성재 의원(새정치국민회의),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의 관계자와 보도진을 비롯한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진상조사단의 목적은 탈출자 박영섭씨의 증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획득과 원생 면담을 통해 폐쇄된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오전 7시30분경 정문을 통과한 진상조사단은 4-5시간 동안 원생들과 면담하였다. 양지마을 측의 대응이 격해지면서 12시30분 경 MBC PD수첩 보도진과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씨 등이 직원들에 의해 양지마을 밖으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오창익씨는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상처를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진상 조사단은 3m가 넘는 높이의 이중 담장과 모든 시설마다 둘러쳐진 쇠창살, 원생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 등에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남자 원

생들은 “여기는 교도소보다도 못한 곳이다. 차라리 노역나 다름없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보내주지 않는다. 보복조치가 따르므로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낸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여자 원생들은 대부분 겁에 질려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작업시간외에는 감금하며 노역에 대한 대가가 월 8천 원에서 1만3천 원이라는 사실 등이 면담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마을 밖으로 내몰렸던 진상조사단 중 서준식 대표, 이성재 의원, 김병후 원장(연희신경정신클리닉), 그리고 11명의 취재진이 다시 양지마을에 진입하여 노재중 양지마을 이사장과 면담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노재중 이사장은 “담벼락 설치나 열쇠로 잠그는 게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정조치를 명령해도 다른 부랑인 시설에서 모두 철거하지 않는 한 나만 억울하게 따를 수는 없다”, “여성들에게 강제 피임도 실시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애를 낳게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본인이 퇴원을 원해도 퇴원시킬 수 없다. 판단은 나와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사장과의 면담후 양지마을 내부에 있는 요양시설인 송현원에 들어간 대표단은 원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퇴원을 원하는 사람을 판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20여명 정도를 양지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시도하는 가운데 시설당국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

이후 소식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18일(토)

제 11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충격! 양지마을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

충남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소속, 이사장 노재중, 수용인원 4백50여명)의 인권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지난 16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이성재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김병후 연세정신클리닉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언론사 취재진 등 40여 명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소재 양지마을을 기습적으로 방문, 강제감금과 노역, 구타 및 강제투약 등의 불법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했다.

전날인 15일 밤 서울을 출발, 천안에 서 1박한 조사단과 취재진은 16일 오전 7시 30분 양지마을로 진입한 뒤, 오후 5시까지 양지마을 및 정신요양시설인 송현원(3백20여명 수용) 내부를 조사하고 노재중 이사장과 수용된 원생들을 면담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한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들에 의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조사단을 강제로 양지마을에서 밀어내고 거친 욕설을 퍼부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항의하던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가 청년들에게 때밀러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17일자 인권하루소식은 휴간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20일(월) '양지마을' 관련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해 작업을 하고 있는 원생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며, 억압적 분위기가 다른 곳보다 심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러한 억압적 작업은 환자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재중 이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출입문을 잠가 두고 높은 담벼락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랑인 시설은 제쳐두고 우리만 문제 삼는다면 억울해서 따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 한일병원 대표이사이기도 한 노재중 이사장은 현재 양지마을과 송현원을 비롯, 대전 원명학교 등 대전과 조치원 지역에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조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다음 일주일 동안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상은 지난 1일 양지마을에서 탈출한 박(38) 아무개 씨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3미터가 넘는 담장. 그 담장 너머로 또 하나의 높다란 담벼락이 세상을 둘로 가르고 있다.

'양지마을'은 그 높은 담벼락 사이 에 두고 세상과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인들은 알 길이 없었다.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16일 이른 아침, 진상조사단과 취재진은 양지마을 정문 앞에 다다랐다. 들리는 건 자동차 엔진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방문객들의 심장박동 소리 뿐. 마침내 오전 7시 30분, 서울에서 내려온 '불청객'들은 기습적으로 양지마을의 외곽정문을 통과했다. 경비직원의 저항을 뚫고 30여초 만에 또 하나의 장벽을 돌파한 조사단과 취재진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온 인간의 모습들을 확인했다.

"나가고 싶어요"

조사단이 처음 찾아간 곳은 여자 원생들의 숙소. 그들은 일순 긴장하면서도 방문객들을 환영해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을 찾자 모두가 손을 번쩍 든다. 나이가 예순이 넘었다는 윤 씨는 "나가고 싶어 죽겠다"면서도 지금껏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려웠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조사단에게 말하는 것조차 조심했다. 역시 '후환'이 두려운 이유 때문이다.

여자 원생들의 숙소 뒷편 건물은 남자 원생들의 숙소였다. 그런데, 오전 8시가 지나도록 숙소 주변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의문은 곧 풀렸다. 남자 원생 모두가 숙소 안에 감금중이었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의 원생들은 작업을 마친 저녁 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식사 때까지 외부에서 잠가둔 숙소 안에 감금된 채 지내고 있었다. 또 모든 창문엔 '탈출방지용'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남자 원생들은 쇠창살 너머로 방문객들을 맞이했고, 너나 할 것 없이 응

리를 토해냈다. "술 먹고 잔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감금해 둘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려고 생활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 그런데 나가지 못해 한이 맺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원생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양지마을에 들어온 이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기한이 정해진 징역살이에선 그나마 달력을 지워나갈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이사장의 허락없이 누구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박흥만(76) 씨는 무려 16년간을 양지마을에 갇혀 지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원생이 울분을 털어놓는다.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양지원 원생, 노예일 뿐입니다."

"찍어주는 대로 실었다"

원생들은 양지마을에 들어온 과정부터가 부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진수(51) 씨는 "술 한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천안 역전에서 끌려왔다"고 밝혔다. 김제성(58) 씨는 역에서 차포 환불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끝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어이없게 양지마을로 끌려왔단다.

원생이면서도 사람들을 직접 양지마을로 끌고오는 일을 맡아온 김영화 씨는 "원장 지시로 단속을 나가면, 신원 확인 절차없이 경찰이나 군청 사회과 직원이 찍어주는 대로 실어갔다"고 털어놓았다. 김 씨는 또 "그 대가로 양지마을에서는 게를 가져다주곤 했다"고 말했다.

있으나마나 심사절차

그러나 양지마을에 끌려오는 과정은 시작에 불과했다. 부랑인들이 수용되면 당연히 이를 심사해야할 공무원들은 정기적인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지마을 운영자측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원생들마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강제노역과 구타·강제투약

이렇게 수용된 양지마을의 원생들에겐 짐승과 같은 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구타와 강제노역, 심지어 강제로 약을 투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원생들은 증언했다.

원생들은 양지마을의 대표적인 구타 사례로 박종문 씨가 당한 일을 꼽았다. 박 씨는 지난해 무려 1시간 가량 구타를 당했고, 당시 그의 얼굴은 사람을 못 알아 볼 정도였다고 한다.

정신요양시설에 갇힌 한 원생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독방에 가두고 그때부터 강한 신경안정제를 투약했다"고 폭로했다. 그마저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원생들의 고통 가운데 또 하나는 강제노역이다. 양지마을에선 작업수라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강제로 무인을 찍도록 만들며, 거기에 불응하면 폭행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원생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는 고작 한달에 8천원 내지 1만3천원 정도. 양지마을측은 나머지 돈을 통장에 적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5년 가까이 생활해온 한 원생의 총지출과 저리금의 합계가 불과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면회와 서신 제한, 신문·잡지 구독금지 등 양지마을의 인권유린에 대한 증언은 그 끝을 보기가 어렵다.

이사장의 강변

오후 5시경 조사가 마무리되자, 원생 23명에 대해 퇴원이 결정됐다. 열릴 것 같지 않던 철문이 열리는 순간, 감격한 원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그들은 남겨진 동료들에 대한 걱정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인권유린의 현장을 들킨 노 이사장은 발악이라도 하듯 강변했다.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요." 그의 눈에 원생들은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0일(월)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특집> 옥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① 구타와 가혹행위

부랑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는 충남 '양지마을'에서는 사실상 옥지 위에 떠있는 노예선이나 다름없는 인권유린 현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타와 가혹행위 역시 양지마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1. 죽도록 맞고 감옥 간 박종문

양지마을에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구타사건으로 원생들은 박종문(40대 중반) 씨의 사례를 꼽는다.

지난해 여름 양지마을로 끌려온 박종문 씨는 직업을 묻는 '손 주인'에게 "전기회사에서 총무일을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손 주인은 "진짜로 총무일을 했냐"며 박 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에 박 씨가 계속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자 무려 수십분 간 박 씨를 구타했다.

당시 구타장소는 식당 앞 공터였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구타 시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김 아무개 씨의 증언. "구타받로 계속 가슴을 견어치는데 발이 흰 정도로 강하게 견어쳤고 이단 열차기까지 날아갔다. 손으로는 얼굴을 무수히 구타했고, 박종문이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 사람 뺨집 정말 좋았다. 그렇게 맞으면서까지 '총무 일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중에 옷을 벗어보니 온몸이 시커멓게 멍

오늘 <특별포> 1면 발행

들었고, 얼굴은 처다보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멍겨져 있었다."

박종문 씨는 구타를 당한 이튿날 방화사건으로 구속된다. 식당 건물 옥상에 있는 가스통을 열고 거기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원생 가운데 간부직을 맡았던 이 아무개 씨의 증언. "종문이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곳 실상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방화를 결심했던 것으로 안다."

2. 멍모르고 당한 신입생

방만식(52) 씨는 지난해 8월 은양역 전에서 술을 마시다 붙잡혀 양지마을로 끌려왔다.

방 씨가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한 것은 입소후 6일째 되는 멍모르던 신입 시절. 작업(호차 작업)에 투입된 그는 선배 원생들로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모두가 4년에서 8년 이상 양지마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순간, 방 씨는 일손도 잡히지 않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지마을 사정에 어두웠던 그는 무심코 열려있던 정문으로 걸어나갔다. 당연히 정문을 지키던 경비에게 붙잡혔고, 이후 방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작됐다.

"도망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방 씨는 광목천으로 두 손이 묶인 채 감금되었다. 피가 통하지 않는 두 손이 시커멓게 변해가자 방 씨는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방 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그를 감금한 '조 실장'은 △손목을 뒤로 꺾어 창문쇠창살에 묶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방 씨는 이 때 왼쪽 어금니 하나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멈추지 않던 방 씨는 "죽어서 산에 물어버리겠다"는 조 실장의 협박에 결국 "살려만 달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빌었고, 그제서야 가혹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 대들다 정신요양원으로

95년 여름, 여자 생활실 북도에서 발생한 일이다. 여자 원생 전숙영(38) 씨가 세수대야로 유리창을 깨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전 씨는 양지마을에서 내보내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 씨의 행동은 양지마을에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전 씨를 직접 결박했던 이 아무개 씨의 증언. "원장이 전숙영을 묶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XX년아, 왜 유리창을 깨냐며 얼굴을 후려쳤다. 그러자 전숙영은 '원장이라는 놈이 왜 약한 여자를 묶어 놓고 때리냐. 차라리 죽여라'며 대들었고, 원장은 환자들이 사용하던 쇠치판으로 전숙영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이후 8일동안 전 씨는 양손을 묶인 채로 남자 생활실 북도에 놓인 침대 위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그에게는 CP(신경안정제)가 투약됐다. 이 씨는 "오 간호사가 CP를 먹였다"고 밝혔다. 이후 약 20일 만에 악을 끊게 된 전 씨가 단식을 시작하자 오 간호사로부터 "저 X년, 속 썩힐 필요없이 송현원에 처 넣어"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졌다. 이후 전 씨는 지금까지 송현원(정신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옥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양지마을로 끌려오는 과정'이 내일자로 소개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1일(화)

제 11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특집> 옥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는 입소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의 책임방기는 이같은 인권유린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빚어왔으며, 나아가 시설과 관청이 서로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93년 입소한 이상훈(57) 씨의 진술 "천안의 한 다방에서 커피 한잔을 시켜 먹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가방에 있던 돈 9만원이 없어졌다.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세 번을 신고할 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파출소에 쫓아가 항의하니 나를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가족수갑을 채운 채 얼굴에 가스를 뿌렸다. 이를 뒤, 파출소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잠시후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태워 신고 갔다."

같은해 3월 입소한 김재성(58) 씨 "후배를 만나러 천안에 내려갔다. 서울로 올라오는 표를 미리 끊고 내려갔는데, 집(경기도 이천)에 들리기 위해

◆바로잡습니다◆

16일자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편집자주>에서 '엄형식 씨' 등을 '배윤주 씨 등'으로 바로잡습니다.

표를 환불하려 창구에 갔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때 경찰관이 나타나 '잠깐 이야기하자'며 역전 파출소로 데려갔다. 신원조회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싣고 데려갔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플러갈 당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치는 대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직접 단속을 다녔던 김영화(58·원생) 씨의 진술과도 일치된다. 김 씨는 "단속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는 없었다"며, "일단 원장 지시로 단속을 나가면 '저거 실어'라는 말에 따라 실어 갔다"고 밝혔다.

나아가, 단속된 사람이 실령 '순수한' 의미의 '부랑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상담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고자, 사회복지 복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원생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입소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과 연기군청측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엔 고의적으로 의무를 저버린 혐의도 짙어 보인다.

20일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

원은 "입소한 모두에게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원생들 가운데 일부는 "군청 직원과 말 한 마디 나눠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원장도 면담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생도 있다.

또한 상담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생들에 따르면, 군청 직원이나 원장과의 상담 내용은 '주소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 '형제와 보호자가 있으니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알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군청측은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입소한 윤석만(36) 씨는 "상담을 한다면서 시종 욕박만 지르는 등, 군청 직원은 양지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건없는 석방" 촉구

대만인권촉진회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 항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항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약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더 격리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하면서, "준법서약제를 철회하고,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주요공판인내 내일자에>

'전재천 씨 구명' 탄원서 전달

부산지역 시민, 구명운동 동참

지난 96년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전재천(부산주례 구치소 수감) 씨를 위한 탄원서와 7백3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조세형 국회의 총재권한대행에게 전달됐다(본지 7월 7일 1면 기사 참조).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대표 송기인 신부)'이 추진한 이번 구명운동은 각 사회·종교단체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전 씨의 사정을 들은 부산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해 7백30여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사람들'은 김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조건인 선상생활을 시작했다가 온갖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는 한국인 선원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전 씨를 무기수로서도 감형해 다시 한번 반성하는 진실된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람들'과 부산 시민들은 이번 구명운동을 통해 오는 8·15사면때 전 씨가 감형되어 사형수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3일간 '하루같은체험'도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및 거리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20일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명동, 대학로,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매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가협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서명운동 뿐 아니라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같은체험(8월6일-8월8일) 등의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민가협은 20일 캠페인 시작에 앞서,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8·15 광복절을 앞두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양심수 4백37명(98년 6월 25일 현재)의 전원석방과 대대적인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전향제 대신 도입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한편 20일 법무부는 사노맹·구미유학생간첩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등 대표적 양심수들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쓸 때만 사면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용각(70·40년 구금) 씨 등 초창기수들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 제출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간/인/권/호/름

(98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 7월 13일(월)

민가협 등 14개 종교·인권단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 개최/금융감독위원회, 퇴출은행 직원 석달간 제재약 형태로 고용기호/한미행정협정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환경기준을 현행 국내법과 미 국방부 환경기준 등에 맞게 강화기호/노동부, 실질 여성가장 채용 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 보조기호

◆ 7월 14일(화)

금속연맹 파업 돌입,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국민회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등급의 전용관 설치 등을 빼대로 하는 영상관계법제·개정안 발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 폭력철거를 자행해온 다원건설(옛 적준) 고발장 접수

◆ 7월 15일(수)

민주노총 산하 19개 공공부문 노조 6만여명 파업 돌입/국방관련 당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료 지급하라고 판결/평택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7월 16일(목)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148명에게 준법서약 받은 후 복직기호, 시국관련 사건 해직교사 200여명의 복직 여부는 추후 결정기호/현대자동차, 2678명에 정리해고 통보/인권운동사랑방, 국회의의 이성재 의원 등 강제노역과 성폭행 등을 자행해온 부랑인수용소 '양지마을'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실천불교승가회 등 불교관계자들,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열어

◆ 7월 17일(금)

법무부, 인권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해온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을 8·15 특사때 석방, 국외로 추방기호/헌법재판소, 교수제임용제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격식 재판관), 옛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 규정에 대한 합헌 판결/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 판사, 상습폭력 남편에게 '안방 퇴출' 명령

◆ 7월 18일(토)

반인도적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협약이 160개국 유엔회원국 가운데 120개국의 입도적 지지로 채택

◆ 7월 19일(일)

김우중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정리해고 자체 촉구/정부, 실직자녀 중 고생 25만명에게 하반기 학비 면제해주기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2일(수)

제 11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특집> 옥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③

퇴소, 하늘의 별따기

양지마을에 입소하는 것은 곧 '바깥 세상과 영원히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단 양지마을에 들어온 원생이 퇴소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5년, 10년 이상 수용중인 원생이 수도 록하다는 점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원생의 퇴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시설의 장이 원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해 퇴소심사서 및 의사진단서 등 관계자료를 매월마다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이러한 지침은 '쓸모없는 종이장'에 불과했다. 원생들 가운데엔 한 달에 한 번은 커피,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상담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럿이었다. 입소심사와 마찬가지로 퇴소심사 역시 엉터리였던 것이다.

가족면회 방해

따라서 상담을 통해 퇴소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며, 양지마을에서 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면회를 와서 데려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양지마을측은 가족 면회마저도 방해하고 가족이 면회 온 사실을 원생에게 숨기조차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진상조사단과 함께 양지마을에서 나온 이상훈 씨는 곧바로 청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동생과 아들이 세 차례나 면회를 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 씨는 양지마을에 있던 동안, 가족이 면회 온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으며, 면회는 가족들은 "이 씨가 나가서 생활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연락하겠다"는 양지마을측의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또 양지마을에선 전화통화가 허락되지 않으며(공중전화가 한 대도 없다), 편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연고자와의 접촉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퇴소자 명단 조작

심지어 양지마을은 퇴소하지 않은 원생을 서류상에 퇴소자로 기록해 두기까지 했는데, 이는 퇴소시키지 않고

맘껏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병기(41) 씨와 송만성(48)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서류상 기록되어 있으나, 지난 20일까지 양지마을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양지마을에서 미싱 기술을 전수해 온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진상조사단이 다녀간 이후인 20일 갑작스럽게 '귀가'조치됐는데, 이에 대해 문 씨는 "명단에 없기 때문에 풀려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날 퇴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손동수(30) 씨는 지금까지 양지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한(20·서류상 94년 3월 14일 귀가), 김대익(16·94년 4월 7일 연고귀가)씨 등도 서류와는 달리 모두 양지마을에서 생활중이었다.

한편, 양지마을측은 명단에 없는 문 씨와 송 씨를 풀어준 데 이어, 20일 양지마을에서 생활중이던 송원환과 자강원(대전 부랑인시설) 소속의 원생들도 각자가 속한 시설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판 안내

▶ 22일(수)

- 임성욱, 김인숙, 당경욱, 김행미(국보법 찬양·고무 등, 인천교대 사건)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강신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인천교대)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23일(목)

- 백금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고영복(국보법 찬양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조기영(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철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선고

▶ 24일(금)

- 조건수(집시법,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윤창매(국보법 찬양·고무)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신황수 외1(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 1부, 속행
- 권명화(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철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선고
- 송경심, 김재철(선거법, 전철원) 오전 9시 40분, 북부지법 101호, 선고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다른 부랑인 시설은 제쳐두고 우리 만 문제삼는다면 억울해서 따를 수 없다." 양지마을 인권유린 행위의 사령탑인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씨는 이렇게 항변했다. 그렇다면 모든 부랑인 시설이 양지마을처럼 운영될까? 21일 찾아간 부랑인 보호시설 「은평의 마을」(은평구 응암동 소재)은 부랑인들도 자율과 개방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평의 마을」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리스도수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보호시설로 정신질환, 신체불구, 알콜중독, 노인성 치매, 결핵 등의 병을 앓고 있는 2천여명의 부랑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활짝 열린 정문과 낮은 담이 말해주는 이곳의 특징은 '자율과 개방'이다.

「은평의 마을」 수용자들은 공식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외출을 하고 1년에 한번씩 1주일 간의 휴가를 갖는다. 또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담당 수사와의 면담, 심사위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별 무리없이 퇴소가 가능하다. '어떻게 부랑인들을 함부로 내보내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김 베드로 수사에 따르면 여직껏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일과 시간에는 봉투만들기 등의 단순작업을 하거나, 다른 환자를 돌보고, 축구나 수영을 즐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강제적이지 않다.

막노동을 하던 강철수(33) 씨는 올해 2월 종로구청에 요청해 「은평의

마을」에 오게 되었다. 그는 최근 들어 일이 없고, 오갈 데도 없어 예전에 머문 경험이 있는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현재 결핵환자들의 수발을 거두고 있는 강 씨는 "언제든 일하면 담당 사님께 이야기하고 나갈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해 당분간은 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은평의 마을」 전반에 감도는 평화로움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에서부터 배어 나온다. 이 시설의 원장인 김규환 신부는 "철창 안에 가둬놓으면 오히려 위압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된다"는 말로 자율과 개방 속에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곧게 닫힌 철문과 높은 담벼락 안의 양지마을 사람들에게 「은평의 마을」은 천국과 같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랑인 보호의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523호에 따르면, 「은평의 마을」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규정에 충실한 곳일 뿐이다. 부랑인을 감제로 가둬놓는 근거는 법과 훈령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부랑인 보호 시설이 원래 목적에 맞게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희신경정신클리닉 김병후 원장은 "범죄 행위 이외 다른 이유로 함부로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며 "단 정신질환자들 중 증세가 중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치료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건 단지 관리자들과의 관점에서 편하게 통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며, 부랑인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 모두를 위해 시설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부랑인 보호시설의 목적은 부랑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부랑인에 대한 인간

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고 통보, 임산부 유산

금속연맹, "총파업 불가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달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21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을 중지하고 '6·5 노·정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배중에 있는 금속산업연맹 단병호 위원장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수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승사자'로부터 정리해고 통보서를 받아든 임산부 두 명이 끝내 아이를 유산하는 등 수천의 가정 이 파탄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5일,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유보 △부당노동행위 처벌 △체불임금 해결 △노동절 집회와 5월 파업과 관련한 사법처리 중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지난 16일 노조가 제시한 협상안을 무시한 채 2천6백78명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에 들어갔고, 대우자동차 역시 20일 김우중 회장이 수차례 정리해고 자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5백만~1천만원씩의 임금·복지 삭감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천9백95명을 정리해고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정부 또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 1백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구속을 강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속산업연맹 측의 입장이다.

한편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작금의 파국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정리해고 중단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3일(목)

제 11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곤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22일 오전 6시경, 금속산업연맹 울산지부 정책실장 김명호 씨를 비롯한 울산·부산지역 민주노총 지도부와 청년·노동단체 활동가, 학생 등 20명이 부산시경 보안수사에 의해 대거 연행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연행자는 김명호 씨를 비롯,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정대연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선전국장 방석수 △노동단체 '전진 2001' 대표 이정희 △늘푸른서점 대표 박경순 △울산대생 황선순 씨 등 울산지역 17명과 노동운동단체인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 이의영 씨 등 부산지역 3명이다. 이들은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과정에서 울산 '새날을 여는 청년회' 교육국장 이철현 씨가 구타를 당해 중대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연행자들은 현재 부산시경 보안수사대와 경남도경 울산보수대에 구금중이다.

연행 후 가족에게 전달된 체포사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9년 서울대에서 '반재청년동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이를 동원하여 위장하여 전북투쟁의 전위대로 활동해 왔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부산노동자회'나 학생정치조직 '애청' 등 외곽에 이적단체를 결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선동해 오는 등 이적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경측은 특히 "늘푸른서점 대표 박경순 씨가 반재청년동맹 중앙위원으로 영남지역을 책임지면서 조직원에 대한 사상학습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하며, "자세한 조사결과

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울산·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전 결성되었다는 '반재청년동맹'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유령단체이며, 특히 부산노동자회는 공개적으로 출범한 단체로 노동자 교육과 상담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단체"라며 "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현지 간부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절 기념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현충원 활동을 벌인 것을 이적행위로 규정짓는 것은 상

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울산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지지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작스레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행자들은 대개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정리해고 지지투쟁을 지도 또는 연대투쟁에 적극 동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현재 진행되는 정리해고 지지 및 민중생존권 투쟁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2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행사와 동정

- 여성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일회
 - 때: 7월 23일(목) 오후 2시 ·곳: 종로2가 탑골공원 정문 앞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가협
- 진보정당 대토론회
 - 때: 7월 24일(금) 오후 2시 ·곳: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 주최: 대학생신문사
- 실지여성들과 함께 하는 연대의 밤
 - 때: 7월 24일(금) 오후 4시-6시
 - 곳: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설 여성복지회관 강당
 - 주최: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 통일축전 긴급 대토론회
 - 때: 7월 24일(금) 오후 2시 ·곳: 유림회관
 - 주최: 민족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납축추진본부
- 경제위기 책임규명 및 경제청문회 개최 촉구 연대집회
 - 때: 7월 28일(화) 오후 12시-1시 ·곳: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 주최: 노동·시민·사회·종교 제단체
- 제1회 성교육 훈련 워크샵
 - 때: 7월 27일(월)-28일(화) ·곳: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실
 - 주최: 성폭력문제연구소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병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양지마을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사법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양지마을 인권침해 실태와 사법적 대응 방점에 대한 「양지마을 퇴소자 및 인권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지마을 인권침해사태 해결을 위한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양지마을에서 행해졌던 강제노동과 착취는 현대판 노예제로 가장 악랄한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2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최단 4개월에서 최장 9년 7개월까지 강제 구금생활을 했고, 퇴소를 희망했던 상당수의 입소자들도 '독방'에 감금되어 극한적인 학대를 당했던 점은 특수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단 이사장과 시설장 등이 원생들을 각종 작업에 투입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 강요,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가한 것은 형법상 특수강도, 특수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고를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관련법규 어디에도 '부랑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부랑인 수용시설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독료, 하루소식의 힘!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앞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기자회견을 서둘러 마련한 것에 대해 "규모가 큰 복지시설이라 전모를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불구하고, 현재 양지마을에서 진상은폐 및 축소 기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은 양지마을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1차 경과보고일 뿐이며, 앞으로 계속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갑작스런 귀가조치로 퇴소한 문병기 씨는 "사람들이 희망에 차 있으면서도 흔히 그렇듯이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에 잠겨있다"고 16일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양지마을' 파문과 함께 부랑인 시설의 인권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명동에서 시민 30명을 만나 '부랑인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날 인터뷰 결과, 일반 시민들 속에서는 "양지마을처럼 부랑인들을 강제로 감금해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회불안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부랑인들을 함부로 강제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특히 그들의 수용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의 자의성을 크게 염려했다. 한 20대 남성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재활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양지마을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주장. "부랑인이라고 해서 인권이 없나요?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인신매매랑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아서 안된다고 봐요." 반면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또 "양지마을 이사장처럼 불법감금을 일삼은 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체로 부랑인들을 가장파란, 실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사회적 패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시민들이 "부랑인들은 개인적 결함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들의 절망과 무능력은 사회구조적으로 초래된 것"이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4일(금)

제 11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최근 파업과 관련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구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강경 대응이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14일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경 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21일에는 "고양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체포된 노조지도부 5명을 석방하고, 같은 혐의로 수배중인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포함한 1백여명의 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 위협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AI의 주장은 이들 노조 지도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인정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는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실업을 초래하는 공공·금융부문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AI는 또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부와 파업 참가자들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한국정부가 서약한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을 거듭 촉구했다.

아파도 찰는 수밖에

여성 양심수 어려움 호소

23일 오후 탑골공원에서는 민가협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여성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일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선 어린 아기를 둔 부모를 동시에 잡아가는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여성 양심수들이 겪는 고초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년 6개월 동안의 수감 생활 끝에 지난 5월 14일 출소한 안윤정 씨는 "여성 양심수들의 경우 남자 양심수들과 달리

완전히 격리된 독방생활을 해, 그 고립감으로 정상적 생활 능력을 차츰차츰 상실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여성 재소자들은 열악한 교도소 환경 아래 여성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오래 지낸 다음, 하절 등 각종 여성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 당국은 이를 그냥 방치하거나 위급한 경우에도 수많은 절차 때문에 시간을 놓쳐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안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건과 진보민청 사건으로 연이어 부모가 구속당한 생후 22개월의 아기 산하(본지 7월 11일자 참조)도 고모의 품에 안긴 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공안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고모 정미숙 씨는 "산하와 같이 인니를 면회하러 갔던 날, 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말을 잊지 못했다"며 "한창 엄마의 정이 많이 필요한 때인데, 한시라도 빨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속보> 부랑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난 양지마을의 파문이 전국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양지마을측이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검찰도 양지마을을 비롯한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23일 양지마을 관할 대전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가혹행위 및 노무비착복 등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양지마을 원생 3백여 명은 '귀가 조치'를 요구하며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 양지마을(이사장 노재중)측은 원생 가운데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퇴소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료, 하루소식의 힘!
지로번호 7618848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엄청난 인권 유린 실상이 드러났다. 강제납치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이름뿐인 입·퇴소심사에서부터, 강제노역과 강제투약(멸종한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 약 투약)에 이르기까지 양지마을에서는 총체적인 인권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원생들은 입을 모았다.

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도 그 대가가 교차 한달에 8천원에서 1만3천원에 불과했던 이유, 원생들이 양지마을 내 각종 공사를 도맡아 하고도 아무런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사실 등, 양지마을측의 노임 착취와 국고지원금 착복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설에 반항했다는 이유만으로 멸종한 원생에게 정신과 치료약을 먹었다는 증언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1급 목공이었다는 허길선 씨는 노래방기기를 부순 사건 이후 수년간 정신치료를 먹어야 했고, 이에 대해 다른 동료들은 그가 "바보가 다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양지마을에 대한 '칼자루'를 뽑아들기로 함에 따라,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은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강제투약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작업관련 서류와 처방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상을 충분히 밝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양지마을 사태가 부랑인시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사회는 경악 속에 부랑인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해 수선을 떨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97년 장항 수심원에서 인권말살의 현상이 목격됐고, 이번에 또다시 양지마을의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다. 양지마을의 경우는 '형제복지원의 복사판'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왜 똑같은 문제가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 있는가?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부재나, 시설과 관청간의 유착이나 하는 문제점 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0년 전에도 구설에 올랐던 노재중 씨가 여전히 양지마을 이사장의 위치에 서서 무법자대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배경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앞서 '회의적인' 시각은 "부랑인시설 문제가 사회인식의 변화없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다.

「은평의 마을」 김규환 원장은 부랑인에 대해 "단지 무능력화된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단속'이란 말도 잘못됐으며, '보호란 말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도 "부랑인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폐배자'들에 대한 포용과 보호의 시각이 '더럽고 혐오스런 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싶어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한, 계속 제2, 제

3의 양지마을을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집>을 마칩니다.

확대되는 공안탄압

울산시 동구청장 연행

22일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 및 사회단체 활동가 등 20명이 대거 연행된 데 이어, 울산시 동구청장 김창현 씨가 23일 추가로 부산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김창현 구청장은 이미 연행된 16명과 함께 부산시경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단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조승수 북구청장과 함께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 동구청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 21일에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 노조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22일 연행된 울산대 전 총학생회장 임규섭 씨 등 4명은 '울산대 자주대오'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울산 보안수사대에서 따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5일(토)
제 11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연행된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24일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지이념으로 하는 지하 청년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92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 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영남지역위원회'로 재편, 이를 '동창회'로 위장하고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이적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한민전 명의의 각종 이적문건을 통한 사상 무장 △부산·경남지역 장악을 위한 자료 수집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북한동포돕기운동 전개 △노동자 집회·시위시 배후지도 등이 지목됐다. 경찰청은 또 "향후 산하 조직원이 다수일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연행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 소위 동창회 조작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 국민승리21, 전국연합 등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민전은 실체가 없는 북한의 대남선전기관일 뿐이라고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느닷없이 한민전 하부조직이 남한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군사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쓰던 구시대적 용공조작을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은 연행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 이의엽 씨와 '진전 2001' 활동가 이창규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4명의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김창현 울산시 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심사될 예정이다. 석방된 이창규 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회의 내용을 도청한 것에 불과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 연행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차별적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22일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된 것과 관련, 국제엠네스티(AI)가 피에르 썬네(Pierre Sane)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항의서한과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파업과 시위를 친북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정권이 반체제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던 수법인데, 이러한 관행이 인권존중을 서약한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또 "새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는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합법적 파업을 조직하고 체포의 두려움없이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니,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 명중 1백50여 명이 '불법 대인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회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 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1심 재판부는 1백50여 명중 80명에게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96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전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가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독료! 하루소식의 힘
지로번호 7618848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감찬 채 생활

한 출소자가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영준 씨는 교도소 수치를 이겼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장기간 수감이 채워진 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에 가족으로부터 몰래 돈을 차입받다가 들켜 형수정과 수감에 채워진 채 먹방(징벌방)에 두달간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약 5-6일 후 조사실에 다시 불려간 최 씨는 “당신 처도 조사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말에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가족들한테까지 그러냐”고 항의하다가 “조사과 조주임(현재 영등포 구치소 보안과 근무)의 6명에게 ‘비너꽃기’를 한 채로 구타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빨 하나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2개월의 징벌이 끝나 먹방에서 나온 후에도 6개월 19일 동안 목욕할 때를 제외하곤 항상 수감이 채워진 채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씨는 출소 후 조주임을 비롯한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으나 아무 증거 없다는 말에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의 구타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이 안 좋다는 최 씨는 일반 재소자들 중 교도관들의 폭력으로 이빨이나 코뼈를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증언했다.

한편 당시 구타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조주임은 “반항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철창을 발로 차 제지하던 중 수감을 채웠을 뿐 규정대로 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타 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은 재소자에게 수감·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새내기 노동자 재벌과 한판

새내기 직장인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재벌기업과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굴지의 재벌인 현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지난 6월 현대로부터 채용파기를 당한 신입사원들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채용파기에 항의하며 결성된 [98 현대전자 신입사원 입사추진협의회] (현추협)는 24일 오전 10시 ‘책임자 사과와 서약서 철회’를 요구하며 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현추협은 “사측이 아무런 변명도 없이 1천5백여명의 채용을 거부한 후에 다시 올 가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을 선발해 9월에 채용하겠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24일 본사 항의방문에서 이에 대한 답

변을 현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장과의 면담요청을 거절했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11월 총 1천5백명의 대졸예정자들을 공채로 뽑았다가 ‘회사의 긴박한 사정’을 이유로 지난 6월 이들 전원의 채용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현대전자는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월까지도 ‘사업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입사일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사측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채용자들은 갑자기 6월 12,13일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의 호텔로 불려가 입사포기 서약서를 써야 했다. 현추협의 김상현 씨는 “당시 회사가 사전에 서로 면식이 없는 채용자들끼리만 모아놓고는 위로금 2백만 원을 받고 입사를 포기하든지 99년 6월까지 입사연기에 동의하라고 강요했으며, 이에 반발하는 채용자들에게 ‘현대’는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목숨을 각오도 되어있으며 이미 언론에도 입막음을 해놓았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채용을 취소한다고 위협하는 등 강압적으로 동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소식> 미국

양심수는 없다?

인권선진국을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양심수는 존재한다.

최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인권개선’ 압력을 넣고 있던 동안, 미국 국내에서는 마미아 아부자말(Mumia Abu-Jamal) 등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뉴스〉(Workers World News)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는 마미아의 석방을 위한 군중들의 시위가 열렸으며, 앞서 6월 말에는 레오나르드 펠티어(Leonard Peltier)의 지지자들이 워싱턴에 모이기도 했다.

인종차별에 저항해 온 흑인 저널리스트로 미국 내 진보운동의 상징이었던 마미아는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15년째 구금중이다. 또 인디언운동의 지도자 펠티어 역시 경찰관 살해 혐의로 21년째 복역중이다. 〈노동자뉴스〉는 “펠티어의 구속은 미국 인디언 운동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뉴스〉는 또 “정치범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워싱턴 당국의 입장이 한국의 대통령들이 국제회의에서 주장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신념과 사회적 정의, 원주민들의 자치와 독립을 위해 싸운 행동가들이 미연방수사국(FBI)의 ‘반첩자작전’에 의해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군 주둔을 거부하고 민족해방군을 조직했던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자 15명이 여전히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8일(화)

제 11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해고가 빛은 가정파괴

현대자동차, 무리한 해고통지서 전달

거대 재벌의 독불장군식 경영방침이 노동자들의 가정파탄에 이어 두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사태를 일으켰다. 정부의 정리해고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강행방침을 바꾸지 않았던 현대자동차측은 정리해고 통지서를 본인이 아닌 가정으로 전달해 해고자 가족들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다.

현대차는 당초 관리자를 통해 해고자 본인에게 직접 통지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관리자의 안위가 염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우편발송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결국 해고통지서는 당사자가 직장에 출근한 사이 가정으로 배달되었고 대부분 해고자의 아내나 노부모들이 받아보게 됐다.

당사자도 모르고 있던 해고통지서가 난데없이 날아들자, 가족들은 큰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신부 2명이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다. 또한 회사측은 해고대상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본직지로 통지서를 발송해 이를 받아본 노모가 충격으로 실신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이의 돌잔치에 들이닥쳐 강제로 통지서를 전달하기도 해 잔칫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하기도 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회사측의 무리한 통지서 전달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사례가 1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가족들이 실신하거나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노조측은 “피해자들이 회사측의 보복이 두려워 신분공개를 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리한 정리해고로 실직이라는 고통

외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자식까지 잃어야만 하는 해고 가정들. 이 고통은 과연 그들만의 책임일까.

국민의 정부, 엔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난데없는 전복조직사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국민승리 21대표 등 사회단체 인사들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최근 부산, 울산 지역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주장하는 한민전이라는 조직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했다는 범죄사실 또한 공안당국에 의해 황당하게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정대연 씨(울산연합 전 집행위원장)의 부인 박희영 씨는 “노동자·서민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을 이적활동 혐의로 잡아 가

두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울산 지역 주민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대적 토론회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운동 탄압, ‘동창회’ 조작 사건 부산, 울산 공동 대책위원회]는 25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민전 영남위원회’의 실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특히 북한 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라며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모금해 적십자를 통해서 이북에 전달한 것을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지적한다면, 이에 참여한 국민들과 적십자사 또한 이적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측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음비법 칼날 '번쩍'

지난해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 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과 17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 인권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2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

- ◆ 때: 7월 28일(화) 오후 2시
-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종로5가)
- ◆ 사회: 정범구(정치평론가, 방송인)
- ◆ 발제: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 주최: 민가협, 민교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KNCC인권위원회

시한부 인생까지 감옥행

부모 모두 구속,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최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 이적활동을 전개한 혐의(이른바 '동창회 사건')로 구속된 울산·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건강악화뿐 아니라 가정파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늘푸른서점'을 운영하다 한민전 영남위원회 총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박경순 씨. 최근 간경화로 6개월 시한부인생을 선고받고 투병중이던 박 씨는 9살난 아들 정우진 남겨둔 채 부인 김이경 씨와 함께 연행됐다. 홀로 남겨진 정우는 주위 친지 집을 전전하다 결국 서울 외할아버지대에 맡겨졌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낮에는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는 낮선 서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고 있다.

네 살박이 해술이도 정우랑 비슷한 처지다. 노동단체 '전진 2001' 사무국장 임동식 씨와 울산여성회 준비위원회 회장 이은미 씨가 해술이 아빠와 엄마. 해술이는 이번 사건으로 같이 살던 이모마저 빼앗겼다. 해술이의 이모 이희 씨는 금속산업연맹 울산지부 교육부장이다. 유난히 변화에 민감한 해술이는 지금 돌봐줄 친척도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진 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울다 지쳐 잠 들곤 한다. 더구나 해술이의 엄마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

울산 '새날을 여는 청년회' 교육국장 이철현 씨는 연행과 정에서 다리에 우리가 박히는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결국 구속됐다.

이들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구속자들의 주위 동료들은 "소위 인권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곧 쓰러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철창 안에 가둬놓고 감압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소한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만은 미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공판 안내

▶ 29일 (수)

-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 조은호(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김나영(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박재현(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심정웅 외2(국보법 간접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31일 (금)

- 강신호(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주/간/인/권/호/름

(98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 7월 20일 (월)

대우자동차, 2천9백95명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국회 환경포럼, 강원 영월군 동강댐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유엔인권센터, 캄보디아 총선 앞두고 야당 지지자 살해 등 폭력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혀/민가협,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폐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 시작/나이지리아 아부바카르 의장, 내년 5월까지 민정이양하겠다고 밝혀 30년 군부통치 종식 예고/미국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에 적극반대 표명

◆ 7월 21일 (화)

금감위, 5개 퇴출은행 직원들에게 자녀장학금 등 1천여만원 생계지원금 지급/기도/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하기로

◆ 7월 22일 (수)

부산경찰청, 반국가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등 부산·울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연행/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 인권실태 기자회견 가져/서강대 남성일교수 등, 올해 1-4월중 실업자는 총2백54만여 명, 이중 일용직은 5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2% 늘어났다고 밝혀/인도네시아, 급증하고 있는 약탈자들에 대해 발표 지시

◆ 7월 23일 (목)

민주노총 총과업 유보, 노·정 합의사항 이행과 경제청 문화 개혁 등에 합의/통계청, 6월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 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특수학급 1개 이상 설치 의무화하기로/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교수의 간첩활동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대전지법,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부산경찰청, 울산시 동구청장 김창현씨 추가 연행해

◆ 7월 24일 (금)

박상천 법무부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주둔병력 1천여 명을 1차 철수하겠다고 밝혀

◆ 7월 25일 (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발표,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 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나

◆ 7월 26일 (일)

정부·5대 재벌, 임금삭감과 작업시간 줄여 정리해고 최소화하기로/노동부,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제로 확대, 임시·시간제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 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양지는 '별이 바로 드는 땅'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늘진 음식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로 '양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지마을'은 가장 적합한 이름일 것이다. 충남 연기군의 농촌 마을 한 산자락을 차지한 그곳은 지형적으로는 양지임에 틀림없었다.

우리가 양지마을에 '쳐들어간' 것도 벌써 열흘이 넘었다. 언론인들이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고,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감사에 착수했으며, 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정도면 사회적인 파장도 일으켰으니 일이 제대로 될 것을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들려오는 양지마을의 소식에 우려가 앞선다.

노재중 이사장은 퇴소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지만, 저를 다시 만날 사람이 있을 겁니다...말을 막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평소에는 안하무인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반말지껄리에도 폭행까지도 서슴치 않았던 그가 부드럽게 퇴소자들에게 했다는 이 말은 분명 협박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세운 노예왕국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기만 하다. 그는 아마 재기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87년 부산형제 복지원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성지원 원장도 한때 구속되었던 경력이 있지만, 그 위기를 다시 발전의 계기로 삼아 누구도 쉽게 허물 수 없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 않은가. 더욱이 요즘은 부랑인들이 도처에 널린 때가 아닌가.

아직도 협박을 일삼는 이사장

지금 우리 사무실에는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매일 찾아온다. 7월 16일 조사단과 함께 나왔던 이들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감사 이후 새로 퇴소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물어 물어 우리 전화번호를 알았고, 충남에서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이다. 그들

은 23일 원생들끼리 농성을 했고, 그 뒤 퇴소를 희망하는 원생들을 단계적으로 퇴소시킨다는 얘기도 전해준다. 그러면서 '왜 아직도 노재중(이사장) 같은 놈이 구속이 안되냐며 분노하기도 하고, 양지마을에서 '구해준'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하다. 짧게는 몇개월이지만, 5년, 10년의 세월 동안 철저히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듯싶다. 그렇게 만류해도 술 한잔 걸치고 와서는 한풀이다. 10년 일했어도 받아 나온 돈이 백만원의 겨우 넘거나, 채 몇십만원도 안되는 돈을 보여주며, 이게

**20세기말 지금도
노예제도가
질기디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점을
양지마을은 확연히
입증하고 있다**

10년 노동의 댓가라며 따지고 든다. "우리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고통은, 썩어버린 정신은, 우리의 청춘은 돈으로 보상이 됩니까?"

그럴 것이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절해고도, 유형 무형의 공포 속에서 생존 본능으로 목숨을 부지해왔던 이들이 그러다가는 가족 한번 못 보고, 개미고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세상은 너무도 협하게 변했지 않은가. 질치부심, 십년을 한결같이 인 간세상으로는 탈출만을 꿈꾸었던 이들에게 복수보다도 이제는 세상은 일이 갑갑한 상황이다. 더러는 가족들과 연락도 되고, 반갑게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시기도 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도무지 닿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 다시 양지마을 퇴소자들은 서 있다. 그들이 기를 쓰고 새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 해도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도 퇴출당하는 실업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부랑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들의 탓일까.

부랑인들은 차별당해 싸다?

양지마을 퇴소자들의 분노와 무력감에 점령(?)당한 사무실에서 우리는 다시 제2의 양지마을에 대해서 제보를 듣는다. 00동네, 00마을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시설들에서 어떤 인권유린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그들은 전화로 하소연한다. 도대체 사회복지를 내세우는 얼마나 많은 시설들에서 양지마을과 같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 노예의 머릿수로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고, 노예노동의 착취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그 돈들이 공무원들과 공권력과 정치인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누가 알 것인가. 해마다 어김없이 한두건 이상의 시설들의 문제가 파헤쳐졌지만, 성지원 원장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족벌체제의 공고한 노예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회복지의 미명 아래 곳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예로 사육당하는지 모를 일이다.

노예제도는 법률 속에서는 폐지되었지만, 20세기말 지금도 노예제도가 사회복지사업가와 공무원들, 정치인들의 유착 속에서 질기디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점을 양지마을은 확연히 입증하고 있다. 거기에는 부랑인들이나 정신질환자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수용 대상들이 차별당해도 싸다는 반인권의 식이 그 연원을 이룬다. 이 점을 자각할 때 곳곳의 양지마을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히지 않고 햇빛이 바로 드는 땅으로 거듭 날 것이다.

* 오늘 mbc TV 'PD수첩'은 양지마을과 그 속에 갇혀 울부짖는 인간들의 모습을 방영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1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29일(수)

제 11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2백여일 가까운 병원간위탁 반대투쟁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에서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의료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고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내년도 운영비를 ‘용역비’로 책정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방향이 완전 철회되기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 공동대책위」(공동대표) 배상훈 위원장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은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수익성으로 판단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효율성이란 얼마나 많은 결핵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즉 국립결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가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대위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산 국립결핵병원의 기능강화 △중부권의 결핵전담병원 신설 △현재 보건소와 결핵협회에서 관리하는

초치료 이후 재발환자들 중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을 결핵병원에서 수용하는 행정적 뒷받침 △턱없이 부족한 결핵병원의 의료진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국립목포결핵병원의에도 정부는 현재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 도시의 시립, 도립 병원을 포괄하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8월말까지 구조조정안을

발표, 올 연말까지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 보건복지수준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병원노련의 주미순 정책부장은 “각 지역의 국립병원을 찾는 국민층의 비율이 민간병원에 비해 4-5배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병원은 재산성이 아닌 의료시혜활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와 관련, 이들 국립병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인원사감과 정규직의 축소 등 인건비의 축소를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이는 곧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나온 논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너무도 익숙한 교육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논문이 나왔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논문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규율에 복종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그대로 습득할 때만 ‘학생답다’고 보는 신화에 기반해 있으며, 권위주의적 문화와 입시문화가 학교내에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통제의 메커니즘은 억압적인 규율과 처벌장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등을 통해 유지, 재생산되며, 통제와 검열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무방비상태로 체벌과 언어폭력, 검사, 강제적인 보충수업, 교지검열, 자치활동에 대한 억압 등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 또는 유보하도록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이 학생들을 순종적이고 폭력에 길들여진 인간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다른 폭력과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반(反)인권적인 문화와 구조가 확대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종지대로 남아있는 학교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로 양심수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 아래 정부에 대해 준법서약제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2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인권단체측의 입장은 강조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일부에서 준법서약서와 전향서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차이는 없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면, “준법서약서는 명백히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법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말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과 다를 것이 없고 △전향서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게 한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사범에 확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 훨씬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도 “아무리 국가의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의사표명을 강제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관 검사(법무부 검찰3과장)는 “준법서약제는 절대 양심과 지조의 문제가 아니며 법질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해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또 “명분을 버리고 실질을 택해야 한다”며 “일부의 오해가 양심수들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종이 한 장 쓰는 것에 무슨 난리냐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 종이 한 장, 말 한 마디가 얼마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인권의 복원에는 절충이 있을 수 없으며, 보수세력을 의식해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승계한 준법서약서를 강요한다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85년)으로 13년째 구금중인 강용주 씨는 외부로 전한 편지를 통해 “권력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개입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서약서와 타협할 수 없다”며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

선 뚫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주민들은 “건설계획의 재검토 또는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공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 시설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가스관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정압기지가 설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와 이번 공사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민들은 만일 가스기지가 폭발할 경우, 과거 아현동 폭발사고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참사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의 김동영 공무부장은 “4년여의 검토 끝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했고, 정압기지를 올해 안에 완성하지 않으면 남양주 주민들에게 동절기 가스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며 “재검토나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가스공사측의 설명을 주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사가 ‘주민들 몰래’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유지와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통장 교체’를 요구하는 대대적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죄다 병신이나”며 “완공되더라도 이전할 때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완전 철회 촉구 시민결의대회

- ◆ 때 : 7월 30일 (목) 낮 12시
- ◆ 곳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 ◆ 주최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30일(목)
제 11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찍히면 발육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8·15 통일 축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재야인사들의 출국이 원천봉쇄되고 있다. 여기엔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신병 치료차 중국에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장) 씨는 갑자기 출국을 제지당했다.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윤 씨는 출국수속 중 '출국금지대상자'란 설명을 들으며, 여권을 압수당한 것이다. 윤 씨는 '여권 보관 사유서에는 'A'라는 기호만 적혀 있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를 걸었다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씨는 15년 동안이나 심장판막증을 앓아왔으며,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던 길이었다. 윤 씨는 "안기부는 나의 여행동기를 의심하고, 당국 물과 북측과 접촉 혹은 월북할 수도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출국금지에 대한 안기부장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내리겠다고, 그마저 안기부의 압력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사 광고부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저녁 안기부 손 계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해, "윤성식은 중국을 통해 월북할 위험이 있는 요주의 인물로 그런 광고를 내서는 안되며, 만약 광고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 신문사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문 1판에 실렸던 광고는 2판부터 삭제되었다.

또한 최근 뚜렷한 범죄사실도 없이 출국을 제한 당한 사람은 윤 씨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 씨는 아예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다. 박 씨는 일본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박 씨는 "여권발급 제한에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일본에서의

강연 프로그램까지 보여줬는데도 안기부는 계속 북측과의 기습적인 회합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와 접촉하거나 밀입북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말한다.

출국금지조치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는 더욱 빈번해, 96년 12월 화가 홍성담 씨가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 기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출국금지의 구체적 사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 속에서 밀입북 혹은 회합·통신의 우려가 있다고 지목된 이들은 품쪽없이 출국금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광희 변호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한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해외여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28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들을 위안하는 위령제가 충남 영동군 황간면에 자리잡은 '노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치러졌다. 며칠동안 계속된 그 참혹했던 학살이 자행된 지 48년째 되던 날, 바로 그 학살의 현장에서 마련된 위령제였다.

지난 50년 7월 25일부터 29일, 닷새에 걸쳐 노근리에서는 미군이 피난길에 오른 무고한 양민을 대량학살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대책위)의 위원장 정은용 씨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숭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못해 희생당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이번 위령제를 마련했다"며 "미국과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해결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년 2월 현재 당시 학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해도 1백32명에 달한다. 호적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던 어린이들과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까지 따지면 희생자는 적어도 3백여 명에 달할 것으로 대책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량학살이 저질러진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미군측에 "의심기는 피난민은 무조건 살상하라"는 방침이 내려져 있었고 △인민군에 의해 밀려 퇴주하던 미군이 이성을 잃고 복수심으로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다는 등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작업은 9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군에 의해 어린 아들과 딸을 비롯, 일가족이 수십명 동시인명 잃은 정 위원장은 그해 대책위를 결성, 한·미 양국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으며, 97년 8월에는 청주지검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상해배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전투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당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학살 당시에는 인민군과 미군의 교전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전투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잔혹한 전쟁범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군위안부에 대한 배상도 되고 있는데, 명백한 전쟁범죄인 이 사건에 대해서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측의 무책임한 자세

를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함께 유엔인권위원회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사와 동정

□제야원으로, 양심수석방촉구 기자회견
·때: 7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명동 향린교회 1층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시행 완전철회촉구 시민결의대회
·때: 7월 30일(목) 낮 12시
·곳: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대구 A3 미군비행장 주민피해 해결 촉구대회
·때: 7월 31일(금) 오후 2시
·곳: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 앞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양지마을 퇴소, 그후...

지난 16일 인권단체 진상조사단의 방문 이후,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에 갇혀 있던 원생 가운데 2백여 명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러나 생지옥을 빠져나온 '기쁨'도 잠시. 수년간의 감금생활을 끝낸 이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다.

93년 3월 양지마을로 강제납치된 후 5년여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재성(58) 씨는 요즘도 부인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납치된 이후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을 수 없었던 까닭에 부인 한은옥(57) 씨와 생이별한 사이가 되고 만 것이다.

양지마을에서 나온 즉시, 김 씨는 아내와 살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번호는 결번이었고, 집도 다른 사람이 세를 살고 있었다. 김 씨는 부인을 찾기 위해 천안으로, 대구로 주민등록을 추적해 찾아가 봤지만, 부인은 또 경주로 주소를 옮긴 뒤였다. "아내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는 격정에 눈시울을 붉히며, 김 씨는 또다시 경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한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이수연 씨는 뚫어오는 분을 식이지 못하고 있다. 90년 10월 실종된 이래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외삼촌 박상식(62) 씨가 8년만에 돌아온 것이다. 8년만에 만난 외삼촌은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었고, 조카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상해 있었다. 가족들은 박 씨가 다름아닌 대전시청 공무원에 의해 양지마을로 넘겨진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수연 씨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을 8년간 망쳐 놓을 수가 있느냐"며 "노재중이는 물론, 파출소, 연기군청 직원 등 관련자들을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청주의 집에서 오랜만에 평화를 맛보고 있는 이상훈(57) 씨는 5년만에 돌아온 집에서 낯선 아이 둘을 만났다. 큰 아들과 딸이 낳은 손자(5)와 외손자(4)였다. 하지만 손주들의 제복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녀들의 결혼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은 지울 수가 없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7월 31일(금)

제 11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정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30일 진념 기획예산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인 김진균 교수(서울대)와 김기중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기획예산위의 공식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일단 시행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한편 아직 공식적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의 담당 실무자들은 최근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집중 검토한 결과 비용에 비해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어, 행정자치부만이 정부부처 내에서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고집하는 유일한 부처로 남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업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일 99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해 주민카드 구입비 등 총 322억원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신청하고,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포함공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하는 등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감사원은 같은 달 27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나 증명감축 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타 부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석영철 행정자치부 차관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추진하겠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이 재검토 권고를 내리고, 기획예산위원회와 당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왜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정자치부의 독불장군식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즉,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잘못된 정책과정에 대해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실무 관료들의 몸부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집행될 경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내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30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완전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자주민카드 문제는 21세기적인 인권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전 약속에 관한 것”이라며, “만약 현 정부도 구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면 현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책위는 △전자주민카드사업 완전포기 △관련 법률의 재개정 계획 수립 △타당성 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온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인권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조세형 씨 선고공판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

만화사랑방

이동수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

목요집회, 양심수 편지 소개

8·15 사면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양심수 석방 요구가 뜨겁고 준법서약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30일 239회회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는 최근 양심수들과 가족들의 심경을 담은 간절한 편지들을 소개했다.

15척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고간 편지에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한숨,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희망 등 애절한 사연들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92년 국가보안법 위반(‘민애전’ 사건)으로 구속돼 10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수감중인 변의숙 씨는 어머니 여윤옥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식으로서의 죄송한 마음과 준법서약서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변 씨는 편지에서 “어머님은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잊고 학교에 간 어린 딸을 위해 농사일만으로도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10리 길을 마다 않고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의 마중은 끝나지 않았네요. 어머니는 이제 징역 사는 늙은 딸을 찾아 꼬박꼬박 교도소로 마중을 나오십니다. 이제는 제가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가 어머니를 마중하고 싶습니다”라며 가족과 자유를 되찾고 싶은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변 씨는 “준법서약서에 대한 저의 입장 때문에 혹 어머니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부끄러운 결심으로는 어머니를 마중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준법서약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방북 혐의)으로 구속된 시인 박영희 씨. 딸아이의 잠든 모습을 밤새 지켜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그는 “단 하루라도 좋

으니 조각난 달이 아니라 온 달을 볼 수 있었으면...단 하루라도 좋으니 아침에 잠에서 깬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 주었으면...단 하루라도 좋으니 곁없는 편지 한통 써 봤으면...”이라며 갇힌 자의 외로움과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딸 명지를 낳은 지 3일만에 남편 장창호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와 이

별하게 된 차정원 씨는 “준법서약서라니, 죄도 없는 양심수에게 이게 무슨 남벼락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부디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며 이중으로 양심을 구속하는 준법서약제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홍근수 목사를 비롯한 재야원로 49명으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455명의 양심수 전원 석방 △준법서약제 철회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 △반민주악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법회를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기원했다.

경·검 이래도 되나

대 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검찰은 ‘준법서약’을 요구하며,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 대학생에 감압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 아무게 씨는 지난 6월 경희의료원을 다녀오다 연행된 이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6월 13일 오후 5시25분경. 당시 이 씨는 경희의료원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불심검문을 받고 연행됐다고 한다. 이후 중앙경찰서로 이송돼 수사2계에서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받으며, 형사로부터 구타와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수사중이던 형사는 손바닥으로 이 씨의 왼쪽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한 데 이어, 안경을 벗게 하고 다시 얼굴을 가격했으며, 심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배를 때리고, 우산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이어 형사는 “자백하지 않을 경우, 지하실로 끌고가 때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겁이 난 이 씨는 “경희대학교에 들어갔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가 2차 진술에서 이를 번복했으나 불구속 입건돼, 지난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을 계속 강요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307호실(김주원 검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있는 사실대로 자술서를 작성했지만, 검사가 ‘반성하는 게 아니다’는 이유로 다시 자술서를 쓰도록 했고, 조사를 담당한 홍 계장은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계속 검찰의 요구에 불응하자 홍 계장은 “다시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 씨로부터 ‘원하던’ 진술서를 받아내지 못한 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은근한 압력과 함께 이 씨를 돌려보냈다.

한편 홍 계장은 “왜 준법서약을 강요하느냐”는 문의에 대해 “한총련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에겐 준법서약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심검문과 인권」

소책자 판매

·가격: 2000원

·문의: 741-5363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98년 8월

(제1179호 - 제1198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일(토)

제 11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법원, “조세형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대도’ 조세형(54) 씨가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절도죄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역 15년을 복역시키고도 모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 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사건 전 징역 7년을 복역한 뒤에도 한달 만에 재범을 하는 등 상습범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 씨가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15년 내내 ‘엄정독거’에 처해져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억지로 외면한 주장이다. 또한 이미 15년의 복역으로 ‘상습절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 상태에서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것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엄 변호사는 또 “조세형 씨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 등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와 관련, 조세형 씨는 “지금껏 수십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몇 년 더 일찍 나오기 위해 구걸하고 싶지는 않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엄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번 조세형 씨의 재판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을 마친 재소자들을 또다시 장기간 수감토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사법외 처벌’ ‘이중형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다. 조세형 씨도 이러한 사회보호법이 만들어낸 희생자 가운데 하나다.

또한 조 씨가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박영두 씨 살해사건’ 등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이에 관련된 교도관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세형을 내놓으면, 교도소 인권유린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를 계속 격리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민, “돈 살아”

미군비행장 이전 촉구

30년 이상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대구지역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A3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1백여 명은 31일 [미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회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상경,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구 A3 미군비행장 주민피해 해결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비행장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이명 현상 △야간 비행훈련에 따른 숙면 방해 △기와장이 부서지는 등의 가옥 파손 △통신두절 △미군들의 범죄 등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 96년에는 헬기가 주택가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주민들의 생명권마저 함시적으로 위협 받고 있다”면서 미군기지의 이전과 반환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도 주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지만 당국은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고 밝혔다. 또한, “97년에 비행장 이전문제가 ‘한·미 미군기지이전 특별협상’ 안전에 포함됐다가 지난 6월 미군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며 당국의 무성의함과 미군측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제 주민들 스스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항의집회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재개와 피해 해결을 계속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족식

· 때: 8월 3일 오전 10시

· 곳: 향린교회 1층 강당

<인권하루소식> 98년 7월분 총목차(1157-117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57	7/1	1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신 가부장제로 여성차별/진보단체 탄압에 각계 사회단체 공동대응 - "이적규정 좌시않겠다"
		2-3	98년 6월분 총목차(1137호-1156호)
1158	7/2	1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 진보네트워킹 추진위 발족
		2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레토론회 - 이주노동자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1159	7/3	1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만화사랑방〉 이룸만 바뀐 전향제도
		2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사상전향제도의 역사/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1160	7/4	1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법원, 고문경관 이근안 소제탑지 명령
		2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려 2개월간 '난동' 준비"
1161	7/7	1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전재천 씨 구명운동, 각계인사 서명 활발
		2	<요약>사형수 전재천 씨의 편지-"지난날을 돌이키며 반성합니다"/주간인권호름(6월29일-7월5일)
1162	7/8	1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고용불안 감소속 심각/보충수업 일방결정 반발 - 대전 교사들, 관료행정 비난/성모병원노조 한판 승리 - 노동청, 노조출입보장 약속
		2	국제사회주의자,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서울대, 열사들 명예졸업장 수여 보류, 의견수렴 미진 이유
1163	7/9	1	근로자 파견제 시행 -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광고〉 '탈심검문과 인권' 소재자 판매
		2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안양시민, 안민청 석방호소
1164	7/10	1	김·경·법원·감옥 합작유린 - 누명 쓰고 3년 복역,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만화사랑방〉 조선족 동포 사형수 전재천 씨
		2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전라상태 환자차지/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여성실업 대책 촉구/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1165	7/11	1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 휴식시간 빼앗아/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2	진보민청 사건, 부부 구속 -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양노총, 노사정위 탈퇴/〈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 카빌라 정부, 계산된 석방
1166	7/14	1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8·15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2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주간인권호름(7월6일-7월12일)
		3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167	7/15	1	'국제미아'된 탈북자 - 김용화 씨, 생사기초에 놓여/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2	제개발지역 무법자를 심판하라 - 각계 사회단체, 다원건설 형사고발/AI, 파업 집압 자제 촉구/전학현 항소심, 원심확정/〈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168	7/16	1	고객돈으로 명퇴금 잔치? - 장은중경 노조, 진상규명 촉구/경찰의 편, 시민의 불편 -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폐쇄
		2	투쟁만이 살길이다 -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민교협·학단협 성명/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 단식중 쓰러져 - 한총련 탄압 중단 요구
		3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인권하루소식> 98년 7월분 총목차(1157-117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호외	7/16	1-2	양지마을 속보 - 불량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진상조사단 긴급 파견
1169	7/18	1	충격! 양지마을 -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만화사랑방〉 참혹한 양지마을
		2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호외	7/20	1	<특집>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① 구타와 가혹행위
1170	7/21	1	<특집>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 촉구
		2	'전재천 씨 구명', 탄원서 전달 - 부산지역 시민, 구명운동 동참/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 3일간 하루 감옥체험도/주간인권호름(7월13일-7월19일)
1171	7/22	1	<특집>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③ 퇴소, 하늘의 별따기
		2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 또 다른 불량인 시설, '은평의 마을'/해고통보, 입산부 유산 - 금속연맹, "총파업 불가피"
1172	7/23	1	또 다시 공안 칼바람 -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2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1173	7/24	1	비난받는 '파업 탄압' - 국제엠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양지마을 파문 확대 - 검찰, 전국 불량인 시설 내사 착수/여성 양심수 감옥안 교통 호소 - 아파도 참을 수밖에
		2	<특집>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확대되는 공안탄압, 울산시 동구청장 연행/〈만화사랑방〉 다양한 노동자 탄압
1174	7/25	1	부산경찰청, 부산·울산 조직사건(일명 동창회 사건) 중간수사 발표-"북한의 '한민청' 지휘아래 활동"/김대중, 과거 답습 -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민간인 불법사찰, 국가배상-대법원 확정 판결
		2	안양교도소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호소 - 징벌 끝나고도 수감차고 생활/현대신입사원, 일방적 채용과기 맞서 투쟁
1175	7/28	1	해고가 빛은 가정파괴 - 현대자동차, 무리한 해고통지서 전달/부산·울산 조직사건, 각계 비판 여론 거세/지난해 수원·안양 인권영화제 집행위, 음비법 위반 벌금형
		2	시한부 인생까지 감옥행, 부모 구속...아이는 '어린이집'으로/주간인권호름(7월20일-7월26일)
1176	7/29	3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박대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	결핵환자, 일단 숨들려 -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표명/〈새로나온 논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원 교육학과 배경내)
		2	"계구명으론 나갈 수 없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 남양주 주민 가스기 설치 건설 반발
1177	7/30	1	찍히면 발뚱이다 -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2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양지마을 퇴소, 그후
1178	7/31	1	'전자주민카드'에 목숨걸 행자부 -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만화사랑방〉 이중적인 양심수 정책
		2	목요집회, 양심수 편지 소개 -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김·경 이래도 되나 -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4일(화)

제 11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동포돕기 이적매도 비난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주민 반발 거세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부 행사의 하나로 규정하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중인 부산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공책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남위원회가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부행사의 하나로 추진했다는 것이 다른 사회단체들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부행사로 조작한 사건 규탄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영수 외 13인)는 1일 성명서를 발표, “부산경찰청은 책임을 회피하려하지 말고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용공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경찰의 기자회견은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이 조작된 것이며, 북한동포돕기 행사를 김정일 보위부행사로 규정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산경찰청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달 24일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97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김정일 보위부행사로 모금활동을 해, 울산지역에서 3억5천만원, 부산에서 1억8천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을 모금, 북한동포돕

기 운동부서에 송금’했다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김정일 보위부행사의 하나로 규정했던 부산의 1억8천만원은 지난 96년 60여 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저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부산연석회의]가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전액 납한 적십자사를 통해 이북에 전달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산지역 시민, 종교단체는 북한동포돕기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이라 주장함으로써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 사업에 동참한 수많은 시민, 종교단체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매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번 부산경찰청의 발표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를 꾸리고 법적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30일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보안과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울산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창현 동구청장 및 사회단체 인사 석방을 촉구했다. 「동구주민대책위원회(준)」는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96년 12월-97년 2월의 노동약법개정, 노동자 생존권 확보투쟁을 배후에서 지도했다’는 부산시경의 수사발표에 대해, “은 국민이 공감하고 현 집권당인 국민의회마저 지지

했던 노동약법 개정투쟁이 어떻게 반국가 행위냐”며 당국의 수사를 비난했다. 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노동자투쟁을 울산의 몇몇 사회단체 인사가 지도했다고 하는 것은 열도당도없다”고 비판했다.

‘열사 명예회복’ 청신호

범국민추진위 결성

유가족들의 외로운 싸움이었던 ‘민주인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이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계 초·재신 의원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3일 40여개 사회단체들이 명동 향린교회에 모여 ‘민주인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운동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열사범추위)를 결성했다.

열사범추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 법안을 마련, 9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추모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이부영, 이미경 의원과 국민의회의 이길재, 장영달 의원을 만나 9월 정기국회에 특별법 상정에 대해 약속받은 바 있다. 그 동안 유가족 등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상규명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을 받았지만 입법화 조짐을 보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열사범추위의 상임대표에는 김상근 목사와 김현 원불교 중무원장, 청화스님, 이창복 의장 등이 선임됐으며, 전국연합, 민가협, 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4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운동과 함께 민주인사 명예회복추진 및 기념주간 행사를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공판 안내

- ▶ 5일 (수)
 - 인미숙/이봉제(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 7일 (금)
 - 조원길(국보법)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속행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들 조건없이 석방하라

우리는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집권하면 이 나라에 양심수가 없게 하겠다고 공약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실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98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첫 사면은 수많은 양심수 중 74명만 석방, 사면 취소 등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감까지 들게 하였다.

98년 7월 25일 현재 40년을 넘게 자유를 박탈당한 우용각 선생을 비롯한 17분의 초장기수들을 포함해 455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달리 양심수에게만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엄청난 수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 이후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 청년들의 수는 무려 23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선자치단체장까지도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중세의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르며 독재정권의 폭압통치와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 이후 구속되어 조사중이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한총련과 범민련,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코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양심수의 석방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인권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약법을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 성명서는 지난 7월 30일 재야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편집자주>

주간/인권/호/름

(98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 7월 27일 (월)

국민회의, 석방 2백94명·미결수 237명 공소취소·42명 수배해제·9백36명 복권 등 시국사범 및 선거사범 사면·복권 대상자 1천6백36명 명단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 키로/부산지역 30여 개 시민·노동단체, 울산 동구청장등 15명 구속에 대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보건복지부,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폐지키로

◆ 7월 28일 (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러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출국 금지/충남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주민들, 미군학살 희생자 위령제 지내/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외무장관들, 실업 및 빈곤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대표자회의’ 창설

◆ 7월 29일 (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김대중 대통령에 ‘양심수 전 원석방’ 탄원/광주시, 5·18항쟁 관련 4백9명에게 보상금 주기로 결정/방송위원회, KBS <일요스페셜> ‘술선 호야스’ 기자의 평양일기’에 대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 불허/스페인 대법원, 호세 바리오누 전 내무장관등 3명에 대해 ‘더러운 전쟁’ 관련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일본 교육과정심의위, 초·중학교 교과내용 30% 감축과 주 5일제 수업을 뼈대라한 교육개혁안 공개

◆ 7월 30일 (목)

재야원로들,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모든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강북 영춘초등학교, 특수학급 수업료로 석달에 1백50만원 가량 받아/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 5기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한국 소비자보호원, 먹는샘물통과 젓병, 캔음료 등에서 환경호르몬 검출했다고 밝혀/보건복지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세대주의 사망,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한계계층에 내년부터 ‘긴급구조제’ 도입키로/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동대책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집회 가져

◆ 7월 31일 (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대도’ 조세형 씨에게 ‘제법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감호 7년 선고/대구시 주민 1백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받은 데릭 벤틀리에 대한 판결을 46년만에 뒤엎고, 사후 사면결정/박노해, 황인욱, 김성만 씨등 양심수 50여 명 준법서약 제출

◆ 8월 2일 (일)

교육부 관계자, “시국관련 해직교사 내년 3월 복직 허용키로”/양지마을 인권유린 관련, 총실장 이상덕 씨 구속/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집계, 결식 초·중·고생 9만8천8백여 명 달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5일(수)

제 11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공권력의 횡포와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5시경 명동성당 앞길에서는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차량을 일방적으로 막아 세우고 이들의 통행을 한시간여 동안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배석범(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등 민주노총 간부 5명이 탑승한 썬로퍼승용차가 수배중인 단병호 금속연맹 위원장이 자주 탑승하는 차라는 이유로 정지시킨 채, 신분도 밝히지 않고 탑승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동원돼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그 시각 주변에 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해 줄 것"을 경찰측에 요청했으나, 전투경찰 기동대 간부(경사)는 "법대로 하면 어떻게 범인을 잡나"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중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민주노총측에 사과하는 것으로 이날 사태는 마무리되었으나, 앞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던 기동대 간부는 "이걸 사과로 생각하지 말라"며 계속 흥분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불법검문 문에 이어, 경찰은 불법주차를 취재하던 기자에게도 횡포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가톨릭신문사의 한 기자가 명동성당 앞에서 중앙극장에 이르는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는 경찰차량을 취재하려 하자, 중부서 소속 경찰차량의 한 운전자는 카메라를 손

으로 가로막는 등 취재를 방해하고 나섰다. 이에 천주교인권위 관계자들이 운전자에게 신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운전자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옆을 지나던 행인 한 명이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서측은 경찰차량이 명동일대의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데 대해 시정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경찰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고려대에서 개최된 서총련 통일축전의 참가자들을 전원연행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자, 이에 대해 당국의 과잉대응을 비난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4일 "경찰당국은 행사가 끝난지 3일째가 되는 오늘까지도 고려대를 원전봉쇄하는 뜻지못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진해산과 귀가요청은 고사하고 부모와 함께 귀가하는 학생까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또 "한총련 6기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안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토벌작전을 방불케하는 탄압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뿐더러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구시대적 공간폭력행위"라고 비

난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도 "폭력집회가 아닌 문화행사 중심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행사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고리핵발전소 노동자 사망

방사능피폭 여부 우려

3일 낮 12시경, 부산 기장군 고리핵발전소 1호기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한광우(37) 씨가 사체로 발견돼 방사능유출여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한광우 씨는 이날 작업용기 내부에서 배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은 시간당 1밀리렐의 피폭을 받는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한 씨가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나, 오는 6일 정밀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사고와 관련, 녹색연합은 "고리 1호기는 수차례 방사능누출사고와 방사능과다피폭문제도 지적받아온 바 있다"며 "한 씨가 방사능 피폭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반핵운동본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해 "고리 원전은 가동 20년도 되지 않아 핵심부품의 균열과 부식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한전은 위험한 고리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2,3,4호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리 1호기에서는 지난 7월 3일 주민들과 기장군청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증기발전기 교체공사 도중, 노동자 조규철 씨가 용벽붕괴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에도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공사강행을 비난하며 정부당국의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이 없어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자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체류 중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되자, 지난 4월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그런데 일본정부 또한 김 씨가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을 송환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김 씨는 이에 불복, 퇴거처분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0일 재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송환시한을 이를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강제송환 정지처분이 내려졌는데, 여기엔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의 [김용화 구명모임]은 "일본 정부가 김 씨에게 좀체로 도피처를 제공하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선례로 남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철회하고 인도주의적 처원의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궁극적으로 김 씨에게 필요한 건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며, 국내외 인권단체들에게 [김용화 씨 구명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김 씨 문제는 이미 결정난 것"이라며, "탈북자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김 씨는 중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탈북자' 심사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족 인권 안중에도 없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물의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강행 방침 아래, 노동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4일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회장 이영자)는 "회사가 가족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섞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남편을 만나러 온 조합원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용역경비를 동원해 거친 행동을 하는 등 폭력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측은 해고통지서를 가정으로 발송한 후 전화통화로 희망퇴직을 강권하는 등, 주로 노동자 부인들을 상대로 정리해고 공세에 벌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부가 유산하는 등 무리가 잇따랐다. 그런데 최근

한 근속사원의 부인이 남편의 정리해고문제로 회사 이사를 면담하던 중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사측의 무리한 해고방식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 박 아무게 씨(생기부)의 부인은 "지난달 26일 회사측 최 아무게 이사 와 박 아무게 부장과의 면담에서 희망퇴직 요청을 거절한 뒤, 남편이 정리해고 된 사유를 물었지만 '제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말만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사도중 '애인은 있느냐' '춤을 출 줄 아느냐' '그런 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등 인격 모독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측은 또 "지난달 24일 아기를 데리고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해 주러 왔던 부인이 30여 명의 용역경비에게 거칠게 제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사내집회에 참석한 가족들이 정문에서 경비들에게 떠밀려, 그 과정에서 아들을 보러왔던 노모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아이들을 비롯한 10여 명이 온몸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98. 양심수가 없는 나라"

- ◆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선포식 및 기자회견
 - 때: 8월 6일(목) 오전 10시
 - 곳: 명동성당 특설무대
- ◆ 퍼포먼스, '인권타임캡슐'
 - 때: 8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 곳: 명동성당 입구
- ◆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감옥체험'
 - 때: 8월 6일(목)-8일(토)
 - 곳: 명동성당
- 참가자: 김혜수(탈렌트) 박주현(변호사) 명계남(배우) 등 21명
- ◆ 인권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 때: 8월 6일(목)-8일(토) 오후 2시
 - 곳: 명동성당 입구
-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표집회 '아빠, 보고싶어요!'
 - 사회: 문성근, 임수경
- ◆ 양심수 자녀들의 '희망그리기'
 - 때: 8월 7일(금) 오후 2시-5시
 - 곳: 명동성당
- ◆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 때: 8월 7일(금) 오후 6시-9시
 - 곳: 명동성당 특설무대
- ◆ 콘서트 '양심수가 없는 나라'
 - 때: 8월 8일(토) 오후 6시 30분
 - 곳: 명동성당 특별무대
 - 사회: 여균동(영화감독) 최광기(전문 사회자)
 - 출연: 김중서, 박은옥, 정태춘, 시나위, 전인권, 조국광춘, 한영애 등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6일(목)

제 11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충남 연기군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상 및 비리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서 인권유린 및 노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원장 박종구) 교체 또는 법인 이사장(노재중)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관할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감독소홀 사실이 드러난 연기군청의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를 지시하고, 양지마을측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양지마을측이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내릴 계획이다.

5일 복지부의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7월 16일 인권단체 진상조사단이 방문·조사한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양지마을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원생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최장 15년 4개월에서 평균 3년 4개월간 수용한 사실이 있으며, 원생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외출도 허용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생활실을 폐쇄했다며 불법감금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원생들을 건축공사와 작업에 투입시키고 이들을부터 인건비와 노임, 수익금을 착취한 혐의와 미자격 직원을 채용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양지마을 원생 2백9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98명,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조치원경찰서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양지마을에서는 직원 17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 안해 미진한 부분 많아

그러나 이날 복지부의 발표는 전체적인 실사(實査)를 결한 감사로 나타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사장에서 원생들이 일을 시작한 것이 97년 2월부터"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원생들은 공사가 97년 이전부터 진행되었음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또, 미자격으로 채용된 직원 역시 복지부가 지적한 남자직원 한 명뿐이 아니라, 여직

원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복지부는 입소관리에 있어 상담이 실시되지 않은 점만을 지적하고 있으나, 조치원·천안 역전 등지에서 원생들이 강제 납치된 사실과 이와 관련된 경찰과 지방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밀약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번 감사의 결함으로 지적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복지부 감사 발표와 관련, "양지마을과 송원원의 비리는 노재중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법인 천성원 전체의 비리와 연계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천성원에 대한 법인감사를 하지 않은 점은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하며, "법인 감사가 빠진 부분적 감사는 '문어발 한두개를 자르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시·도지사에게 전국 43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지시했다(관련내용상자 참조).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

- 입소심사시 연고자 조회, 사회복귀가능성 등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
- 월 1회 이상의 상담 및 필요시의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 생활실 등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사례 등
- 원생의 자유로운 전화·서신연락을 위한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여부
- 원생의 사회적응능력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보도사업 실시 경우 수익금배분의 적정성과 통장 등의 불법관리 사례
- 폭행, 감금 등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례
- 원생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인 외출 등의 실시여부
-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 원생을 건축공사에 투입하고 노임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
- 부랑인선도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요원, 생활지도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여부
- 직원으로 부적격한 원생을 본인도 모르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부당 취득하는 사례
- 심사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로 퇴소시키는 사례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살기좋은 용산]이란 표어는 좋지 만 사람이 살아야지, 돈만 살아서 뭐 합니까" 도원동 재개발지역의 한 세입자는 분노를 토해낸다.

지난 4월말의 골리앗 철거를 끝으로 강제철거가 완료되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도원동 재개발 현장. 공사장 한 귀퉁이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 그들은 강제철거로 자신의 보급자리를 잃고 밀려난 세입자들(주거연합회원)이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 매일 긴장의 연속이다. 며칠전만 해도 삼성건설측이 공사장과 세입자들의 천막 사이의 펜스를 일방적으로 뜯어내 이들을 분노케 했다. 지금은 펜스가 튼긴 자리를 나무 판으로 영기성기 막고 있을 뿐, 공사

장 귀퉁이의 이 천막은 아슬아슬하기 만 하다.

펜스가 튼기던 날, 세입자 유옥연 씨의 11살 짜리 딸은 학교로 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지난 4월 사무실과 집이 강제철거되던 날의 악몽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마치못해 학교로 향하면서도, 딸은 "내가 학교 간 사이에 엄마, 아빠가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지"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가난하지만 이웃들과 함께 도우며 사는 것이 꿈이기에 이곳에 남아 계속 싸워온 유 씨. 하지만 가끔씩 마음에 걸리는 건 어린 자식들이다. "가난이 불편하긴 해도 초라하거나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가르쳐왔지만, 이 생활이 자식들에게 멍으로 남을까봐 걱정"이

라고 눈물을 글썽거리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에도 조합이나 건설회사, 구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4일 오후 용산구청은 용산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구청 앞에서 노숙중이던 세입자들(전철연 회원)의 비닐천막을 철거하고 주민 7명 전원을 연행해 했다. 세입자들의 '가수용시설' 건립 요구엔 여전히 안된다는 대답 뿐이다.

한편 재개발 공사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45억원이 인상되었다. 그 돈은 "철거용역 비용, 관할관청 상납비용,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간부 간의 나눠먹기식 비리속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철거민들은 주장한다. 가옥주들은 재개발을 통한 재산증식을 꿈꾸다 오히려 재산피해를 보고, 세입자들은 가수용시설 건립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고용된 철거용역들로부터 온갖 폭력에 시달리다 삶의 터전을 잃는 악순환이 도원동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행사와 동정

□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 때 : 8월 6일(목) - 8일(토) · 곳 : 명동성당일대
- 주관 : 민가협(자세한 행사는 본지 8월 5일자 참조)

□ 현대자동차정리해고 진상조사 결과보고

- 때 : 8월 6일(목) 오전 11시 · 곳 : 참여연대 강당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창립준비위 결성식

- 때 : 8월 12일 오후 7시
- 곳 : 대우호텔제단 빌딩 3층 세미나실(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출구)

□ 동성애자 인권캠프 '이반들의 수다떨기'

- 때 : 8월 14일-16일(14일 오후 3시 청량리역 출발)
- 곳 : 가평 두레마을
- 참가대상 : 동성애자/트랜스젠더/성적소수자를 지지하는 이성애자 등
- 참가비 : 2만7천원(13일까지 신청할 경우)

■ 8·15 통일대추전 행사

<강변영화제 및 강변가요제>

- 때 : 8월 7일(금) - 13일(목) · 곳 : 한강 교수부지 <민족대토론회>

· 때 : 8월 13일(금) 오후 2시-6시 · 곳 : 세종문화회관

<8·15 해방 53주년 기념과 남북합의서 실천을 위한 범민족단합대회>

- 때 : 8월 15일(토) 오전 10시 · 곳 : 장충체육관

<8·15 통일대추전>

- 때 : 8월 15일(토) 오전 10시 · 곳 : 관문점

<통일거리축제>

- 때 : 8월 15일(토) 오후 2시-6시 · 곳 : 장충단공원-시청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인영화 등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한국통신 등 19개 공기업의 자회사 가운데 40개사를 민영화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5일 청년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최혁)는 "민영화 강행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청년진보당은 "기간산업에 매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만성적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만을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5일 정부의 미취업 신규실업대책과 관련, "정부의 대책은 대졸자와 졸업예정자들에게 임시직, 또는 인턴사원 등으로 불완전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수취상의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실업수치 조작대책'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승리21은 신규실업 등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7일(금)

제 11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노동자들은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섰지만, 자본은 그 목숨까지 요구하며 노동자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1천6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내린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문정현 신부, 한병희 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원순 변호사,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진상조사단'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31일부터 6일간 울산 현지에서 진상을 파악한 결과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숨 빼고 다 내놔다

실제로 이번 정리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노조측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일자리만 남기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선 상황이다. 노조측은 이미 지난달 16일 2천5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삭감과 6개월간의 순환휴가 및 주 35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고 통분담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심지어 노조측은 휴가기간의 임금 중 30%를 노조기금으로 부담하겠다는 파격적 제안까지 내놓았으며, 추가로 △평화선언(무쟁의선언) 및 고용안정 협정 체결 △추가 임금삭감 △희망퇴직자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센터 개설 △수능 및 창업 지원 △리콜지원 △노사화합한마당 개최 등의 제안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자들의 대안 제

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협상시한이 너무 늦었다"는 구실로 노조와의 협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긴박한 해고 사유 없어

또한 진상조사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는 정리해고를 감행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최근 현대그룹이 울산방송국, 울산 주리원백화점 인수에 이어 기아자동차 인수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리해고를 감행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97년 영업분야에서 8천1백24억 원의 흑자를 내고도 비영업분야에서 7천6백58억 원의 적자를 냈다"며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방안하고 불건전한 경영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는 '노조 활동가 제거'

결국 이번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필요보다도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제거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회사측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데다, 노조에서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과 순환휴가 등의 제안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대상자 역시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회사측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 노조상근간부 26명을 모두 해고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노동부 경고에 따라 11명의 간부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해고 대상에는 1백15명의 현직 노조간부들과 전직노조위원장 2명 등 핵심적인 노조 활동가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석운 소장은 "IMF시대 경영악화를 방지해 노조의 핵심간부를 제거할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질차상 하자는 없다"며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빌미로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역여론, 정리해고 철회 촉구

한편, 울산 공장 내에선 약 5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도로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중이며, 7월 20일부터 이현규, 정갑득, 윤성근 씨 등 전직 노조위원장 3명이 1백미터 높이의 굴뚝 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정리해고 통보로 임산부가 유산한 경우가 4명이나 되며, 농성중인 가족 가운데 임산부들이 많아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여론 역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권력의 투입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또 울산시 중구청장 등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회사측에 정리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현대그룹에서 즉각적으로 대화를 재개해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처방"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인권이 사태진행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비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보랏빛 손수건을 쓴 어머니들은 또다시 명동성당으로 모여들었다.

6일 명동성당에서는 8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될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첫날의 막이 올랐다. 오전 10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양심수의 조건없는 사면"과 "양심수를 양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과 구제도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인권타임캡슐'이란 이름 아래 펼쳐진 퍼포먼스에선 전투경찰의 방패, 곤봉과 푸른 수의, 포승줄 등 인권침해의 갖가지 상징물들이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행사에선 출소 장기수 김선명(95년 석방, 45년 복역) 씨가 0.75평 독방의 축소모형을,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바 있는 박춘철('말' 지 사장) 씨가 이근안의 사진을 던져 넣는 등, 인권피해자들이 각각의 상징물을 타임캡슐에 묻는 시간을 가졌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3일 내내 명동성당 입구에서 진행될 '하루감옥 체험'의 첫날에는 시인 객재구 씨, 텔런트 김해수 씨, 변호사 박주현 씨 등이 참가해, 양심수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한번도 감옥에 갇혀 본 적 없는 이들은 교도관들의 위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0.75평 감옥에 갇혀 저녁 6시경까지 하루를 꼬박 그 안에서 보내야 했다. 배우 명계남 씨 등은 교도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다 징벌을 받기도 했다.

감옥체험의 하루가 거의 끝날 즈음 포승줄에 묶인 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박상환 교수는 "감옥 생활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다"며 "양심수 문제와 텔레야 뭘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배우 박광정 씨는 "사실 조용하게 경험하고 싶었

전북에서도 캠페인

전북지역에서도 양심수 석방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전북 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며 전주시내에서 거리서명과 리본달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6일까지 1천6백여 명의 시민들과 종교·사회단체, 시·도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또 6일 오후 4시 전주 중앙성당 앞에서는 '하루감옥체험' 행사가 마련돼 오경숙 전북민가협 회장, 이강실 전북여성운동연합 의장, 조지원 전주시의회 의원들 각계인사 10여 명이 양심수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행사 도중 시민 최영아(39세, 주부) 씨가 자발적으로 '하루감옥체험'에 동참하기도 했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전북지역 23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향서와 본질적으로 다름없는 준법서약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양심수 캠페인'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명동의 길목길목에선 경찰의 강제적 불법검문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또한 경찰의 불법 불법검문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 2명을 비롯해 12명의 '불법검문 감시단'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6일 오전부터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아선 채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강제로 검문하고, 정당하게 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장시간 통행을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특히 민가협 목욕집회 시작될 무렵인 저녁 6시경에는 아예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 "학생들은 들어갈 수 없다"며 통행을 가로막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활동을 전개한 '불법검문 감시단'은 '집회방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을 경찰에 계속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제한을 풀지 않았다.

저녁 7시경 불법검문을 둘러싸고 전경과 시민의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서울1기동대 75중대 소속 기동대원들은 갑자기 불법검문 감시단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감시단원 몇 명이 경찰에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이 연행되어 간 중부경찰서에서는 별 이유도 없이 연행돼 온 사람들의 처리를 놓고 부서간에 서로 수사를 떠넘기는 웃지 못할 광경마저 연출됐다. 연행된 이들은 곧 풀려났지만, 무리한 검문에 항의하던 사람들을 강제연행한 경찰은 그 책임을 쉽게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또다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되는 '양심수 석방 캠페인'이다. 올해는 특히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드높고,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양심수 석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처럼 보수·공안세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해 기대만큼 사면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와 우려 속에 다가오는 8·15사면의 초점은 역시, 김대중 정부가 '양심수 전원석방'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 과연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권과 차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6월항쟁 직후 최대규모 석방

5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가장 대폭으로 양심수 석방이 이루어진 때는 6월항쟁 직후인 87년 7월 9일이었다.

풀어오르는 민주화 요구에 밀린 전두환 정권은 6·29선언에 이어 7·9 사면조치를 단행해, 당시 시국사건 관련 기결수 4백43명 가운데 3백57명을 석방하고, 3백50명에 달하던 수배자 중 2백70명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이른바 '좌익사범'들과 김근태, 장기표 씨등 명망있던 민주화운동가들을 사면에서 제외함으로써 양심은 계속 남게 되었다.

7·9사면 이후 두 번째로 대규모 양심수 석방이 이뤄진 때는 88년 12월 21일. 노태우 정권은 그해 2월 27일 대통령 취임 특사로 1백25명의 양심수를 석방하고 8·15 가석방을 통해 36명의 양심수를 풀어주는 등 여러차례 사면복권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88년 하반기 들어 국민들의 5공청산 요구가 거세지고, 특히 전두환에

대한 구속체벌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자, 정국 돌파를 위해 또다시 양심수 석방 카드를 꺼내게 된다.

결국 12·21 사면을 통해 노태우 정권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김현장, 문부식 씨 등 2백81명의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자 61명에 대해 전원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

물론 이때의 사면 역시 각계의 요구에 턱없이 못 미쳤으나, 다만 노태우 정부가 양심수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감구한 점은 주요한 선례로 남게 된다.

노태우 정부, 미결수도 석방

노태우 정부는 당시 기결수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 조치 외에도, △수사 중인 30명에 대한 구속취소 △재판 계류 중인 1백23명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김덕룡 씨등 14명에 대한 공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현 김대중 정부가 기결수만을 대상으로 사면 논의를 진행중인 것보다 오히려 전향적인 태도였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배반한 정부였다. 김영삼 정부가 양심수 석방 시능을 보인 것은 93년 3월 6일과 95년 해방 50주년 기념 특사 때. 그러나 각각 1백44명과 25명의 양심수만을 석방했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술한 양심수를 양산해냄으로써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다.

8·15 특사, '인권의지' 평가

김대중 정권은 올해 3월 13일 양심수 문제에 대한 첫 시험대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풀려난 양심수는 고작 74명. 민가협이 집계하고 있던 4백78명의 양심수 가운데 15%에 불과한 수치였다.

8·15를 앞둔 지금의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와 달리 "보수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15 사면의 결과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의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8일(토)

제 11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3개 인권단체는 대검찰청에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씨등 8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는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퇴소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양지마을 퇴소자 이종화 씨 외 33인의 고소인들은 양지마을측이 형법 제 278조의 특수감금, 278조 1항의 감금치상죄, 34조 2항의 특수강도, 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이덕우 변호사 등은 “특히 양지마을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해 ‘사실 교도소’를 설치하고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행 법률체제상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용해 피고소인들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며 “즉시 구속수사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치부한 재산에 대해 신속히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피고소인들이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개인적인 부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빙자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 편취하는 등 비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민변 등 3개 인권단체는 “현

행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선도시설운영 규정(훈령523호)과 생활보호사업지침 등에 규정된 강제위탁 등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소원과 노재중 씨를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발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뭐봤나

‘구사대 폭력’ 방치

지난 1일 울산 태광산업(주)에서는 회사측이 구사대를 동원, 조합원을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나온 노조원 50여 명을 무장한 관리직원 수백 명이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조간부인 최상범 씨와 신용준 씨가 처수를 다치고 김하성 씨가 누굴이 부러지는 등 노조원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노조측은 “사측이 계획적으로 관리직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이 ‘우발적인 사고였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니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있었지만 쇠파이프 등의 흉기는 보

지 못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경찰이 폭력현장을 방관했다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불화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너무 많아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를 맡은 노사정위원회는 “폭력현장을 방관한 것은 경찰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정했으며 부산국제신문사의 기자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쇠파이프 등의 흉기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고 밝혀 노조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노조는 “최상범 씨를 비롯한 15명의 노조간부들이 회사측 관리자에 의해 강제로 경찰에 넘겨졌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기독교계, 양심수 석방 촉구

미국·일본에서도 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원)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상임의장 문대팔)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분단과 독재로 얼룩진 지난 역사의 피해자인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문제는 단순히 권력의 시혜나 관용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불의한 과거 역사와의 단절이요, 지난 시기 잘못된 우리 현대사의 회개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과거 전향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준법서약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조안 캠펠)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오즈 겐이치)도 7월 27일 김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각각,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55명이다. 그 속에는 28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아래서 구속된 뒤 지금까지 구금중인 장기복역 양심수만도 모두 62명이 포함되어 있다.

올 3월 13일 단행된 김대중 정부의 첫 사면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국제엠네스티는 오는 8·15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규모 사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5월 한국의 장기복역 양심수와 관련된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펴내며, 석방이 요청되는 양심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했다. 다음은 국제엠네스티가 석방을 요청하는 장기수들의 명단이다.

◆ 30년 이상 수감된 11명: 우용각(68) 최선복(69) 홍명기(69) 안영기(68) 장병락(63) 양희철(65) 리경찬(62) 최수일(59) 김동기(65) 박완규(68) 이공순(63)

◆ 28년 이상 수감된 6명: 김익진(67) 오형식(68) 김은환(67) 양정호(67) 김창원(64) 이재룡(53)

= 엠네스티는 이들이 △오직 소위 공산주의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왔다는 점 △고문을 당했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약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취급 등 인도적인 이유 등을 들어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강용주(35) 김성만(40) 양동화(39) 황대권(42·이상 구미유학생 사건) 함주명(64·월남자 사건) 강희철(39) 이장형(65·이상 일본관련) 박동운(52) 석달윤(66·이상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 엠네스티는 “70년대와 80년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또는 조작되어 부

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믿어지는 적어도 15명의 장기 정치범들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 중 9명에 대해 그들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영(56) 김정목(63) 이상철(49·이상 납북어부) 조상록(51·일본관련) 김장호(57·제일동포) 김태룡(행불자 가족 사건)

= 엠네스티는 “이들 6명은 그들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나 대개 고문을 통한 자백에 근거해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에 따라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박노해(40·무기) 백태웅(36·15년형) 남진현(35·10년형으로 감형) 현정덕(35·8년형)

= 엠네스티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옹호했으나 북한과 어떤 연관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이 정부를 전복할 무장혁명을 계획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그들의 즉각적인

고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 김낙중(66) 손병선(57) 최호경(41·이상 무기형) 황인오(42·20년형) 황인욱(32·10년형으로 감형) 심금섭(63·10년형으로 감형) 양홍관(38·12년형) 함정희(33·7년형) 변의숙(31·10년형) 장창호(12년형) 이정섭(10년형) 조덕원(8년형) 은재형(6년형)

= 엠네스티는 “김낙중 씨와 손병선 씨의 석방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수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이밖에도 김영삼 정권 초기의 공안사건이었던 ‘구국전위’ 사건(94년)의 관련자 안재구(64·무기형) 유락진(70·8년형) 정화려(33·10년형) 씨 등의 석방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굳이 엠네스티의 지적이 아니라도 지금 한국의 감옥안에는 ‘너무나 많은’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인사들

6일부터 8일까지 명동성당에서는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하나로 ‘하루감옥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감옥체험’에 동참한 각계 인사들로부터 ‘양심수 석방’과 ‘준법서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다.

▶ 명계남(영화배우): 공인의 입장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준법서약을 거론했겠지만 모든 양심수는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 박광정(배우): 빛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나이라도 많으신 분들이 무슨 위협이 된다고 잡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준법서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상전향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곡재구(시인): 양심수를 인정하고 석방할 의사가 있다면 그냥 풀어주지, 아무 필요없이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책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다. 양심수 사면의 폭과 형태는 개혁의지, 국민의 정부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야 같다.

▶ 박주현(변호사): 준법서약제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5공비리나 학살범들은 사회통합이란 이름으로 대폭 사면됐는데...

▶ 차병지(변호사): 그들은 다른 형사사범에 비해 특히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준법서약은 말만 다를 뿐 종전의 사상전향서와 비슷한 것이다. 내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표현을 강요해선 안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1일(화)

제 11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2백32명. 현재 감옥에 남아 있는 4백55명(7월 25일 현재)의 양심수 가운데, ‘순수하게’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낸 양심수의 숫자다. 지난 2월 25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하루평균 1.5명이 감옥에 갇힌 꼴이다.

김대중 정권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양심수를 대폭(그나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백 명선이다) 석방함으로써 양심수 문제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보내는 양심수보다 잡아들이는 양심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대학생 마녀사냥 여전

이처럼 ‘순수하게’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낸 양심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 정권과 과거 정권 간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들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들이다. 한 총련을 필두로 한 대학생운동은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도 여전히 ‘집중포격’을 받아왔으며, 현재 남아 있는 1백73명의 대학생 양심수 가운데 김대중 정권 아래서 구속된 사람만 1백33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구속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상, 법집행 기관으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은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을 뿐, 98년 제6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 여부의 판단을 유보해 둔 상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지 않은 채 대학생들에 대한 마녀사

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 구속 급증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은 이른바 ‘생존권 투쟁’에 나선 민중들이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을 해온 주민들과 주거권 확보투쟁에 나선던 도원동 주민들이 현 정권 아래서 구속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생존의 위협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들이다. 기아 자동차와 부산지철, 현재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등 현장노동자들 및 이들을 지원해 온 노동운동가들 가운데 51명이 김

되는 민선자치단체장(김창현 울산동구청장)까지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구속한 이번 사건은 울산 현대자동차의 노사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불쑥 발표됐다. 현대자동차의 막무가내식 정리해고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그리고 각계의 정리해고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던 시기, 느닷없이 10년전에 구성됐다는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당국에 ‘좌발’된 것이다. 이 사건 구속자들 대다수가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세력이었고, 특히 김창현 동구청장은 공개적으로 정리해고 반대 발언을 해왔다는 점도 이번 사건과 ‘현대자동차’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이다. 또 경찰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보위투쟁의 일환’이었다고 발표하고, 연행자 가운데 2명이 무혐의로 곧 석방되는 등 당국의 무리한 수사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대중 정권의 양심수로 구금중이다.

계속되는 공안사건

과거 독재정권의 전유물인 듯했던 ‘조작사건’과 진보적 청년·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의 양상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양기였던 지난 2월 19일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대거 구속된 이래, 6월 들어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진보민중청년연합 회원들이 잇따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7월말 부산·울산 지역을 벌집 추시듯 뒤흔들어 놓은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또는 ‘동창회’ 사건)은 그 발표의 시기와 구속자들의 혐의 내용에서 ‘조작’의 냄새가 강하게 풍겨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뽑은지 얼마 안

‘공안세력·악법’부터 청산해야
이렇듯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양심수가 대량 양산되는 것은 우선, 과거의 ‘공안세력’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공안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계속 사건과 구속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보안법’등 악법이 온존하는 이상, 그에 따른 ‘양심수’의 양산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비틀어진 ‘흑백논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공안세력을 일소하고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폐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8·15사면에서 ‘양심수 전원이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수배조치 해제하라"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김영삼 정권 때 수배된 학생운동 관련자 7명이 8·15 특사를 앞두고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조계사에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3년부터 수배중인 오창규(전 남총련 의장) 씨를 비롯한 한총련 수배자 7명은 △수배자 전원의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양심수 군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0일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성단 대표인 오창규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수배중인 학생운동가 40여 명과 양심수들은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대중 정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오 씨는 또 "김영삼 정권도 출범 초기엔 3백여 명의 정치수배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취했던 만큼, 현 정권은 더욱 적극적인 수배해제조치로 과거청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15 사면 직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전국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도 게재해 온신중인 수배자들과 국민들에게 농성단의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그 동안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후원회 결성 등을 통해 수배해제운동을 전개해 온 수배자들은 2만3천여 명의 지지서명을 받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 두 번에 걸쳐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회의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수배자들의 탄원에 대해 국민회의는 수배해제를 위한 입법활동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수배자들이 조계사에서 농성에 돌입하자 경내에 사복경찰을 투입시켜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근거리 감시를 하는 등 농성단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사 총무원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는 원거리 감시활동과 사찰 근처에서의 검문검색만 벌이고 있다.

<수배농성자 명단>

- 오창규(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중 수배)
- 김현곤(서울대 농화학과 87학번, 97년 한총련 연대사업 위원 활동 중 수배)
-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활동 중 수배)
- 엽동렬(건국대 농학과 91학번, 97년 수배)
- 김성숙(전남대 가정관리학과 91학번, 97년 한총련 언론 사업 중 수배)
- 이영수(서울대 농촌사회교육과 94학번, 97년 한총련 대의원 활동으로 수배)
- 김재돈(서울대 농기계과 94학번, 97년 한총련 대의원 활동으로 수배)

<공판안내> 내일자에

주/간/인/권/호/름

(98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 3일(월)

현대자동차 노조, 정리해고된 1천4백91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대구 달서경찰서, 비정상 신생아를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와 담당의사 등 2명 불구속입건 /<자카르타=AP 연합>, 위란도 인도네시아 합동군 총사령관이 민주인사 납치·고문사건에 연루된 군 고위층을 조사하기 위한 '육군장교위원회'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

◆ 4일(화)

성남건설일용노조 발표, 우림건설(주)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맺게돼/용산경찰서, 철거반대를 요구하며 용산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최경숙 씨 등 8명 연행/경기지역 <중부일보>, 회사개혁을 요구하며 노조설립을 이끈 기자 12명 파면 조치

◆ 5일(수)

보건복지부,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유린행위를 확인하고 원장 교체와 이사장 승인취소 및 시설폐쇄 검토중/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양지마을 찾아 실태조사 벌이기로/서울고법 특별10부,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뒤 아파트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회사원 김이무게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 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6일(목)

민간협 등 주축로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명동성당에서 개막/대우자동차 노사, 2천년 7월까지 정리해고를 유보키로 최종합의/대전지검, 양지마을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방침

◆ 7일(금)

법무부, 준법서약서 제출한 공안사범 1백5명 전원을 8·15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14일 오전 석방하는 한편,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 제외키로/보건복지부, 2천년부터 직장외보 가입자의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의료보험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에 고/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의보통합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91년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한 뒤 베를린에 머물러온 박성희, 성용승 씨 등 해외체류 공안사범 5명 자진입국/북한 중앙통신 보도, 한총련 소속 대표 김대원(전국대 4년), 황선(덕성여대 4년) 씨 등 2명 8·15통일대축전 참가위해 평양에 도착

◆ 8일(토)

<교도통신>, 유엔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 마련했다고 보도

◆ 9일(일)

대전북부경찰서, 충남대에서 열린 제9차 범민족대회 충청지역 통일한마당 대회와 관련, 건조물 침입 혐의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 84명 연행조사

<하루같은 체형기> 배유정(방송인)

공시령 공시령...

감옥, 자유를 구속받는 곳이란 말이 지?

그런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불의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던 말이?

아이러니네 그거.

저기 보이는 게 감옥이야? 아니, 이 건 박스잖아.

이 더운 날 저기에 긴팔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괜히 한다 그랬네.

그냥 도망갈까? 너무 늦었다.

혹! 결박은 왜 하는 거야. 팔에 피가 안 통하잖아.

이 사람들아! 어, 손가락이 보라색이야.

엄마야! 왜 쭈구리고 앉아서 지시를 받으라는 거야. 굴욕감 느끼게시리.

점점 후회가 몰밀 듯...

그래도 창문은 있구나. 다행이야.

어? 창 밖도 못 내다봐? 저 간수 아저씨 너무하네.

외국영화 보면 감방에 일단 들어가면 맘대로 하던데.

쇼생크탈출 봐. 여배우 포스터 걸어 놓고 굴도 파잖아. 몽테크리스토택자 땡키로.

정자세로 가만히 있으라구? 저-어, 간수 아저씨!

(이하 고향) "뭘, 간수! 당신한테는 교도관이야. 교도관, 어디서 감히... 등등"

저-어, 그럼 교도관 아저씨, 종이와 펜 좀...

(이하 고향) "당신 놀러왔어? 반성해, 반성. 무슨 요구야. 주제에... 등등"

종이와 펜도 겨우 수년전부터 반입이 됐다고?

면회요? 누가 날? 아, 어머니, 양심수 어머니라구요?

아드님은 출옥했는데, 다른 양심수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짜-이.

저보고 고맙다고요?

늘 잊고 살다가, 무기력하게 방관하다가 오늘 하루 여기 나왔다고 저보고 어머니가 고맙다고요? (화끈!)

또 면회요? 40여년을 양심수로 이런 감방에 계셨던 분이랑요?

어떻게 그럴수가... (팔 못 이음)

끊임없이 재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라고요? 포기말라고요?

저 펜, 종이 달랬다가 흔어서 그냥 있었어요.

맞고, 고문해도 굽히지 않으면 저들도 포기한다고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진실로.

전요, 독립운동 절대 안합니다. 전 한 대만 맛어도 다 붙게예요.

이 책이 불법반입물이라고요? 그냥 면회와서 넣어 주길래 무심히 받았는데.

별로 결박당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구? 이 사람들, 장난이 아니네. (혈압상승)

책도 맘대로 못 봐, 글도 맘대로 못 써. 놀지도 못 해, 기대지도 못 해, 양심수는 기본권리도 없나?

그리고 도대체 양심수란 무슨 말이야?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죄수란 말야? 양심을 판 사람이 감옥 가는 게 맞는 거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에 아직 양심수가 있는거지? 문민정부하고도 2대째네.

양심수들이 자신의 존재기반을 위협

한다고 아우성을 치던 군부통치도 끝났잖아.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도 갔다면서. 미전향장기수도 저번에 보니까 이북 가던데.

양심수를 너무 다 내보내면 너무 섭섭할까봐?

정말 시간 엄청 안 가네.

예? 6시라구요? (감사, 감사)

푸른 죄수복 벗고, 내 옷 입고, 신 신고, 목이 빤새라 목걸이, 옆구리 안 허전하게 백 들고.

흠, 다시 온전한 인간이 되었구나.

야! 이제 집에 간다.

근데 양심수들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한달도 아니고 수십년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다고 이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이 같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이상해. 나만 이상해 하는 거 아니겠지? 다 이상하겠지? 그지?

- 무덤게 찌는 8월 어느날 명동성당 언덕길을 터덜터덜 내려오며 한 생각...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명동성당에서는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의 한 행사로 '하루같은체형기'가 진행됐습니다. 배유정 씨는 연극배우 겸 방송인으로 SBS <출발 모닝와이드>, MBC 라디오 <배유정의 영화음악>의 진행자입니다.

<광고> 급구! 컴퓨터 부품

- 폭우로 사무실 수재 발생!
- 모니터, 자판, 마우스 등 컴퓨터 부품에 손상!
- 기증 부탁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2일(수)
제 11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인지뢰 위험 적신표

폭우 속 지뢰 유실·주민 피해 발생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또 발생해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군용폭발물 10여톤과 대인지뢰 2백여발이 유실되면서, 8일 인천에서는 발목지뢰에 의한 부상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8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세이도 선착장 동쪽 해안가를 지나던 신도언(45) 씨는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있던 발목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가락 4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인천 중앙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신 씨가 밟은 대인지뢰는 흔히 '폭풍지뢰' 또는 '발목지뢰'라고 불리는 M4 대인지뢰로 밟은 사람의 뒷꿈치를 절단하는 기지방어용 폭발물로 경기도 고양시 공군 방공포부대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9일 새벽 집중호우가 쏟아진 평택시에서도 인근 공군부대 2곳에 매설된 지뢰 1백여 개가 유실돼 군부대가 긴급수거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공동대표 문정현, 조미리, 이장희)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뢰유실사건과 그로 인한 민간인의 부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김대중 정부에게 유실된 대인지뢰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과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뢰매설 실태 공개를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대인지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대인지뢰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그를 철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남북이 합의해 함께 지뢰

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편 지난 95년 폭우 때는 경기도 파주군에 있던 공군기지에서 K14 대인지뢰(부비트랩) 13개가 유실됐으며 충남 홍성군에 주둔중이던 공군기지에서도 대인지뢰를 유실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고, 96년에도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지방에서 폭약과 지뢰 8백64톤을 유실하는 최악의 유실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요구하자 시슴시갑"

지난 7월 중순경 춘천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재소자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아침 보안과장의 순회시찰(순시) 때 일반재소자 정 아무개 씨가 처우에 관련된 면담을 요구했다가 시슴시갑(포승과 수갑에 결박됨)

을 당했고 이후 10일간 징벌방에 수용됐다는 것이다.

정 씨가 징벌방에 수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내 양심수 가운데 장윤영 씨가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개사과 및 징벌 해제 등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보안과장과 연장을 벌이던 장 씨가 다시 시슴시갑을 당했으며, 이후 징벌방에 수용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사태가 확대되자 교도소측은 폐방시간을 앞당겼고 이에 대해 다른 소내 양심수들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걷어차는 등 항의행동을 벌이자, 그들 역시 시슴시갑 상태에서 보안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춘천교도소 보안과의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며 공안수 몇 명이 소관을 부린 적이 있지만 좋은 쪽으로 해결이 잘되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재소자와 소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소장은 "보안과장의 잘못된 인정되기에 공개 사과방송 등의 요구는 수용할 수 있으나, 보안과장 징계는 권한 밖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사과방송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요 공판 안내

- ▶ 12일 (수)
 - 윤순재(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 윤창배(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 김영혜 외4(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 30부, 속행
 - 현준희(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 3부, 속행
 - 윤석진(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5호, 합의 5부, 선고
- ▶ 13일 (목)
 - 백금자(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선고
 - 전재순/박충렬(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 4부, 속행
- ▶ 14일 (금)
 - 이근안(독지폭행 등)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302호, 합의 2부, 속행
 - 박재현(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행
 - 문은주(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속행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혹자는 '준법서약'을 정부의 '교육지책'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양심수에게 있어 '준법서약'은 가슴을 후벼파는 또 하나의 비수일 뿐이다. 더 이상 후퇴할 곳 없는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건'마저 던질 것을 종용하는 '심판' 앞에서 양심수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사건 구속, 20년형)

"면회시간 내내 그놈의 서약서 문제로 감론을박,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느라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빛나던 청춘 다 보내고 열네 해째 갇혀지내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줄 잘 알면서도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순 없다'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서약서를 안쓰고 그냥 갇혀 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받아야 하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있는 것이 제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7월 15일)

◇ 장창호(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구속, 12년형)

"오늘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어머니 기대에 어긋난 말을 하고 말았다. 지금 쓰고 출소해 평생을 부담을 갖고 사느니, 조금 더 있다가 나가면 더 마음 편히 살수 있는 것 아니냐고, 6년을 참았는데 한 일년 더 기다려 보자고, 이곳 노인들 다 출소하면 그때 나도 쓰고 나가겠다고, 참으로 말이 되어 나오기가 힘들었다. 실망하시는데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상황이 자주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7월 30일)

◇ 이환영(인천대생, 96년 '연세대 사태'로 구속, 99년 8월 만기)

"전 요즘의 서약서 논쟁을 바라보며 고등학교시절의 자율학습이란 걸 떠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라는 자율학습에 왜 그리 조건은 많았는지, 지정된 좌석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던 그 분위기 하며, 허용보다는 제한과 한정의 논리들이 저를 꼭꼭 감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율은 '알아서' 라는 것에 그 생명이 있지요. 조건있는 자율은 타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이미 타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아무리 자율의 가면을 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7월 21일)

◇ 민경우(별면된 사무처장, 97년 구속, 2000년 12월 만기)

"전향제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통해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기사와 그에 따른 논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장기수들과 김성만, 강용주, 백태웅, 박노해, 황인욱씨 등 저희들과 가까운 세대이고 고난의 길에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이 3·13 사면에서 제외되고 또다시 준법서약이라는 이름의 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서글픔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낍니다. 정치적 신념과 지조는 어떠한 폭력과 회유로도 꺾을 수 없으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투쟁하는 청년들의 기개와 열정은 총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7월 3일)

◇ 리경찬(65년 남파사건으로 구속, 33년째 구금)

"이번 8.15 특사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수 선생님 17명이 있는데 준법서약서 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만 바꾼 전향서입니다. 역대 정권도 준법

서약서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50년만에 정권교체 되었다고 하면서 서약서를 받고서야 석방하겠다는 발상이 군사정권보다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북쪽이 교향인 장기수들은 서약서를 쓰면 통일이 되어도 교향에 못가게 하는 교약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비인도적인 처사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7월 13일)

◇ 백태웅(92년 사노맹 사건 구속, 15년형)

"준법서약서도 전향제와 똑같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보수세력의 견제 속에서 개혁을 진행중인 정부의 어려운 입지를 고려해 이번에는 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법서약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준법서약 내용에 준법의 의지를 담은 한편, 준법서약제 역시 위험적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비전향장기수와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가 8·15 사면에서 함께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아울러 명기할 계획이다."

준법서약서는 양심수들의 가슴만 멍들게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석방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려온 가족들의 가슴에도 못을 박고 있다.

◆ 차정원(장창호 씨 부인)

"올해 8월 15일에는 당신이 정말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다가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기대가 허물어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전향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참 잘한다 했는데, 죄도 없는 양심수에게 준법서약서는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정말 아무런 조건없이 당신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나와서 가족간에도 썩히 미안하고 가슴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3일(목)
제 11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 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지난 7월말 부산·울산에서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9명을 대량 구속한 국가보안법 사건(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변, 녹색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12일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과거 군사독재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인권유린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구속된 환자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거나 부부가 모두 구속돼 어린 자녀가 '생고야' 생활을 하게 되는 등, 경찰의 '반인륜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간경화로 시한부 6개월 선고로 받은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 씨의 경우, "이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사가 계속되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사소견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이 "조사중에 죽어도 할 수 없다"며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정현(현대중공업 노동자 가족협의회 회장) 씨와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 회장) 씨는 척추협착증과 디스크를 앓고 있던 중 구속돼 치료 중단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박경순·김이경, 임동식·이은미 부부가 함께 구속됨으로써 그들의 네 살, 아홉 살짜리 자녀들은 20여 일째 이집지집을 전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속환자들의 병원입원 및 치료 △부부 구속자 가운

데 한 사람의 불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며, "인권유린의 중단과 환자들의 치료를 요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체포·수색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수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 목비권, 연행사유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에 해당하는 요건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무단침입에 이어 입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집안을 압수수색하는 등 '절도'나 다른 없는 행위를 벌였다. 구속된 김창현 동구청장의 경우, 경찰은 드릴로 자물쇠를 따고 들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박경순, 임동식, 정대연, 이철현 씨 등은 현재까지 압수물품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된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에 대해, 해외로부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7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노동계의 활동을 진북활동과 관련지으려는 구태의연한 시도와 과거의 방식에 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의 탄압방식으로 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것"과 "비폭력적인 노동운동을 벌인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독일노동조합연맹도 7월 29일 김 대통령에게 "한국의 정치적 탄압 상황에 대해 독일노동조합연맹, 지식인, 시민들과 함께 연대행동을 전개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계속될 경우, 현대자동차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부산·울산 지역 대책위는 '경

찰이 이번 사건의 조직명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건 조작의 의혹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 당시 이 사건을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의 이름으로 지칭했으나, 24일 1차 수사발표 때는 '한민전 산하 영남지역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표했고, 최근에는 '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 또는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 등으로 지칭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한민전의 직접지도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속된 정대연(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간첩 최정남' 씨를 당국에 신고한 인물로, 대책위측은 '상부조직에서 파견한 사람을 신고한 정대연 씨가 한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

평화와인권연대, 세종로 집회

12일 평화와인권연대(대표 손상열) 소속 회원 30여 명은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는 2백37명으로 역대 정권의 초기 구속자 숫자로는 최다"라며 "말 그대로 '사면한 만큼 잡아들이는' 기막힌 상황이 인권을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저질러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엄연한 현실 속에서 과연 몇몇 양심수를 석방한다고 얼마나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 할테면 해박"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결사투쟁 선언

정리하고 철회투쟁이 한창인 현대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위원회는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부녀자들은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는 검찰과 노동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리하고 철회는 생존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싸움"이라며 "이러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불법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그 동안 셀 수도 없는 경찰과 협박, 폭력 앞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투쟁을 이끌어왔다"고 밝히며, "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은 오로지 정리하고를 철회하고 회사측이 노조와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측은 11일 "사측 관리자들이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등, 구사대 조직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측은 노동자들의 폭력 사용을 극구 만류하는 한편, "정리하고 철회와 고용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생산작업에 임하지 말 것"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당시, 컴퓨터통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형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윤 씨의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씨가 '변증법적 유물론' 등 5권의 책을 보관한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측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제작·반포한 이유가 학문 목적의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이적행위로 본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각각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행사와 동정

□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통일 대토론회

·때: 8월 12일(수) 1부-오후 2시
2부-오후 7시

·곳: 1부-성동광진 민주시민회
2부-성동구민회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학술대토론회

·때: 8월 13일(목) 오후 2시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통한 민족화해의 과제(이장희 외대 교수)/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과제와 방향(주강현 통일사회문화연대 공동대표)/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강정구 학단협 상임대표)/한반도 평화군축의 과제와 방향(이철기 동국대 교수)

·주최: 민족의 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추진 남측추진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준)

■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됐던 박래군 씨가 지난 8월 5일 만기출소했습니다.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미얀마(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중이던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이 미얀마 정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옐리스 비카리(35·호주) 씨 등 각국의 인권활동가 18명이 랭군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이번 미얀마 방문에서 88년 살해된 학생들에 대한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화적 활동을 벌였으나, 미얀마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회불안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버마 해방연대' 소속의 미국인 6명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태국인 3명, 필리핀인 2명, 호주인 1명 등이다. 현지에서 있는 미국, 필리핀, 호주, 태국 외교관들은 자국 활동가들을 구금된 지 3일만에 접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이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이번 방문 활동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모인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미얀마인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인의 열망을 지지합니다. 잊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4일(금)

제 11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일부 양심수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풀려나는 양심수보다 새롭게 잡혀 들어가는 양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양심수'를 양산해온 독소조항이 바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였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돕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법부 '남용위험' 지적

국보법 제7조의 문제는 한 마디로 '그 규정이 모호해 언제든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처벌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국보법 7조의 남용 및 위헌 소지는 사법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지적해온 부분이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국보법 제

7조 1, 3, 5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데 이어, 그해 서울지법 형사합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91년 국보법 개정 이래 최초로 국보법 7조 위반 사건(이창복 씨 구속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95년 4월 서울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우근 판사, 북한소설 출판 사건) 95년 5월 서울지법 형사합소5부(재판장 김영기 판사, PC통신 공산당 선언 게재 사건) 96년 1월 부산지법 형사1단독(정희상 판사, 북한대학생과 팩스서신교환 사건) 96년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박충렬 씨 사건) 등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요지는 "국보법 제7조가 국민의 사상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고, 각각의 무죄판결 이유는 "국보법 7조가 넓게 해석·적용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하급심에서의 이같은 판결과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국보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따라서 제3항, 제5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96. 10. 4 95헌가2)며 국보법 제7조 1, 3, 5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92년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사건과 관련,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 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92. 3. 31 대법 90도2033)고 판시하기도 했다.

국보법 남용, 공안기구도 인정 그러나, 사법부의 법리적 논쟁을 떠나 국보법 제7조의 남용 및 인권침해 여부는 이를 적용하는 공안기구의 주장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 적용을 최소화하겠다."(98년 6월, 이종찬 안기부장)

"국가보안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98년 7월, 박상천 법무부장관)

"절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올해 들어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사회단체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자치활동을 전개해오다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받았다. 컴퓨터통신에 대학 강의 교재와 마르크스주의 출판물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이, 이적표현물을 출판했다는 혐의로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었다. 모두 국보법 7조의 멧에 걸린 경우다.

▶ 2면으로 이어짐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고민 컸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옥역하고 지난 5일 출소한 박래군(본지 편집인과는 동명이인) 씨로부터 8·15사면을 앞둔 심경과 연행이후 교도소 생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구국전위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구축된 지하당"으로 발표된 사건이다.

준법서약제는 결과적으로 쓰고 안쓰고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모든 양심수들은 엄청난 고민을 느끼고 있다. 상환인식과 자기의 주관적인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

- 8·15 사면을 앞두고 준법서약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 준법서약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국가권력이 자기의 내심을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전향제도가 폐지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며,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마련한 교육책임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준법서약제 반대투쟁을 하되, 내용상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 수구보수세력들의 역공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우선이다. 잔여형기가 많은 사람은 썼으면 좋겠다.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양심수들이 조건없이 석방되었으면 한다.

- 경주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한 박노해 씨가 준법서약서를 썼는데

- 그는 사노맹의 이념과 거의 관계가 없을 정도로 변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의 모순과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위해 치열하고 부단한 정진을 해 온 것 같다. 정역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안고 있다.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15일자 <인권하루소식>

휴간합니다.

14일 8·15특별사면에 대한

<호외> 발행합니다.

- 방법의 정당성이나 절차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운동과정에서 한국사회 전체에 던져졌던 민족문제와 노동해방 문제를 근본적이고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합법적 운동이라고 평가한다.

▶ <특집·양심수> 1면에서 이어짐

한편, 국보법 7조에 의한 구속자 대부분이 구속 서너달 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온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혐의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법이 존재함으로써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1일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만 50년이 된다. 48년 12월 1일, 당시 '여순사건'으로 긴장한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의 제거와 탄압을 목적으로 공포·시행한 국가보안법이 50년의 세월을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양심수 문제는 결국 국보법의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김대중 정부도 '양심수 양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사건당시 연행·수사과정은

- 94년 6월 15일 새벽 1시30분경 집에서 연행됐다.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남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관 17명이 교대로 강압과 회유를 했고, 잠안제우기 고문이나 협조하지 않으면 아내를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 교도소 생활은

- 수용밀도가 높은 것이 제일 문제다.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일반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소장과 만나 처우개선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 구국전위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4일(금)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데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명단 3면>.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씨와 구미유학생 사건(85년)의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씨등 10년 이상 구금중인 장기수 21명이 석방되며, 사노맹 관련자 4명 가운데 박노해, 백태웅, 남진현 씨가 풀려나게 됐다. 또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자 13명 중 김낙중, 손병선 씨 등 9명이 형집행정지 및 가석방등으로 풀려나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정화려 씨가 석방된다. 학생운동 관련자 가운데엔 기결수 1백27명 가운데 준법서약을 한 46명이 석방된다.

감형대상으로는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무기형) 씨와 무하마드 칸수(정수일), 97년 이석·이종권 치사사건 관련 대학생등 9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우용각(40년 구금) 씨등 28년 이상 복역중인 초장기수 17명 전원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년 이상 구금중인 장기수 가운데 39명 가운데 21명을 사면에서 제외했다. 또 사노맹의 현정덕(8년형),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최호경(무기), 장창호(12년형), 조덕원(8년형) 은재형(6년형), 구국전위 사건의 류락진(8년형) 씨 등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조치에서 제외되는 등 모두 3백60명의 양심수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헌정파괴·부정축재법 모두에겐 관용

정부가 이번 사면조치에서 준법서약을 기준으로 양심수들을 선별석방한 반면, 5·18, 12·12사건의 헌정파괴범들과 전·노 두 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전원 복권조치를 내렸다.

특별복권조치된 사람은 정호용, 황영시, 차규현,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최세창, 주영복, 이희성, 박종규, 신윤희(이상 5·18, 12·12 관련자), 안현태, 이현우(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씨등이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국민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특별복권한 것은 △지난해 석방 이후 근신해 왔고 △이들보다 죄상이 중한 전·노 씨가 이미 사면·복권되었기 때문에 이들을만 복권시키지 않는 것이 '동일 사건에 있어서의 형평'에 어긋나고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대화합 취지"라고 밝혔다.

'한보' 관련자·권노갑 사면

정부는 또 '한보' 사건 관련자 가운데 권노갑, 정재철, 최두환, 정태영, 하근수, 박희부 씨등 정치인파 우찬목, 손홍균 씨등 금융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권노갑 씨등 비리연루자 및 헌정파괴범들에 대해선 전원 잔형면제나 형선고실효 및 복권 등을 통해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키면서도, 풀려나는 양심수 94명에겐 모두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단 한 명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석방, 페스카마호 관련자 사면제외

한편,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제천 씨등 조선족 동포 6명 모두는 각계의 사면탄원에 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으며, 다만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외국인 수형자 1백47명중 79명에 대해 사면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77명은 형집행정지로 석방후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또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 살인에 이른 임순란, 박옥량, 박명자 씨등 여성 3명이 석방된다.

준법서약 실시(實査), 보안관찰 강화 시사

박상천 법무부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서약서 작성에 있어 담당검사의 면담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을 걱정하나, 만기전에 석방되는 공안사범은 '준법서약'을 하며, 이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관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해 보안관찰법 적용의 강화를 시사했다.

인권·사회단체, "분노...규탄"

이날 발표된 8·15사면조치와 관련, 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실망과 규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 정권이 과연 김영삼 정권, 그 이전의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묻고 싶다. 지난 정권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해 마지 않는다. 법무부는 5·18관련자 등 헌정 파괴범 모두를 복권조치하면서 '죄상이 중한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미 사면·복권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사노맹 사건에서 죄상이 중한 박노해, 백태웅 씨를 사면하면서 현정덕 씨를 제외한 것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서 김낙중, 황인오 씨 등을 석방하면서 장창호 씨 등을 계속 구금하는 것 등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출소 공안사범에게 보안관찰법 적용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보비리나 선거사범, 12·12, 5·18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별다른 조건없이 사면하면서 유독 양심수에 대해 준법서약을 적용해 선별 석방한 것은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정부가 준법서약을 통해 양심수에 대해 또 다시 선별적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전국연합)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심수들을 모두 제외시킨 것은 준법서약 자체가 비인도적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지난 3·13 경축특사가 미흡했음에 대해 '정권 초기라 경황이 없었고 조속히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만 믿고 예타게 기다려 왔는데, 이번 8·15 사면이 또다른 절망감만 안겨주게 되었다."(민가협)

"전체 양심수 4백55명중 94명만이 석방된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및 준법서약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기 바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15 경축 특사에 관한 담화를 접하며 현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 개선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5·18, 12·12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사면, 복권하며 준법서약을 빌미로 대다수의 양심수들은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놓는 정부의 방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안사범 94명만이 석방되고, 석방이 되어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보안관찰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정부의 인권개선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가석방(69명)

1.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 진창식(19년 구금) 김태룡(19년 구금) 석달윤(18년 구금) 안승윤(17년 구금) 박동운(17년 구금)
2. 납북어부 사건 - 김정목(16년 구금) 이상철(15년 구금) 정영(15년 구금)
3. 제일동포 사건 - 김장호(16년 구금) 박수관(15년 구금) 서순택(9년 구금)

4. 일본관련 사건 - 유재선 (15년 구금) 서경윤 (14년 구금) 이장형 (13년 구금) 문철태 (13년 구금) 강희철 (12년 구금) 김기문 (9년 구금) 김천태 (5년 구금) 최봉석 (2년 구금)
5. 월남자 사건 - 함주명 (15년 구금)
6. 방북 사건 - 박영희 (6년 구금)
7. 구미유학생사건 (85년) -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8. 사노맹 - 백태웅 (6년 구금)
9.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2년) - 변의숙 심금섭 양홍관 이경섭 함정희 황인욱
10. 월북기도 사건- 최수열 (11년 구금) 이복현 이재익
11. 구국전위 사건 (94년) - 정화려
12. 학생운동 관련자
강호진 (제주대) 고진영 (목포대) 곽동주 (경북대) 권영보 (미문화원 접거) 김봉준 (부경총련 의장) 김영복 (한총련 사무처장) 김용지 (법정학련 정책실장) 김정훈 (한총련) 김종태 (단국대) 김태규 (국민대) 김태완 (홍익대) 박정윤 (경희대) 박준선 (국민대) 박현우 (제주대) 박휴상 (전남대) 박희정 (경북대) 송계호 (한총련 정책실장) 신신호 (한양대) 안상묵 (서남총련 의장) 이오영 (명지대) 이윤희 (96년 연대 사태) 이종명 (경상대) 이형민 (전남대) 정선 (서총련 조통위장) 정혁남 (서부총련 의장) 최지훈 (부경총련 의장) 홍성이 (한총련 연사위원장) 황상우 (서부총련 집행위장)
13. 기타 - 서래스님 (잡입·탈출) 강병연 (범민련 관련) 안중수 (북부노동자회). 허정길 (87년 6월항쟁 관련, 11년 구금) 곽재진 송유진

형집행정지(25명)

1. 남한조선노동당 (94년) -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2. 사노맹 - 남진현 박노해
3. 학생운동 관련자
김동 김태현 윤재호 (이상 부산외대 자주대오) 박은배 (충북총련) 이성진 (한총련 출범식) 김정호 (강남대) 박진빈 (단국대) 송원철 (목포전문대) 신영관 (조선대) 안해숙 (목포대) 전행란 (목포대) 오민준 (조선대) 오영욱 (경북대) 윤주형 (충북대) 이재윤 (고려대) 최재혁 (96년 연대 사태) 이승재 (96년 연대 사태)
4. 기타 - 류용범 (구국전위 관련) 강순정 (범민련) 박정상 (송당마을 철거 관련)

감형(9명)

안재구 (구국전위) 정수일 (간첩 사건) 강성일 (중앙대) 박수기 (전남대) 설증호 (96년 연대 사태) 길소연 (한양대, 이석 치사사건) 이호준 (건국대, 이석 치사사건) 장형욱 (목포대, 이종권 치사사건) 전병모 (순천대, 이종권 치사사건)

주요 미석방 양심수

1. 우용각 (40년 구금) 씨 등 초장기수 (28년 이상 구금) 17명 전원
2. 조상록 (일본관련, 20년 구금), 손성모 (남과 사건, 17년 구금), 신광수 (남과사건, 13년 구금) 강용주 (구미유학생 사건, 13년 구금)
3. 사노맹의 현정덕 (8년형),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최호경 (무기), 장창호 (12년형), 조덕원 (8년형) 은재형 (6년형), 구국전위 사건의 류락진 (8년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8일(화)

제 11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8·15특사의 푸경이 열렸다. 박노해·백태웅·김낙중·김성만 씨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양심수들이 감옥 밖으로 나왔고, '조작된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십수년씩 구금되었던 장기수 가운데 21명이 풀려났다.

새정부 출범 경축 특사였던 3·13 사면때 (74명)보다 석방자 숫자가 많을뿐더러 (94명), 석방자들의 면면에 중량감이 느껴지고 그 대상이 최장 19년을 복역한 장기수로부터 한총련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했다.

그러나 이번 8·15특사가 보여준 화려한 외양의 이면에는, '양심수'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준법서약제도'를 통해 남아 있는 양심수들의 '양심'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과 둘째,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서도 '사면취소' 협박과 '보안관찰'을 빌미로 통제와 감시의 족쇄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우용각 (41년제 구금) 씨 등 17명에 달하는 초장기수 (28년 이상 복역)들을 비롯해 13년이상 구금 중인 장기수 39명 가운데 21명을 사면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준법서약'을 하지 않는 한 추가사면을 고려치 않겠다고 밝혔으로써 이들은 자칫 감옥 안에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94명의 '양심수'를 석방함에 있어 감옥 문만 열었을 뿐, 이들의 발에 채워진 '족쇄'는 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석방된 양심수들은 전원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 처분에 의해 출소함으로써 언제든 재수감될 수 있는 처지다. 권노갑 씨등 비리사범과 정호용 씨등 헌정과괴범들에 대해서

전원 진형명제 또는 복권조치를 내림으로써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준데 비하면, '양심수'들에게만 유독 '혹'을 붙인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이중적 사면조치의 속내는 16일 법무부의 공개 협박을 통해서 곧바로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16일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을 위반 행위가 아니라, 법 폐지를 주장하는 표현 행위만으로도 구속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역대정권을 능가하는 반인권적 발상이기도 하다. 또한 14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 '보안관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현 정부가 더 이상 인권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사면이 '인권개선' 의지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대내외 홍보와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우선 '준법서약'이 양심수 석방을 위한 요식절차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던 당초의 설명과 달리, 준법서약서를 쓰면서 국가보안법 반대입장을 밝힌

양심수들은 전원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부는 "정호용 씨등 헌정과괴범을 복권시키는 이유가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씨가 이미 사면·복권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노맹 사건의 주범 백태웅, 박노해 씨는 석방하면서 현정덕 (8년형) 씨를 제외했고, 구미유학생 사건의 김성만 씨 등을 석방하면서 강용주 (20년형) 씨는 제외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 결국 유명한 양심수의 석방을 통해 국내외에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헌정과괴범 석방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꾀했을 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장기수 금재성 씨 운명

보라매병원에서 영결식

비전향 출소 장기수로 최근 해장암 등으로 투병해 오던 금재성 (74) 씨가 17일 오후 2시경 입원중이던 보라매병원에서 운명했다. 금 씨는 57년 남과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이후 27년만인 89년 석방됐으며, 평소 북한에 두교은 가족과의 상봉을 기다려오다 결국 운명했다.

·장례식장: 보라매병원 영안실 1호실 (836-8321)

·영결식: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보라매병원 (장례위원장 이종)

.....주요 공판 안내

▶18일 (화)

·유용혁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형
·김진생 (국보법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형

▶19일 (수)

·윤순재 외7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심정웅 외2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21일 (금)

·정호원 (특공방 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속형

공권력 투입 방침, 울산 긴장고조

사회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14일 대검의 경찰력 투입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울산 현대 자동차 농성현장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각계에서 "경찰력 투입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동자들을 짓밟는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경찰력이 투입되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포함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균 교수 등 사회 각계 인사들 또한 성명서를 발표, "회사에서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아부치고 언론플레이를 배경삼아 공권력을 끌어들이는 음모"가 진행중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리해고보다는 고용유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민승리21 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울산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선부른 해결을 시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며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력 투입 방침 발표 이후 셀수 없이 많은 병력이 울산으로 집중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은 평화적으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농성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한 노동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노동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인천 소재 한양공영에 공권력이 투입돼 김종현 노조위원장 등 간부 4명이 사복경찰 30여 명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주)고려 손낙구 노조위원장도 노조사무실에서 연행됐다.

한양공영 김 위원장 등과 (주)고려의 손낙구 위원장은 각각 업무방해죄, 지난 5월 27일 총파업 참여 이유 등으로 고소·고발된 바 있으나 최근엔 모두 회사측과 냉화적인 교섭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사복경찰들이 권총까지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7월23일 노정협상을 통해 고소·고발자와 관련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온 노조 간부들에 대해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간/인/권/호/름

(98년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 8월 10일 (월)
군부대에서 유실된 발목지뢰 등이 평택·장흥 등 경기도 전역에 흩어진 것으로 드러나

◆ 8월 11일 (화)
대한변협, 비리 변호사 43명 징계위 회부/중앙일보 노조, "현 정부가 중앙일보 인사·보도에 외압행사했다"고 비판

◆ 8월 12일 (수)
이해찬 교육부 장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키로/이용상 경남경찰청 차장, 현대자동차 폭력사태와 관련해 노동자 19명 검거에 나섰다"고 밝히/대한변협, 한보사건 연루자 등 부정부패사범 및 12·12, 5·18 관련자에 대한 사면 반대한다고 성명 발표/미안야당지도자인 이우산 수처, 군사정부의 여행제한조치 어기고 또다시 '여행시위' 나서

◆ 8월 13일 (목)
한총련 2천여명, 서울대에서 제8차 범정학련 통일대축전 및 제9차 범민족대회 개막식 개최/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규), <한겨레> 신문 8월 11일자에 실린 한총련 광고의 이적성 여부 조사 착수/민변,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울산 지역 주민대책위, '부산·울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평화와 인권연대, 세종로에서 "양심수 석방" 촉구 집회/유엔인권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소위'의 게이 맥두걸(미국) 특별보고관, "일제의 군대위안부를 '성적노예'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 8월 14일 (금)
정부, 8·15특별사면 발표-양심수 94명 석방 및 9명 감형, 5·18 및 12·12 관련자 전원 복권/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포함한 전면적 대정부 투쟁 방침 밝히/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개관

◆ 8월 15일 (토)
8·15특사로 전국 교도소에서 2천1백74명 석방/간첩 혐의로 16년 복역한 함주명 씨, "이근안에게 43일간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재심 신청하기로

◆ 8월 16일 (일)
경찰,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관련, 강희남 목사 등 범민련 간부 9명 포함 2백5명 연행/서울지검, 행정법규 위반자 또는 교통사고·상해 등 과실범과 부도 등 경제법에 대한 불구속 수사 확대하고 벌금형 적용 늘리기/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호윤 부장판사), 남의 땅에 불법 설치된 무허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15 사면으로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공안사범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을 할 경우 재수감키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19일(수)

제 11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사태 평화해결 촉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정리해고의 철회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김금수, 김중배, 김진균 씨 등 57명의 각계인사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폐포프그와 살수차, 헬기 등으로 중무장한 1만3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 군사작전을 펼치듯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진압하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무자비한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노사정 관계를 파탄시키는 폭거이며 신정부의 '민주개혁'의 총체적 파탄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사측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만을 끝까지 고집하며 경찰력투입에 목을 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가제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이 현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어코 경찰병력을 투입할 경우,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는 한편, '현대제철'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전 기자회견을 마친 각계인사 20여 명은 이날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직접 내려가 공권력 투입 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사측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단은 18일 밤 11시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권력 투입 방침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한편 각계 인사들이 울산 현지에 도착한 오후 6시경, 경찰은 현대자동차 정문 주변에 석파이프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투경찰들을 배치해 공장 출입을 봉쇄했다. 이날 오후 6시 울산공장 앞에선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로 집회가 신고되어 있었으나, 전경들은 석파이프 등으로 위협하며 시민들의 공장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참석차 모인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최초 3백여 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전투경찰을 밀어내,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공장 안에서 현직노동자들의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 공장 담 밖에선 격려 집회가 이어졌다.

현지에선 "불법집회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경찰 헬기콕터에서 계속 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오히려 공장 내 농성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의 기조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안에서 농성중인 가족들의 숫자도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내 굴뚝 위에서 농성중인 정갑득 전 노조위원장 등은 거듭 굳은 결의를 밝히고 있으며, 김광식 노조위원장도 "현대가 무너지면 노동운동의 앞날은 어둡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시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다음달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엠네스티(AI)의 피에르 짜네 사무총장이 "8·15특사에서 제외된 정치범들의 추가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짜네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8·15특사에 대해 "잊혀져 왔던 과거의 인권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석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적인 석방과 인권개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월초 한국방문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사면조치를 요청할 것이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속행위를 중단해 줄 것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짜네 사무총장은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을 갖게 되며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관심사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사면과 관련, "28년에서 40년까지 복역중인 17명의 장기수과 수백명의 정치범이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1백명 이상이고, 그들 또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에 대한 감형조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남아있는 사형수 전원"에 대해서도 감형조치를 내리고, 나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정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김영삼 정권 때 수배조치가 내려진 학생운동가들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조계사 경내에서 농성을 벌여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 등 7명이 18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 미리 연루자나 헌정질서 파괴범은 대폭적인 사면복권 조치를 받은 반면 사회민주화 투쟁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은 정무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정부의 8·15특사 선정기준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수배자 55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농성단은 이번 8·15 특사에 대해 △전제 양심수 4백55명중 94명만 석방하고 △미국사범에게만 비인도적인 준법서약을 강요했으며 △한보사건, 전·노 부정축적 관련자, 5·18, 12·12 관련자들에게만 실질적인 사면 조치를 단행한 점 △28년 이상 복역중인 비전향 장기수 17명을 사면에서 제외하고 △풀려난 양심수 전원이 가석방·형집행정지에 그쳐 실질적인 사면 조치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수배자 농성단은 전국연합,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민가협 등 각 단체들과 연대해 오는 22일(토) 오후 2시 조계사 경내에서 ‘정치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후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 후원회 모집 등 범국민적인 수배해제 2차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22일 결의대회에서 향후 활동방향을 발표하며 농성자 전원의 사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진관스님, 권오현 민가협 회장, 홍근수 목사, 오종렬 전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우연합회장 등은 정치수배자 문제해결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과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진보넷, 시범서비스

‘진보네트웍스센터’가 2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PC통신과 인터넷의 기본서비스 및 노동·인권·학생네트웍 등의 부문네트웍의 초기구성을 선보일 이번 시범서비스에는 사회운동의 전자우편 토론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와 음성, 동화상을 통한 사회운동의 종합뉴스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새로운 책

『역감시의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인권논문상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실시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모두 14편의 논문이 응모해, 심사위원단(유현석·유종원 변호사, 한상범·한인섭·정종섭 교수)의 심사를 거쳐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역감시의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홍석만/이준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안』(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 씨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현실적 문제를 ‘국가의 감시통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내고 있으며, 맹지연 씨의 논문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의 분석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지닌 문제점, 판결과정에서의 주민이익의 배제 등의 문제를 짚어 내고 있다. 김정진 씨의 논문은 우리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장치를 수집해낸 점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김수경·류은숙 씨의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인권교육의 과제와 구체적 방법의 시안을 제시했으며, 정유진 씨의 논문은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심사진은 “비록 수상작들이 이론화와 설득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한국상황에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열정, 자료와 접근방법 등의 신선함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522-7284(민변)

또한 이번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20여개의 노동단체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동네트웍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도 일부분 공개되며 오는 9월에는 노동자 정보캡프를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시범네트웍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동안 통신상 여러 부문으로 갈라져 있던 사회·노동운동단체들의 소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돼 사회운동의 정보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네트웍은 공동네트웍 운영에 참가할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발기에 참여할 사람은 1인 1구좌(3만원) 이상을 입금시킨후 승낙서를 전자메일로 접수시키면 된다.

(문의:7744-55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0일(목)

제 11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

18일 오후 울산엔 추추추추 비가 내렸다. 현대자동차 공장 앞을 새까맣게 메운 전경들은 그 음산함을 더하며, 공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때문에 노·사측을 만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간 홍근수 목사 등 각계인사들은 정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발이 묶이곤 말았다. 울산 전역에 감돌던 긴장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저녁 6시경 정문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노동자, 시민들도 접근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합법 집회’임을 주장하며 봉쇄를 풀 것을 호소해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경들은 쇠파이프와 곤봉을 휘둘러대며 사람들을 인근 상가 쪽으로 밀어붙였다. 전경들이 휘두른 곤봉에 현대중공업 노동자 김희종(노조 조사통계부장)씨가 머리를 다치는 등 쓰러지고 타박상을 입는 이들이 속출했다. 육교와 상가 옥상에 촘촘히 모여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전경들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전경이 사람 쳐요!” “폭력경찰 물러가라.”

울산공장 담장 안에서는 바깥 상황과 격분한 노동자들을 자제시키는 모습이 역력했다. 상공의 헬기에서는 “사내에 잔류하며 농성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앞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협박성의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가까스로 공장 안으로 들어간 각계인사들에겐, 점점 불어날 집회참가자들이 결국 전투경찰들을 밀어내고 집회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윽고 각계 인사와의 면담을 가진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정리해고되면 어차피 생존권을 박탈당할 테니 깨지더라도 끝까지 현장에 남겠다고 조합원들은 말했다. 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니 나가라’고 하는데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며 현장의 비장한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 기획실장은 “회사측에 인건비를 얼마냐 더 절감하면 정리해고를 철회할 거냐고 묻지만 사측에선 딱 잘라 ‘그건 의미없다’고 답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희망되지 형태로 8천6백명이 해고되고 월 40-60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노조측은 어떻게든 정리해고만을 피하기 위해 또 다시 2천5백여 원에 달하는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가제 등 고통분담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끝까지 정리해고를 고집하고 있다. 이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리해고의 전제조건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현대자동차는 정부와 자본의 일대 목표인 ‘정리해고 단행’의 시험장일 뿐이었다. 여기에서 생존권은 관심 밖의 일이다.

지금 이순간, 남아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책임지고 있는 노조위원장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중재자를 자처하고 온 노동부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수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테니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라”고 노조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애초의 정리해고 대상자 1천5백62명 모두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심경을 털어냈다. 저녁 8시 집회장에는 6-7천명은 족히 되어 보이는 조합원과 가족들이 모여 들었다. 경찰병력이 배치된 이후, 사람들이 빠져나가기엔 커녕 더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한 노동자의 설명이다. 상처입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앞에 나선 지원 스님(전국불교노동연합 대표)은 “이렇게 해야만 생존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생명의 손실없이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밤 11시경 각계인사들은 끝내 사측과의 면담엔 실패하고, 노시간 중재를 위해 내려온 노무현 의원 등 국민회의 중재단을 만났다. 중재단은 공권력 투입 자체를 요청하면서도, 정리해고를 노조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만큼은 다름이 없었다. 면담을 마친 대표단의 일원은 “노동자들은 완전히 질벽 끝에 선 거야”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루가 지난 19일까지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에게 남겨놓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위원장, 가족 인터뷰 2면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았던 나종일, 조백현, 이은희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재소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교도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 제출하려던 '계구(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기구)사용에 관련한 시정서'(보고전)를 중도에서 가로채 폐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과장은 "괜히 소란을 피우면 이감시키겠다"며 장윤영 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월 12일자 참조).

지난 18일 장윤영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장 과장 및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별면담에서, 장 과장은 자신이 장윤영 씨의 '보고전'을 폐기했음을 시인하며 "나를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청원을 받아들이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동석했던 장윤영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장 과장의 불법행위가 밝혀지자 소장은 "다시 청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장윤영 씨와 그의 동료들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폭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재소자는 "교도관들이 폭력조직과 결탁해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칭 '건달 징역'이라고 불리는 폭력배들이 '재소자를 길들인다'며 교도관의 묵인아래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순열감사시 소내문제를 제기했던 이 아무개(특수감도·살인) 씨가 공장에서 집단폭행 당한 뒤 현재 출역을 금지당했으며, 또다른 재소자 이 아무개(강도치사) 씨도 공사장으로 끌려가 두 차례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달징역들의 폭행이 교도관의 암묵적인 승인아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집단구타를 자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달징역들이 편지배달이나 공장반장 등의 권한을 맡아 하면서 재소자에게 불건상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 요약>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우리 조합원들 손에 쇠파이프를 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맑은 눈에 눈물 흐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성과물이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담장 저편에 경찰을 배치해 놓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우리를 저버리면 우리도 회사를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끝내 우리를 저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입니다.

오늘 밤(18일 밤) 국민회의 중재단을 만나면 그들에게 피를 토하며 우리 조합원을 살려야 한다고 끝까지 호소할 것입니다. 반드시 6백명을 잘라야 하냐고, 반드시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냐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우리, 희망도 절망도 하지 맙시다. 다만 우리 갈 길 향해 갑시다.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개인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던지지 맙시다. 자신의 생명, 동료들의 생명을 소중히 합시다. 이 땅에 우리들의 고귀한 투쟁의 흔적을 남겨 노동자, 서민들 가슴에 희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인터뷰>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대표 이영자 씨

- 언론에선 노조가 가족들을 인간방패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 남편 일자리 지켜내고, 공권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에서 가족들을 볼모로 이용하는 거라고 회사측이나 언론에서 악선전을 하고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랑 함께 여기 앉아있는 심정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죠. 오히려 노조에선 우리더러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해요. 아이들과 아내가 다치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줌마들은 집에 있으면 남편 걱정에 아무 일도 못하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대책위 차원에서선 끝까지 남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되든 남편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 두렵지 않으세요
= 헬기가 매일같이 떠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두렵죠.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엄마들과 아이들이 매우 친착하게 대처해요. 18일 새벽엔 갑자기 병력이 정문에 전진 배치됐었어요. 아이들아랑 모두 페퍼포그와 전경들 앞에 가서 항의했지요. 막 눈물이 나더라구요. 하지만 건너편 건물 옥상과 육교에선 시민들이, 그리고 옆에선 기자들이 격려를 보내줬어요. 그럴 때마다 힘이 나요.

버마, 인권활동가 국외추방

지난 9일 버마 정부에 의해 체포된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에게 국외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본지 8월 13일자 참조).

18일 아시아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버마 법원은 구금된 외국인들에게 긴급조치법을 적용, '중노동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 직후 버마 내무장관은 이들에게 국외추방을 명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1일(금)

제 11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

19일 오전 11시 광주 전남도청 5·18 기념탑 앞에서 한 외로운 의인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고인은 5·18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일원으로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섰던 김영철(50) 씨.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기획실장이었던 그는 80년 5월 27일, 윤상원 열사와 함께 도청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마지막 시민군이였다.

그는 윤상원 열사의 죽음을 목격한 뒤 자결을 시도했지만 실패, 계엄군에게 체포됐다. 이후 삼무대 영창에서 '간첩 혐의'를 씌우려는 계엄수사대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는 자살을 기도하며 머리를 콘크리트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갖게 됐다. 김 씨가 수사도중 자살을 기도한 것은 '간첩으로 몰리면 5월 항쟁이 국민에게 왜곡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81년 석방됐지만, 정신이상 증세가 심해져 84년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후 기나긴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투병중이던 김 씨의 의식은 5월 27일 이전 상황에서 멈춰 있었다. 그는 문병 간 친지들에게 박관현(82년 광주교도소에서 사망) 씨의 안부를 걱정하거나 "도청지도부의 임무를 윤상원 씨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곤

오랫동안 구독료를 못 낸

독자여러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지로번호 7618848

문의: 최은아(741-5363)

용공 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려

전국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작대책위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20일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용공조작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 시경이 명확한 증거없이 합법적 사회단체 회원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매도하고 동포에 차원에서 종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민이 참여한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으로 묘사하는 등 온 국민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구시대적이고 비이성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노동자들의 정례회고반대 투쟁의 최전선인 현대자동차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날 22일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용공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밖에도 "6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사람과 입원 치료를 해야할 중증 디스크 환자를 가둬놓았을 뿐 아니라 어린 자식이 있는 부부를 모두 잡아와 아이가 고아처럼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용공조작과 노동운동 탄압 즉각 중단 △부산시 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간기구 해체 △구속환자들의 입원치료 △부부 구속자 중 한사람의 불구속 수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국회에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범국민적인 구속자석방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랏빛수건, 다시 거리로

미석방 양심수 가족들, 배신감 표출

환영과 축제 분위기 속에 마점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됐던 민가협 목욕집회가 앞으로도 기약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8·15특사 이후 처음 열린 20일 목욕집회에선 사면에서 제외된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준법서약을 거부해 사면에서 제외된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 14년제 구금) 씨는 15일자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서약서를 쓰면 나갈 수 있고 어머니 고통도 끝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또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 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떠드는 무지하고 야만스런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천박함이 횡행하는 땅에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심오척 담 안일 수 밖에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약속과 달리 준법서약을 하고도 석방되지 못한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 씨의 가족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안 씨의 아들 영민 씨는 "아흔이 다된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옥바라지에 어머니마저 몸을 못 가누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했으며, 쓰면 내보내 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재구 씨는 당초 서약서를 거부하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자"는 아들의 설득으로 인해 서약서를 썼다고 한다. 안영민 씨는 "무기형을 20년으로 감형한다며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있는데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준법서약 소식에 사면을 포기했다는 민경우(범민련) 씨의 부인은 "이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것이 예전 독재정권의 횡포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날 또다시 보랏빛 수건을 쓰고 거리로 나온 민가협 어머니들은 "다시는 쓰고 싶지 않은 보랏빛 수건을 쓰게 됐다"며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상록수' 가르쳤다고 파면

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

지난달 28일 학교이사장(김창인 목사)이 집전한 학생부총회에서 자리를 비우고 학생들에게 민중가요를 가르쳤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당한 김용섭(영신여실고 국어교사) 씨 문제가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재단인 영신학원측은 김 교사에게 "사표를 제출하면 징계를 철회해주겠다"며 회유책을 내놓았지만 김 교사는 이 제의를 거부했다. 교사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직 처분을 받게 되

면 5년간 교사자격을 박탈당하며 김 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재심에서 재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정소송에 승소할 때까지 파직상태로 지내야 한다.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김 교사는 "지난 4월 학교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상담한 이후부터 학교로부터 사직압력을 받아왔다"며 이번 징계가 고의적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측의 징계사유에 대해 "부흥회 휴식시간에 동료들과 10여분 정도 교회밖에 나간 것을 근무지 이탈로 규정하고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특별활동시간에 '상록수' 등의 민중가요를 가르친 것을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자신이 공휴일에 '1MF시대 교사 1천인 선언'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단행동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몰아세우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번 징계로 인해 7년 동안의 교직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느낌"이라며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밝혔다.

영신학원은 전에도 보충수업 강요를 거부하는 교사를 담임직에서 해직시키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교조 활동을 자제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전교조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2일(토)

제 11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갈 곳 없는 세입자

수원시 권선4지구, 강제철거

97년 5월 재개발지역으로 결정된 수원시 권선4지구에서는 현재 철거민들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수원시의 남쪽 끝에 위치한 권선4지구는 전체 3백여 가구 5백여 명이 거주해 왔으며 현재 1백여 가구가 떠나고 2백여 가구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금 이곳은 관할시청인 수원시청의 지휘아래 마을 이곳저곳에서 철거가 진행되고있어 아직 이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경에는 수원시청 직원들과 철거를 맡은 동우환경, 그리고 수원 남부경찰서 등에서 70여 명이 몰려와 건물 몇 채를 철거했다.

[권선4지구철거민대책위원회] (철대위)는 "당시 건물에는 부모님이 모두 일터로 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혼자 있었다"며 "하지만 용역직원들은 개의치 않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밖으로 옮기고 곧바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건물의 한쪽을 부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행히 학생은 반대편 방에 있다 곧 빠져나와 큰 부상사는 면했다고 한다. 한 세입자는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낮에는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오후에 혼자 집에 남아있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걱정을 털어냈다.

철대위는 "이날 건물철거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부녀자 성 아무개(30) 씨는 용역직원들과의 몸싸움으로 바지가 벗겨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도움을 주려 봉고차를 타고 주민 5-6명이 달려오자 차안에 있던 주민들은 무시한 채

봉고차를 포크레인으로 쳐 일부와 파손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세입자는 "한 건물에 보통 4-5가구가 살고 있는데 1-2가구만 나가면 건물을 부수려와 바로 같은 벽을 사이에 둔 나머지 가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대위는 "시청측에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세입자들을 내쫓아야 한다'며 가족주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철대위는 "지난 7월 26일에는 한 집의 가족주가 자기집의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낮을 들고 행패를 부린 일도 있다"며 "곧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폭력을 행사한 가족주는 금세 풀려나고 오히려 세입자들이 더 많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세입자는 "세입자 중에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 한번 못 받아본 사람도 있다"며 "아무런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무작정 언제까지 나가라고만 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하나"고 항변했다.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는 2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현대자동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분과 체면을 위해, 외국자본에 아부하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한 명의 정리해고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흑자를 기록한 현대가 단 한번의 적자로 인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회장 일가의 재산공개와 기업환수를 주장했다.

또한 "무능한 재벌2세가 경영을 악화시켰는데 그 책임을 떠맡 흘려오늘의 현대를 건설한 노동자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진의 책임사퇴를 요구했다.

전국연합 이천재 의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을 얻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국민승리 21(대표 권영길)측도 "노조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에 나서는데 이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먼저 정치인들의 고통분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승리 21은 "지금의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보다는 정권에 아부하려는 근심만 남은 깡패경찰"이라고 비난하며 경찰을 제1순위로 정리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마친 후, 이들은 정부세종로청사로 자리를 옮겨 공무원에 대한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행진을 막는 전경들과 사소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21일 저녁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노조가 정리해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휴가기간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이달의 인권영화

<우리들의 사계>

제작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노동자뉴스제작단
감독 허은광/ 다큐멘터리/ 비디오/ 65분

"우주는 지구를 만들었다. 지구는 자연을 만들었다. 자연은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은 노동을 만들었다. 노동은 자본을 만들었다. 노동이 죽으면 자본이 죽는다. 그런 자본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 인간이 죽으면 지구가 죽는다. 곧 노동운동은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다." 삼미특수강 가공부에 22년 근무한 이종수 씨, 옆집 아저씨같은 그가 말하는 노동운동론이다.

노동운동이 뭐지도 모르던 그가 투쟁 속에서 5월 노동절의 의미를 말하고, 노동운동은 집회와 유인물 배포, 거리행진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며,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과연 누가 이 사람을 노동운동가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들의 사계>는 삼미특수강이 노동자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체 포철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1백87명의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이라는 아주 일차적인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기를 담고 있다. 주로 10년에서 22년의 장기 근속 조합원의 인터뷰와 노조의 투쟁과정을 카메라는 노동자와 일정정도의 거리두기를 하며 같이하고 있다.

그들의 투쟁일지는 서울 삼정 1백80일 투쟁, 서울 창원 포항에서의 분산 투쟁, 20일 아사 단식투쟁, 가족협의회와 삼미 본관점거, 대선을 통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등으로 일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일련의 투쟁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기대와 실망, 좌절 또다른 희망을 안고 대오를 정렬한다. 하지만 포철관계자와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한달 정도면 될 것이라고 힘차게 시작한 투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체념한 채 또 다른 시작을 준비중이다.

이들의 투쟁기간에 발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인 '근로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라는 판정서에도 거대한 포철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정부도 자본의 이익만 대변해주기에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는 국민정부에서도 노동자들의 설 땅은 정말 사라져 가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삼미 조합원들은 중노위를 힘없는 기구로 여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힘이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들의 사계>는 마이클 무어의 <로저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상시킨다. 플린트시의 대부분의 주민이 다니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을 철수하려는 GM의 사장 로저를 만나기 위해 쫓아 다니는 나(마이클 무어)는 끝내 사장을 만나지 못하고, 다큐멘터리는 황폐해져 버린 마을과 사람들을 보여준다.

외환위기와 함께 마구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삼미특수강 조합원의 투쟁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입단투하는 타 노조가 부럽습니다." 라는 말은 어느새 오늘날 대다수 노동자들의 역전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냥 삼미가 좋아요. 그래서 삼미와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2년차 조합원의 순수한 이 말은 이 땅의 노동자가 바로 서는 날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임을 암시해준다.

전미희(민주연론운동협의회 시민연합 '영화분과')
작품 문이처 (888-5123)

"교수임용제도 개혁하라!"

학생회, 김민수 교수 책임용 촉구

서울대 미대 디자인 학부 김민수 교수의 책임용 탈락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다.

김민수 교수의 책임용 탈락에 대한 논란은 한겨레 신문을 통해 최근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과 학계 일부에서는 "연구실적 최저요구치의 4배나 되는 단행본과 논문을 제출했던 김 교수가 연구 실적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책임용에서 탈락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학생들은 "비판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미대 교수들의 풍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교수의 96년 개교 50돌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에는 원로 화가들에 대한 친일 경력 사실에 대한 인용 외에도 디자인 학부 선배 교수들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그러한 비판의 시도가 문제가 되었을 거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뿌리깊은 미대의 '도제식 교육 시스템'이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사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당시 논문 발표 직후에도 미술대학의 교수회의에 소환돼 해명을 요구받는 등 압력에 시달렸으며, 발표문은 이후 출판된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제외되는 고초까지 겪어야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디자인 학부 학생회는 '김민수 교수 책임용 탈락 위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김민수 교수의 교수 책임용 탈락 철회 △ 학생들의 평가를 포함하는 보다 민주적인 교수임용제도의 개혁안 마련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달 말까지 본부의 인사위원회에 추천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책임용 탈락을 통고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본부는 미대에 제심을 요구했으나 미대 측은 이제 본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5일(화)

제 11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찰, 정치사찰 의혹
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

불법 사찰증인 것으로 보이던 경찰이 붙잡혀 그동안 암암리에 정치사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사찰의 목적으로 사무실을 염탐하고 있었던 최 아무개 경찰(영등포 경찰서 보안과)을 붙잡아 사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경장은 오전 11시경 중앙당 사무실 앞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신분확인 요청에 불응한 후 도주하다 당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처음에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밝혔던 최 경장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진보당 사무실 자리에 있었던 컴퓨터회사가 아직도 있는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며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청년진보당은 최 경장이 영등포구 지역을 12년 동안 관할해 온 보안과 형사이며, 지난해 2차례 있었던 사무실 압수수색(당시 한국노동청년연대)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밝히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진보당은 최 경장이 신분제시 요구에 거짓말을 하다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찰을 은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은 최 경장으로부터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사찰의혹을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문을 받고 그를 풀어줬다. 그러나 앞으로 영등포 경찰서 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경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절대 사찰 의도가 없었으며, 건물안에는 단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3

층에 있는 사무실 안을 들여다 보았다고 말하고, 컴퓨터 회사가 존재하는지 궁금했다고 하면서 "청년진보당의 집행위원장이 사무실에 있는지 알아보려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도주 이유에 대해 "(건물) 밖에서 대화를 청했는데 세명의 남자들이 몰려 나오기에 만약의 불상사가 생길까봐 도망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의 현재적 의미를 찾아
AI 한국지부, 인권캠프 폐막

한국 앰네스티 지부 주최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제1회 인권캠프」가 참석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고민의 여운을 남기고 23일 막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이번 인권 캠프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면서,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

혔다. 21일 고은태 교수의 '역사적 인권과 세계인권선언 이해'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캠프는 한국 인권운동의 발전적 방향 모색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과 더불어 '어린이의 권리', '노동권', '생명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주제에 관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회원 20명 이외에도 80여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참석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참석자들 간에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6월말 구속된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의 재판이 24일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제기가 진행되었다. 공소내용은 주로 그동안 진보민청이 발행한 기관지인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으로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 재판(9월11일 오후 4시)으로 연기되었다.

국가보안법 자료를 모읍니다.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된 공소장, 판결문, 성명서 등 자료 일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해나가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담당자 : 김정희 (741-5363)

25일자 주요 공판 안내는 관련 공판이 없는 관계로 하루 쉽니다.

인권의 눈으로 본 경제위기

'IMF, 인권과 교회' 국제포럼 열려

'IMF 경제위기'를 인권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교회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교회의 역할 : IMF, 인권과 교회'를 주제로 하는 국제 포럼이 24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서강대 다산관과 콘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회관을 오가며 6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첫날인 24일, 호세 라모스 오르타(동티모르 저항국민회의 부의장) 씨는 '아시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및 인권'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오르타 씨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등 억압적 군부 통치를 겪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획득이 진전되고 있다"고 서두를 연 후, "그러나 다른 한편 수백 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이 심화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오르타 씨는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하면서 좀더 평등한 경제모델에 대한 열망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경제 위기 : 원인, 영향, 교훈'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마틴 코(제3세계 네트워크 소장) 씨는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가 이제는 아시아만의 문제를 넘어 전세계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의 배후 요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는 금융자유화와 세계화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지구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노-정 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은 24일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복지 등 노-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삼미특수강 노동자 복지 △공공·금융 구조 조정의 성실한 협의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 등 지난 달 27일의 노-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재벌개혁은 외면한 채, 노동자 정리해고를 위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7백여 명이 참석해, 현대 자동차 문제의 티끌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주/간/인/권/호/름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 8월 17일 (월)

광주 인권지기, "5·18 헌정파괴범과 정치권 뇌물수수자들은 조건없이 사면하면서, 준법서약을 발미로 양심수 4백55명 중 3백61명을 가두는 현 정부 규탄" 성명 발표

◆ 8월 18일 (화)

각계인사, 현대차 평화해결 촉구 기자회견 가져/울산지역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노동자 지지시위/국민회의, 현대자동차 중재단 구성/서울대 교수협, '서울대 구조조정안 반대' 기자회견 가져/한전, 울진 산포리·삼척 덕산리·해남 외담리 원전후보지 내정/정치수배자 7명, 수배해제 요구 기자회견 가져

◆ 8월 19일 (수)

밀양북 대학생 2명, 사전구속영장 발부돼/대전도론회 당시 시민단체 비난했던 한국노단, 명예훼손소송 1억배 상판결/운영위와 교장의 불합리 비판한 교사, 징계위에 회부돼/국민회의, 특별검사제 도입키로

◆ 8월 20일 (목)

안기부, 통일대축전 참석 혐의로 문규현 신부 조사/송두울 교수, 황장엽 씨가 주장한 '노동당 간부 김철수'와 무관하다고 주장/국제금융노련, "현대자동차에 경찰력 투입엔 국제적 항의하겠다"고 밝혀/민주노총,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등과 관련 ILO에 한국 정부 제소키로/서울교협, 수해피해 행정관청 배상 판결/서울시, 노숙자 쉼터 40곳 확충/유엔, 북 인권조사 촉구/진보네트워크센터, 첫 시범서비스/부산·울산지역 공안조직대책위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어

◆ 8월 21일 (금)

경제5단체, 현대자동차 엄정한 법집행 촉구 기자회견 가져/현대차 노조, 정리해고 수용/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제주에서 개막/96년 한총련 간부, 시위학생 등에 숨진 김종희 의경 묘 사죄참배/위안부 입증 미포로수용소 기록 첫 공개/미, 아프간·수단 폭격으로 3백50여명 사망·실종/유엔 인권위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백두절 보고서' 채택/범국민운동본부, 현대자동차 평화적 해결 촉구 집회

◆ 8월 22일 (토)

양지마을 이사장 구속

◆ 8월 23일 (일)

현대차, 정리해고 2백77명 합의/송두울 교수, 황장엽씨 '월간 조선' 제소키로/국방부, '성희롱 방지지침' 마련/한국노동연구원, 하반기 실직자 20만명 추가 발생 예상/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현 신부와 전종훈 신부의 방북활동에 보안법 적용 검토/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대폭 확충 계획 밝혀/삼십개발 하일라리조트, 노조지부 설립 보복인사/교육부, '교육분쟁조정위' 설치키로

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김도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특별
기고

정부는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을 제출한 양심수 중에서 백태웅 씨 등 69명은 가석방으로, 김낙중 씨와 박노해씨 등 2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면서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을 제출하기만 하면 모두 사면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석방된 양심수 94명은 과연 사면된 것이 맞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면된 것이 아니다.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가 사면과의 차이는 없지만 그밖의 점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풀려난 양심수들에게 적용한 가석방제도와 형집행정지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가석방제도는 사면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수형생활이 양호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인바,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이 가석방기간

안에서 잔여 형기를 마쳐야만 된다.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된다. 즉, 형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인 것으로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지만 하면 언제든지(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감옥안에 가둘 수 있다. 권한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면과 차이가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그 주체이다.

**감옥 안에
있지 않을 뿐
여전히 죄인인
것이다**

사면이란 형사소추와 확정판결에 의한 처벌을 포기하는 제도로 그 내용은 사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사면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포기하는 제도로 특별사면이 있게 되면 이후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된다.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반사면과 같이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가석방과 사면의 효과는 엄청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석방은 무사히 가석방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단지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될 뿐이지 형을 면제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형선고의 효력 또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더군다나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즉, 가석방된 자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다. 다만 원래는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쳐야 풀려날 수 있는 것이지만 형기 종료 전에 미리 풀어주고 가석방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가석방된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다시 감옥

결론적으로 사면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면된 자는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므로 발뺌고 잘 수 있다. 그러나 가석방된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처분에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잡혀갈 수 있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은 감옥에 다시 가지 않는다는 보장 자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8·15 특별사면조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2·12 및 5·18사건, 전-노 전직대통령 부정부패사건, 한보사건 연루자들은 모두 사면복권되어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던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대통령이라는 몽상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자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나 되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준 것이다"라고 말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6일(수)

제 11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짐짝만 못한 재소자

정원 2배 수용, 환자 '고통' 호소

교도당국이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화상태의 구치소에 그대로 방치해, 비인도적 처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울산 조직사건(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홍정련 씨와 이은미 씨는 "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용돼 있어 발도 제대로 뻗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홍정련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평소 약과 물리치료를 통해 근근이 생활해 왔고, 이은미 씨는 구속 전부터 만성디스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연행 이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다. 포화상태의 혼자방에 수용돼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혼자방의 경우, 정원은 9-10명이나 현재 수감 인원은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9명이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잠을 잘 때도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해 "잠자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한다.

이에 가족들은 홍 씨와 이 씨를 독거방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치소측으로부터 "방 전체가 포화상태여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은미 씨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치료가 안된다면 복대라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치소측에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복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운동단압, 용공조직」 울산시민대책위」에서는 25일 구치소 보안계장을 면담해 △환자들의 외부 진료 허용 △직계가족 이외 면회 허용 △환자들의 독거방으로의 이전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치

소 측이 27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아이, 우리가 해요"

청소년 인권 다룬 고딩영화제

청소년 스스로 제작하고,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룬 고딩영화제가 지난 14일부터 예술극장 환인기획에서 진행됐다. 컴퓨터 통신상의 은어인 고딩(고등학생)을 제목으로 내세운 이번 영화제는 그동안 제도권 내에서 왜곡되어온 청소년 영화를 극복하고 성인 영화의 홍수 속에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영상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독립영화협회 주관으로 기획되었다.

총 3부로 기획된 이번 영화제는 청소년들이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촬영한 학생영화 7편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중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영파여중 방송반)와 <우울한 종례시간>(정소년 영상반)은 아마추어답지 않은 치밀한 구성과 확고한 문제의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영화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는 학내 폭력씨클인 '일진회'의 실제 인물들이 직접 촬영에 임해 화제를 모았으며,

소위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그들의 눈에 비친 일그러진 현실과 그들만의 비틀린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주목받은 <우울한 종례시간>은 89년에 제작된 영화로 교실에서 없어진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기합을 주고 도둑이라고 의심되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내라는 등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끝내 물건을 찾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이러한 교사의 모습을 통해 권위적이지만 하고 실속없는 우리의 교육현실과 교과서의 형식주의를 비판으로 그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대다수 출품자들이 입시의 스트레스와 기계적인 교육, 학내폭력 등 청소년들이 겪는 인권문제와 그들이 느끼는 불신과 불만을 엿보게 해준다.

이번 고딩영화제를 주최한 남침섭(독립영화협회의 대표) 씨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영화산업의 소비적 대상이 아닌, 영상문화의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제작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영화제작 참여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독립영화협회는 영화상영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제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하이틴물로 통칭되어 오던 제도권 속의 청소년 영화에 대한 비판과 영상제작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국가보안법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91년 5월 31일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7조 적용사건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구속·압수영장 등 법적자료와 관련 성명서 등 일체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해나가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보낼 기간: 98년 9월 30일까지 (문의: 김정희/김수경, 741-5363)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됐다. 냉전과 미국의 영향 아래 참혹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국, 대만, 일본(본토), 오키나와 등 4개 지역 사무국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 오키나와 반기지투쟁과 동아시아의 평화창조

-아라사끼(오키나와대 교수)

종전후 동아시아의 군사요충지가 필요했던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분리해 단독 지배하에 두게 된다.

52년 발효된 대일평화조약 제3조 아래 오키나와에서는 해병기의 반입과 전투작전행동이 자유롭고 포령·포고라고 불린 미군명령이 법 전체에 우선했다. 오키나와는 미국에 '병합'된 것도 '할양'되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오키나와의 출입지역은 미군에 의해 엄중히 관리되었다.

51년 9월 오키나와에서는 일본복귀운동이 전개됐는데, 이는 오키나와를 미군정 하에 둔 채 독립하려는 일본에 대한 항의인 동시에 대일평화조약에 반대해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미군정에 의해 탄압받았고, 운동 조직들도 점차 소멸되었다.

이후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 따라 세계적인 반전운동이 야기되자 이 운동과 결부되어 있던 오키나와에서도 반기지투쟁이 고양되면서 미국의 배타적인 오키나와 지배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69년 11월 일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오키나와를 72년에 반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오히려 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이용해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집중시켰고, 결국 일본 전면적의 0.6%밖에 안되는 오키나와에 미군기지의 75%가 집중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95년 가을 미군범죄를 계기로 야기된 오키나와의 평화·인권·자립을 요구한 싸움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에 정면으로 대립한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통일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한 미군기지의 소멸·철거를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도 될 수 있다. 역으로 미군기지의 소멸·철거를 요구하는 운동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창조의 길을 여는 것에 연결된다.

◆ 일본과 미국의 중국전략-대만 백색테러를 중심으로

-임서양(대만대표단 단장)

미국과 소련의 대항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이 소련의 부속품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새로운 초점이 되었다. 미국국가안전위원회에서는 대만과 대륙을 갈라놓음으로 '대만이 공산당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고, 또한 '대만위치미정론' '대만독립론'이 제출되기도 했다.

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대중국정책엔 대변환이 이뤄졌다. 그들은 대만을 다시 '적색중국'에 반대하는 군사거점으로 삼고 계속 장개석 정부를 도와 반공정책을 추진했다. 각종 군사·경제원조가 재개되고 제7함대가 대만해협으로 급파되어 대륙 홍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장개석 정권은 이 속에서 안정을 이루고 삼엄한 백색테러 공산척결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므로 이 최후의 기지를 공고히 했다.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는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30년대 대만의 좌익 역사전통과 미소대항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조선의 분단-4·3항쟁을 중심으로

-강정구(동국대 교수)

4·3항쟁에 대한 미국의 초토화작전이나 반인륜적인 살상행위는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과 조선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역사지향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구조적 산물이다.

해방공간에서 조선사회에 외세개입이 없었다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필연이었다. 이는 이미 1년이상 반공이데올로기 선전이 진행된 후였던 46년 8월 미군정정의 여론조사에서 일반시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한 데서도 드러난다.

미국은 45년 4월 이후 루즈벨트의 해계모니전략(상호협조 아래 미국의 주도적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에서 트루만의 지배전략(주도국가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종속국가나 비주도국가의 이익을 무력·강요를 바탕으로 희생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한 뒤, 조선전략 또한 공동점령과 다국적 신탁통치안을 내용으로 하는 해계모니전략에서 분할점령 등의 지배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략 아래 미국의 남한 점령 정책은 친일파의 보호·육성과 미국이 남한을 직접 통치하는 군정의 실시였다. 이는 친일·민족반역자들 외에는 미국의 지배전략에 호응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조선의 혁명적 상황을 분쇄하여 그들의 세계전략구도에 강제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무력과 통치력을 독점하는 군사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3항쟁은 5·10 단독선거를 분쇄해 민족분단을 막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 민족자주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족항쟁이었으며, 미군정의 주구인 경찰, 서북청년단 등 테러단의 인민수탈과 폭압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인간해방투쟁이었다.

조선의 분단은 미국이 반인륜적인 만행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일방적인 이해관철을 추구하는 지배적 세계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인의 역사주체성은 무력투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의 한 형태가 바로 4·3항쟁이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7(목)

제 11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철거폭력업체 다윈, 또 활약

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때마다 끊이지 않고 이름이 등장하는 철거용역업체 적준(현 다윈 건설)이 지난 5월 서대문구 남가좌동 제7구역 재개발 현장에도 강제철거에 동원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윈건설은 올해 초 용산구 도원동에서도 전장을 방불케 하는 철거폭력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지난 6월 17일 이래 천막농성중인 주민 양희숙 씨는 "지난 5월 2일, 이주대책과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옥 주, 세입자 5세대가 살고 있는 백이분 씨 집에 다윈건설 소속 철거용역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노모 백이분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사지를 들어서 집밖으로 내던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는 딸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이 한창인 남가좌 제7구역엔 현재 전체 5백12세대 중 6세대만이 남아 공사장 앞 도로 한편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한편 시공업체인 삼성건설도 남가좌 제7구역에 들어올 당시부터 "반대하는 집은 강제철거하면 된다"며 강제철거 방침을 자랑삼아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6년 12월 조합원 총회의 녹취록에는 "종전에는 재개발 사업에 노하우가 없어서, 반대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못 내보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 세입자들은 전부 강제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8개월이면 공사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라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박 아무게 과장의 발언이 기록돼 있다.

또한 남가좌 제7구역 철거소장을 말

고 있는 다윈건설의 김경용 소장은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던 주민들을 찾아와 자신을 "도원동 철거 당시 대리였다"고 소개하면서 "도원동 철거 보지 않았냐"며 주민들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삼성건설이 공인한 대로, 이주대책과 보상 문제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던 6세대 주민들은 악명높은 다윈건설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한편 다윈건설은 천주교인권위 등 사회단체들에 의해 지난 달 중순 '경비용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정부의 양심수 관련 정책에 실망한 재야·시민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26일 오후 6시 향린교회에서는 권영길, 이갑용 등 각 재야·시민단체대표 80여 명이 참여하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기인 회의를 통해 양심수 석방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민간통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홍근수 목사(향린교회)는 "이번 양심수 석방으로 김대중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켜 이 땅에 더 이상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목사는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이 이번 8·15특사에 대해 양심수를 추가석방하라고 요청한 것은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며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자질미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재전(한겨레신문사 기자) 씨는 "김대중 정권은 이미 지난 6개월간의 정치를 통해 정권의 실체와 실적을 드러냈다"며, 더 늦기전에 총체적으로 잘못된 김 정권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2일 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할 공동대책위원회는 △법민권,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폐 △자유로운 민간통일 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 석방 △모든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해 활동한다.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재벌퇴진·실업대책 촉구

26일 오후 12시 서울역 광장에선 '경제파탄의 주범 재벌총수 퇴진과 실효성있는 고용·실업대책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중배 등, 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앞으로 두달 동안 매주 수요일을 '범국민 서명운동의 날'로 정해 전국 2백여 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5백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는 울정기국회 관련입법 청원서에 제출되고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다음달 12일 부산, 울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동시에 10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실업자 대행진'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 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제국주의와 성폭력 -후지메 유키(대판외국어대 교수)

미군에 의한 일본여성 강간 사건은 점점 직후부터 반발한다. 점점 1개월 동안 전국에서 강간당한 여성은 최소 3천5백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 총사령부는 점점 초기부터 신문·라디오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통해서 미군 병사의 일본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는 점점목적에 위반한다고 하여 금지하였다.

52년 4월 점령해제 이후, 그때까지 고소가 금지되었던 미군병사의 성범죄 사건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에 바탕을 둔 행정협정에서는 미군범죄에 대하여 미국측이 전속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국 송환으로 유야무야되거나, 체포되었으면 서도 미 군법정에서 간단히 무죄가 되는 등 피해자측은 피해를 호소해도 결국에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53년 10월 협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집행 중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측으로 넘어왔지만 미군측으로부터 수사를 저지당하거나 일본 검찰 스스로 대미관계에 신경을 써서 기소하려 하지 않는 등, 가해자를 심판하고 죄를 묻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미군은 또 압도적인 물질력으로 식민지·점령지의 여자들을 굴복시켜 '매춘'하는 일이 관행이었다. 당시 미군이 중시한 것은 성병에 의한 군대의 전력 저하이며, 그 대책이 여자들에 대한 관리 즉, 강제 성병검진의 제도화다.

미군은 일본에 진주한 각 부대가 동경에 도착하면 곧바로 동경 내의 사창지역을 시찰하고 그 가운데 4개소에 미군의 성병예방을 위한 세정소독소를 설치했다. 연합국총사령부는 9월 하순, 동경도 위생국에 대하여 동경도 내의 사창가에 대한 설명과 여성의 알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령군 병사가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동경도의 책임 하에 여성의 검진을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명령하여, 그 결과 1개월 후에는 매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여성에 대한 강제검진을 합법화하는 성병 예방 규칙이 제정된다. 그리고 11월에는 이것이 전국화한다. 점점 2-3개월 사이에 매춘전문점이나 카바레, 댄스홀, 맥주홀 등 점령군에게 여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전국 각지에서 지방청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매춘이 일상화된 미군병사들 사이에서 성병은 만연했고, 이에 따라 46년 1월 '폐창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폐창령에 따라 창기단속 규칙 등은 폐기되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관리 매춘제도의 폐기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공장제도가 철폐되기는커녕, 전후에는 미군용의 새로운 공장지구마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해방자라는 미군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일본여성들은 전에 경험한 적 없는 조직적 성폭력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기리꼬미)에 의한 강제 성병검진, 강제치료는 그것 자체가 잔인한 성폭력이었다. 미군과 그 지시를 받은 일본정부·지방청은 미군 병사를 성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여성을 다짜고짜 납치해 강제적인 검진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 폭력을 합법화한 것이 앞서 언급한 성병 예방법이다. 매춘을 한다고 의심하는 것만으로 폭력적인 연행이 자행되었고, 검진하는 자리에서 다수의 일반 장병이 '성병교육'이라 사칭하며 여성을 세워놓고 구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제검진의 충격과 차욕으로 자살사들이 발생했고, 강제검진에서 받은 타격은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도록 만들어 '신세를 망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56년 매춘방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일본 공장제도의 긴 역사는 여성에게 매춘을 시키고 관리·이용해온 쪽이 아니라 매춘을 하고 있는 여성 쪽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종식되었다. 그녀

들은 일본의 국가와 사회에서 버려진 국민이 되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여자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보는 성도덕, 미군에 의한 피해고소 금지, '전략'한 피해 여성을 이용하면서 병원군 또는 범죄자로 취급한 미일권력자의 협동, 피해자측에 죄와 벌을 전가하면서 공장제도에 종지부를 찍은 매춘방지법의 제정,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태도 등. 모든 것이 이 시대 성폭력 피해자의 체험을 피해자 쪽에서 말하고 고발하는 일을 터부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을 불가능하게 해 왔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 오늘 날까지 침묵해 온 것은 이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그녀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결과였다.

◎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인권 -다메시다 사에코(오키나와대 강사)

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세 명의 미군에 의한 소녀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미군이 오키나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해머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범죄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한 여대생은 "지금까지 나는 여자가 노여움을 표현하는 것은 상스럽다, 억제해야만 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 여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들을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의 여성들이 소녀 강간사건을 통해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평화'에 대한 희구는 한층 강화되었다.

국가폭력을 포함해 모든 폭력 문제 및 평화 문제는 결국 현실을 살고 있는 개개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권리가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다.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 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한국)

◎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 4·3을 중심으로
- 김성례(서강대 교수)

50년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은 반공규율체제의 확립에 단초가 되는 사건이다.

당시 토벌대에 의한 여성의 수난은 집단강간과 반인륜적인 성폭력의 양태로 나타난다. 임신부와 출산하고 있는 부녀자를 "빨갱이 종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총살하고, 대중 앞에서 연행자들 가운데 남녀를 지목하여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다 총살하는 반인륜적이고 도착적인 성적 폭행은 '집단 광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러한 제주주민과 여성의 무고한 희생은 "빨갱이"에 대한 증오의 산물이었다. 4·3 당시 여성들이 경험한 도착적인 성폭력은 여성을 빨갱이 인종을 재생산하는 "빨갱이의 몸"으로 재현하여 상상적으로 자행된 빨갱이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테러라 할 수 있다.

빨갱이 혐의를 받고 연행된 마을 주민들이 집결해 있는 장소에서 나체의 여성에게 공개적인 성교행위를 강요하고 나서 성적 부위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폭파시키는 사례라든지, 외딴 집에서 공포에 떨며 혼자 조용히 갖을 만들고 있던 임신자의 처를 집중사격하여 몸의 흔적도 없이 폭파시킨 사례는 "빨갱이의 몸"에 대한 가혹행위 이상의 의미를 시사한다. 굳이 여성의 몸을 폭파한 것은 폭파된 여성의 몸이 성적욕망의 해방을 의미하고 또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마을 주민에게 빨갱이 없는 반공사회의 해방을 전시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도 침묵당한다. 4·3 피해에 관한 증언은 대부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같이 제3자인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여성피해자 가운데 성적학대 피해자인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직접적인 증언은 아직 없다. 특히 강간을 비롯해 성적유린에 관한 증언은 주로 남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 당시 보편화되었던 성고문의 방법은 여성을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놓고 쇠줄(채찍)로 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고문 여성피해자의 증언에서는 '나체' 부분이 빠져있다. 토벌대 경찰간부였던 김호겸은 여성을 '나체로 매달았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둔 반면, 여성 증언자는 단순히 거꾸로 매달려 매달았으나 혐의가 풀려나 살아나온 사실을 강조한다. 여성의 침묵과 남성의 증언 사이에는 성고문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여성이 고통을 당하는 자라면 남성을 고통을 구경하는 객관자이다. 여성은 자신의 찢겨진 나체를 바라볼 수 없다. 나체의 고통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몸의 고통은 몸 그자체로 밖에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이것이 고통의 재현의 한계이다. 당시의 피해자 중에는 미혼의 처녀들도 있었다.

반공폭력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 폭력을 몸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언어를 거부한다. 대신에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과 기억의 고통에 맞서는 방법을 취한다. 성폭력의 체험을 언급만 하더라도 여성피해자는 혼절한다. 이와같이 공포에 시달리는 육신은 말을 거부한다.

◎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오금숙(제주4·3연구소 연구원)

4·3과 관련된 여성피해 유형은 크게 '고문치사와 성폭행' '토벌대와의 강제결혼' '4·3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후유증'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서북청년단이 강제결혼을 감행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성적 대상으로 맘에 드는 여자를 골라 강제 결혼하는 사례와 또 하나는 제주에 안착하려는 목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재력가의 딸과 강제결혼하는 사례다.

49년 3월이 되면 초토화 작전이 마무리되면서 유혈 사태는 수그러든다. 수많은 고아가 발생했고 남편과 부모형제를 잃은 여성들이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의 삶을 괴롭혔던 것은 생계 유지, 연좌제, 호적, 사회적 편견과 밀시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간을 당하고서도 속으로만 삭여야 했던 사람들, 가족의 죽음을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 부모가 처형될 때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야 했던 사람들, 지옥같은 시절을 견뎌 낸 이들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떠한가?

4·3 당시 여성은 '인간'이기보다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취급되었다. 서청이나 응원경찰들은 여성을 '성적 노리개'라는 도구로 인식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왜곡된 남성우월주의적 성의식은 국가적 폭력 속에 더욱 확대되었다.

4·3 피해를 분석할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동서 냉전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승만은 서울에서 열린 서북청년단 총회에 참석해 "당신들이 야말로 신원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격려하면서 "저기 남쪽 끝 외딴섬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런 그들이 제주에 와서 "빨갱이 여론"을 고문, 강간, 살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동서 냉전이 몰고 온 국가폭력이고 잔혹한 인권유린이다. 이제 우리는 여성인권운동의 강화, 왜곡된 성의식의 교정, 반전평화운동의 활성화, 국제적 여성운동의 연대로 나서야 한다. 특히 전시와 같은 상황에선 여성 피해가 더욱 잔인하고 큰 규모로 나타난다. 미래의 인류역사에 있어서도 '전쟁'은 이와 똑같은 고통을 여성들에게 짐 지울 것이다. 진정한 여성인권확보는 반전평화운동 속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8일 (금)
제 11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최근 대학생 8백여명 연행

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

8·15이후 학생운동권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탄압이 거세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과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무조건 연행' 방침을 표명한 정부는 8·15 범민족대회가 열린 서울대에서만 5백여 명을 연행한 데 이어, 2주일이 안되는 기간 사이 전국각지에서 최소 3백5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연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또 한총련 소속 학생 외에도 이들의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대학생들까지 전원연행한다는 강경방책을 내세우고 있어 연행되는 학생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학생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1일에는 대구대에서 경찰이 발포한 공포탄에 학생이 귀를 다치는 총기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3일간의 학생 연행사건

△15일: 범민족대회 참석한 학생 5백여 명 연행/ 서울대 봉쇄에 대해 항의 농성을 하던 서총련 소속학생 53명 연행/ 임진각 행사에 참가했던 한총련 대표 10명 연행/ 판문점 진출을 시도한 한총련 소속 학생 93명과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11명 전원 연행

△16일: 인하대 총학생회장 이영일 씨 연행

△17일: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과 자연대 학생,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 경희대 김동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4명 연행

△18일: 김동일 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5명의 연행에 항의하던 경희대 학생 40여명 전원연행/ 현대본사에 항의

방문한 대학생 50여명 전원 연행

△21일: 수해복구활동중이던 한총련 소속 곡상옥(공대 학생회장) 씨등 순천향대생 12명과 충남대생 3명 연행/ 보안수사대 앞에서 수해복구활동 학생 연행에 대해 항의 농성을 하던 대학생 25명 전원 연행/ 대구대 인문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연행

△23일: 강원대 오봉석 부학생회장(사회과학대), 수해복구활동중 한총련 미탈퇴를 이유로 연행

△24일: 대구대 류경철(작년 인문대 회장) 씨 국보법위반 혐의로 연행

△25일: 5기 한총련 대의원인 전홍일(용인대) 씨와 그의 연행에 항의하던 용인대생 8명 전원 연행

△26일: 아주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지역통일추진 관련해 간부수련회 도중 연행

△27일: 부산대 김광수 부경총련의장과 집행부 5인 범민족대회 이유로 연행

"국가보안법 괴물 처치해 주세요"

부산·울산 구속자 자녀 호소

"8·15 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일 오후 탑골공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공원앞에 전시된 사진 속의 얼굴들은 "난 아직 갇혀있소!"라고 말한다. 이날 목요일집회에는 '부산·울산 지역 조직사건' 구속자의 자녀들이 참석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본지 8월 13일자 등 참조).

구속자 홍정현 씨의 딸 누리(9)는 "이제 곧 엄마가 착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져서 풀려날 거라고 믿어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의 딸 민혜(11)는 "비록 지금 전 어리고 아무 것도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 지금의 현실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너무 많은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또 민혜는 "대통령 할아버지! 울산에 얼른 오셔서 정리해고를 막아주시고 구속자를 빨리 석방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이라는 5글자의 괴물도 빨리 처치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김창현 청장의 부인 이영순 씨는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 서민을 위해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울산 시민들이 이번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어떤 미화원 아저씨들은 일찍 청소를 마치고 석방요구 서명을 받기 위해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새벽 2시에 나가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백태웅, 변의숙 씨 등 이번 8·15 시면 때 풀려난 사람들도 참석해 감옥에 남아 있는 양심수들의 이름을 함께 했다. 92년 민족해방에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홍관 씨는 "양심수를 감옥에 여전히 남겨두는 이 사회는 창살만 없을 뿐 감옥과 마찬가지로"라며 "이 감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석방자 모두, 풀려난 기쁨은 잠시였고 감옥에 남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표정이었다.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 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제주 4·3과 여순사건

◎ **여순사건의 회고**
김계유(사학자)

48년 10월 19일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미리 반란을 준비중이던 신월리 14연대는 탄약고와 무기고를 점령하고 3개 대대 병력을 장악한 뒤 20일 새벽 여수 시내를 장악했다. 이어 21일 여수군청을 비롯해 시내 금융기관과 중요기관의 사무를 인계받았으며, 23일에는 우익진영의 주요인사 14명을 처형하는 등 88명의 경찰과 민간인을 처형했다. 그러나 14연대는 25일 국군의 대규모 공격을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26일 시내로 진입한 진압군은 4곳의 수용소에 시민들을 집결시켰다. 이로부터 3일간, 반란에서 살아남은 경찰관과 우익진영 요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처형대상을 골라냈다. 그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다니다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뒷들로 끌려가 즉결처분을 받았다.

28일부터 40세 미만의 남자들이 모두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돼 반란 가담여부를 심판받았다. 대상자는 약 5백 명 가량이었는데, 거의 보름동안 진행된 가담자 색출작업은 천인공노할 인간도살이었다. 쌀쌀한 초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팬티만 입힌 알몸으로 종일 학교 마당에 앉혀 놓았으며, 한사람씩 조사실로 불러들여 장작으로 매타작을 하면서 억지자백을 받아냈다. 장작개비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마치 동물의 마지막을 알리듯 울부짖음을 토하거나 생똥을 싸면서 까무라쳤다. 누구는 매질이 무서워 자백을 하고 또 누구는 삶 자체가 싫어져 자백하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해서 4개 수용소에서 즉결처분된 사람과 종산초등학교에서 처형된 사람의 인원수가 당시 계엄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여수 1천2백 명, 순천

1천1백34명에 달했다.

◎ **제주 4·3 양민학살사건**
양조훈(제일일보 전편집국장)

제주 4·3의 도화선은 47년 3·1절 시위에서의 발포사건이었다. 이후 제주도에서는 3월 10일부터 민관합동 대규모 총파업이 전개됐고, 미군정은 본토에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끌어 들여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과 서청 단원들이 '빨갱이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투옥·고문하는 등 백색테러가 잇따랐다. 4·3 발발 직전까지 1년간 2천5백 명이 구금되었으며, 48년 3월 모슬포 등지에서 잇따라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긴장은 계속되었다.

48년 미군정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남로당 제주도 조직은 4월 3일 '단선 반대'의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5월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총선 결과,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됨으로 제주도는 남한 내에서 유일하게 단독선거 거부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5·10선거가 저지된 직후 군 병력과 함께 응원경찰대도 크게 증강됐다. 48년 10월 17일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지대를 통행하는 자에 대해 전원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제주도에서 해안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들판이든 마을 안이든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발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작전이었다.

가장 참혹한 희생은 48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집중되었다. 토벌군은 계림리들의 피난처와 물자공급원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1백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웠다. 태워 없애고, 굶

겨 없애고, 죽여 없애는 이른바 삼진(三盡)작전은 한라산 기슭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49년 1월 17일 해변마을인 조천면 북촌리에서 무장대의 기습으로 군인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흥분한 군인들이 마을의 온 가옥에 불을 붙이고 남녀노소 약 3백 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군인들은 이른날 대대본부로 주민을 집결시켜, 그 가운데 1백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빨갱이 색출작전' 아래 총살했다.

48년 12월 14일 밤 표선면 토산리에 들이닥친 토벌대는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들을 총살했으며, 젊고 얼굴이 고운 여자들을 불러내 성폭행한 뒤 총살했다.

토벌대는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며 그 부모·형제를 대신 학살했다. 48년 12월 22일 표선리로 소개된 가시리 주민 76명은 호적을 일일이 대조당한 뒤 집단 학살됐다.

48년 제주도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 희생자의 숫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3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당시 섬주민을 25만 명으로 본다면 8명 중 1명이 희생된 셈이다. 당시에는 '전쟁 중에는 적군과의 교전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전투를 계속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철칙마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초도화작전의 배후에는 미군이 도사리고 있다. 4·3 발발 직후 제9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장군은 "군정장관 단장군의 정치고문이 제주폭동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도작전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제9연대 정보참모였던 이윤라 씨는 "CIC 소령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적성 지역으로 간주, 토벌하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합본 10호 발행

98년 상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0호가 나왔습니다.

· 구입 문의 : 741-5363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 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아래 두 사람의 글은 1주제와 2주제에서 발표했으나, 대만의 백색테러에 대한 증언이어서 여기에 모아 소개한다<편집자주>.

◎ **임서양 (대만대표단 단장)**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북으로 천도한 국민당 정부는 49년 5월 21일 군사계엄령(87년까지 지속)을 발표했다. 그해 말부터 위험분자로 간주된 이들에 대해 대량 체포가 시작됐다. 내전을 반대하고 국공 평화회담을 주장하거나 평화건설과 민생 문제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과 언론은 무조건 공산당 간첩, 파괴분자, 음모분자로 간주되었다.

한국전쟁이후 미국이 대북의 국민정부를 전면 지지하게 되자, 국민당 정부는 절호의 기회를 틈타 50년 하반기부터 대규모의 '붉은 분자 색출, 숙청'이라는 백색테러를 감행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민당 정부가 정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 10년 동안 체포된 인원이 8만에서 10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5천에서 8천 명에 이른다.

당시 체포부터 취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절차는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으며, 징역형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러 계층의 특무기구는 상호경쟁 속에서도 "1백명을 잘못 구속하는 일이 있더라도 잡아야 될 한 명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구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1. 취조는 무기한으로 허용되고 잔혹행위는 일반적이었다.

2. 군법회의로 이송되면 처음에는 기소장도 없었고, 변호사나 방청객도 없었다. 때로 판결문도 없었다. 상소는 불가능했고, 사형도 1심에서 확정되어 즉각 집행되었다.

3.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형기가 만료되어도 계속 감옥에 구금당했고, 보증인이 없으면 형기가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았다.
4. 석방 후에도 엄격한 감시, 통제하에서 정기적으로 군경기관에 근황을 보고해야 했으며, 원거리 여행 시엔 사전에 신고해야만 하고, 감시기구는 해당자를 수시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5. 석방 후에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 **마수아 (대만지구 정치수난인호조회 부녀대표)**

50년대 백색테러에서 여성 수난자가 전체 수난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적지만, 2백여 명 정도의 여성이 정치범으로 구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정치수난자들은 보통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는데, 수사관들은 수난자들에게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혼미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사건 정황에 따라 낱인을 하도록 강요했다.

한 여선생은 학생들의 명단을 말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다. 수사관들은 바늘로 손발톱 끝을 찌르는 고문을 한달 가량 지속했으며, 그녀 앞에서 남편이 각혈할 때까지 형구로 구타했다. 심지어 구리술로 음부를 찌르고 바늘로 유두를 찌르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결국 선생은 처형당했고, 남편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로 7년형에 처해졌다.

출감 후의 생활은 '조그만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옮겨진 것과 다름없었다. 모든 정치범은 출소한 뒤 반드시 관할지역 경찰 또는 정보부서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정치범은 비교적 형기가 길기 때문에 출소 후 나이가 많은데다 수감 경력으로 인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지, 직장을 가리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 때문에 출옥 후의 양심법들은 크나 큰 상처와 곤경에 빠졌다.

대만의 백색테러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 5월 20일 계엄령 실시 이후, 근 40년만인 87년 7월 15일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법령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대만과 대륙이 계속 분열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잠재적인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만화사랑방

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8월 29일 (토)

제 11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

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는 사전에 통일대축전 참가를 통일부와 안기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승훈 신부, 문규현 신부 등 천주교 전국사제단 일행 9명은 지난 11일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 미사 집전 등 남북 천주교 교류를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북한은 사제단 일행에게 일부는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행할 것을 제의했고, 사제단은 문규현, 전종훈 두 신부를 과전하고, 나머지 신부들은 예정대로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측의 신도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제적 양심에 따른 것이다. 사제단 일행은 논의 직후 이 사실을 통일부와 안기부에 알렸고, 당시 통일부는 "알려줘 고맙다"고까지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5일 문규현 신부는 관문점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수락한 통일대축전을 북에서 거부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거래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또 문 신부는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 촉구 △남북 대화의 재개 등을 촉구했다. 문 신부의 이같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북한과 방북 사제단 간에 다소 꺾그러운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고 사제단 일행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 신부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 방북 사제단의 일원이었던 문정현 신부는 "미리 통일부와 안

기부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렸고, 안기부는 발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안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또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 신부의 사법처리가 자칫 민간 대북화해 협력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민족의 화해를 위해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남북화해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문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국연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 신부의 석방을 촉구했다.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뀌어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엄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시설운영에 있어 최소한 '입·퇴소'의 자유만큼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강제노역에 투입되면서 경제적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내용의 각종 행정법률과 지침, 운용규정 등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내 인권유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국가에 기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양지마을만큼은 검찰과 법원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도 "현행 법률에 노예를 부러 치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폭행·협박 등을 통해 노동력을 강제 제공도록 한 만큼 강도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설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백종만(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 전북대 교수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의 목인 아래 '사회방위' 처차원과 경찰행정적 관점에서 수용자를 바라보는 데 있다"며 사회 다수의 그릇된 시각을 비판했다.

<인권하루소식> 98년 8월분 총목차(1179-119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79	8/1	1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경쟁 노력 없었다"/ 대구시민 "돈 살아",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
		2-3	98년 7월분 총목차(1157호-1178호)
1180	8/4	1	동포돕기 이적때도 비난 -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주민 반발 거세/ '열사 명예회복' 청신호, 범국민추진위 결성
		2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간인권흐름(7월 27일- 8월 2일)
1181	8/5	1	공권력은 치외법권? -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고리핵발전소 노동자 사망, 방사능 피폭 여부 우려
		2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안중에도 없는 가족 인권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물의/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98 양심수가 없는 나라'
1182	8/6	1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복지부 자료>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
		2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 도원동 철거민, 명드는 가슴/ "악이야? 독이야?" - 청년진보당, 공기업민영화 철회 촉구
1183	8/7	1	정리해고 속셈 탄 곳에 -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2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전북지역에서도 양심수 캠페인 전개/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3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만화사랑방> 준법서약제
1184	8/8	1	"노재중은 특수감도" -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경찰, 구사대 폭력방치/ 기독교계, 양심수 석방 촉구 - 미국·일본에서도 서한
		2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 인사들
1185	8/11	1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2	"수배조치 해제하라", 한총련 수배자 7명 조계사 농성 돌입/ 주간인권흐름(8월 3일 - 8월 9일)
		3	<하루감옥 체험기> 공시령 공시령 - 배유정(방송인)
1186	8/12	1	대인지뢰 위험 적신호, 폭우 속 지뢰 유실·주민 피해 발생/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 요구하자 시승시갑"
		2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1187	8/13	1	반인륜적 공공조차 중단촉구 -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평화와 인권연대,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 촉구 집회
		2	"공권력 투입, 할테면 해봐" -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결사투쟁 선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재판/ <국제인권소식> 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1188	8/14	1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 (끝) 국보법 7조부터
		2	<인터뷰> 박래군(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고민 컸다"/ <만화사랑방> 수해와 대인지뢰

〈인권하루소식〉 98년 8월분 총목차(1179-119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호외	8/14	1-3	〈8·15특사〉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백60명 사면 제외
1189	8/18	1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장기수 금재성 씨 운명, 보라매병원서 영결식
		2	공권력투입 방침, 울산 긴장고조 - 사회각계, 평화해결 촉구/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주간인권흐름(8월 10일- 8월 16일)
1190	8/19	1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 9월 김대중 대통령 면담 예정
		2	"헌정 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진보네트워킹센터, 시범서비스 실시/〈새로나온 책〉 『역감시의 권리로써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1191	8/20	1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2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건달징역' 황게 의혹도/버마, 인권활동가 국외추방/〈연설요약〉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인터뷰〉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대표 이영자 씨
1192	8/21	1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조직사건, 한민전 영남위원회-용공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2	보랏빛 수건, 다시 거리로-미석방 양심수 가족들, 배신감 표출/상륙수 가르쳤다고 파면-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만화사랑방〉 DJ의 양심
1193	8/22	1	"갈 곳 없는 세입자"-수원시 권선4지구, 강제철거/"정치인부터 교통분담을"-법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2	〈이달의 인권영화〉 「우리들의 사계」 / "교수임용제도 개혁하라"-서울대 학생회, 김민수 교수 재임용 촉구
1194	8/25	1	경찰, 정치사찰 의혹-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AI한국지부, 인권캠프 폐막 '인권의 현재적 의의를 찾아'/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2	경제위기, 인권의 위기-'IMF, 인권과 교회' 국제포럼 열려/민주노총, 노·정합의 이행 촉구/주간인권흐름(8월 17일-8월 23일)
		3	〈특별기고〉 "양심수에게 사면은 없다" - 김도형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195	8/26	1	집짜만 못한 재소자 정원 2배 수용, 환자 '교통' 호소/청소년 인권 다룬 고당 영화제 "우리이야기, 우리가 해요"
		2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1196	8/27	1	철거폭력업체 다윈, 또 활약-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인권대통령 자질미비"-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법국민서명운동 돌입-제발되진 · 실업대책 촉구
		2-3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한국)
1197	8/28	1	최근 대학생 8백여 명 연행-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국가보안법 괴물 처치해 주세요"-부산 · 울산 구속자 자녀 호소
		2-3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3주제: 냉전체제하의 양민학살의 실상(제주 4·3과 여순사건,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1198	8/29	1	문 신부 구속, 공안물이 의혹-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시설 수용자 보는 시각 바뀌어-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2-3	98년 8월분 총목차(1179호-1198호)

인권하루소식

98년 9월

(제1199호 - 제1220호)